
2024년도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4. 12.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I.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개요	1
II.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총괄)	11
III. 청렴체감도 평가 결과	15
IV. 청렴노력도 평가 결과	38
V. 부패실태 평가 결과	87
VI. 심층 분석	95
VII. 향후 계획	108

붙임 : 기관 유형별 종합청렴도 등급표

I .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개요

I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개요

1. 종합청렴도 평가 개요

□ 목적 및 근거

- 공공기관의 종합적인 청렴수준을 평가하여 부패취약 분야 개선 등 각급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지원하고 청렴인식과 문화 확산

〈 법적 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

제12조(기능)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 ①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사·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대상 기관

- (대상) 총 16개 유형, 716개 기관 발표
 -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①행정기관(중앙, 지방, 교육청)·공직유관단체, ②공공의료기관, ③지방의회로 구분하여 평가

합계 (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공공 의료	지방의회			
			광역	기초				Ⅰ (공기업)	Ⅱ (준정부)	Ⅲ (중점)	Ⅳ (지방 공사·공단)		광역	기초		
	Ⅰ (장관급)	Ⅱ (차관급)		Ⅰ (시)	Ⅱ (군)	Ⅲ (구)								Ⅰ (시)	Ⅱ (군)	Ⅲ (구)
716	25	21	17	75	82	69	17	32	55	33	34	13	17	75	82	69

※ 공공의료기관, 지방의회는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특화모형으로 별도 평가·분석

※ 평가대상 718개 기관 중 2개 기관(재외동포청·한전MCS)은 설문 유효표본 부족으로 미발표

□ 평가 체계

○ 청렴체감도(설문) + 청렴노력도(실적·설문) - 부패실태 평가(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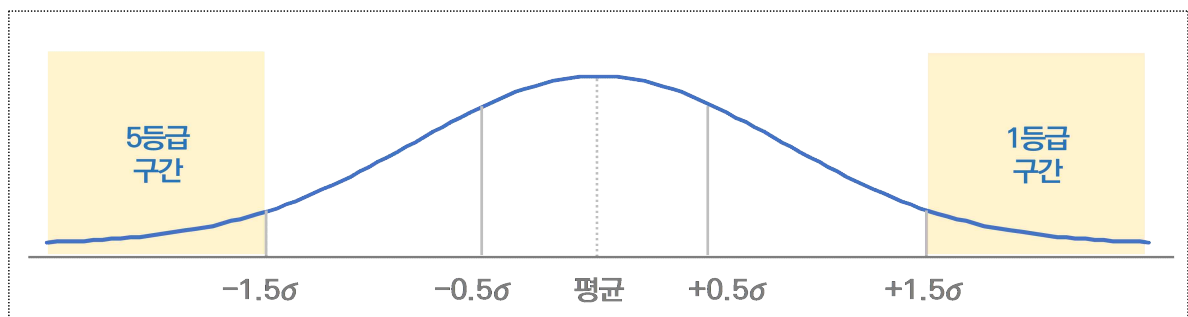
구분	주요 내용	방법
청렴체감도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업무 및 조직내부 운영 전반에 대해 민원인 등 업무 상대방·내부직원 대상 인식·경험 측정 ※ 측정항목 : 부패인식 7개(부정청탁, 특혜제공, 갑질행위, 사익추구 등), 부패경험 2개(경험, 빈도) ※ 조사대상 : 외부 민원인·업무경험자, 내부 구성원 등 약 21.6만명 	설문조사
청렴노력도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내부구성원 설문조사를 통한 시책효과성 체감 정도 평가 ※ 평가지표 : 반부패 시책 추진계획 수립, 기관장 관심과 노력, 공공재정 부정수급 점검, 시책효과성 등 12개 지표 	정량·정성평가, 설문조사
부패실태 (10% 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패행위 징계, 감사·기소·재판 결과 등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 ※ 정량(5점) : 부패행위자 직위, 부패금액, 기관규모, 사건 발생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산식에 따라 점수화 ※ 정성(5점) : 조직적·관행적 사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주요 사안에 대해 전문가 심의회를 통한 정성평가 	정량·정성평가

※ 신뢰도 저해행위 및 협조의무 미이행 시 총점에 감점으로 반영

□ 결과 산정

○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노력도 평가 결과를 1~5등급으로 구분

- 기관별 등급은 유형별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등급 구간을 산정 → 기관 총점에 따라 등급 부여



※ 단, 전체기관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적용한 등급구간에서 4등급 기준선 이상인 기관은 유형별 등급 산정 시 5등급이더라도 4등급으로 조정(종합청렴도 한정)하고, 표준편차로 인해 1등급선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등급선은 100점으로 함

2. 청렴체감도 평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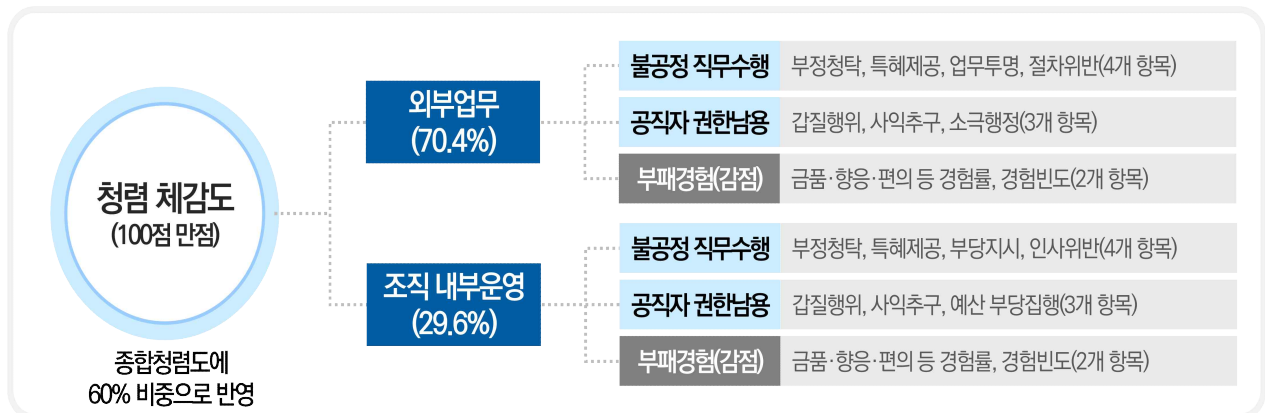
□ 개요

- 외부업무 및 조직내부 운영 전반에 대해 민원인 등 업무상대방·내부직원 대상 인식·경험 측정(설문조사)
- 연도별 시계열 분석을 위하여 설문의 큰 틀과 방향을 유지

□ 평가 모형

- 외부업무(민원인 등 업무상대방 대상)의 부패수준인 외부체감도(70.4%)와 내부 조직운영(내부직원 대상)의 부패수준인 내부체감도(29.6%)를 가중합산

※ 외부·내부체감도 및 설문 항목별 가중치는 전문가, 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의견조사(델파이기법)를 통해 산출



구분	내용
측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업무) 측정 대상 업무를 경험한 국민·공직자 등 업무 상대방 ▶ (조직 내부운영) 각급기관 소속 공직자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내부 업무별 응답자의 부패인식과 경험에 대해 설문조사 ※ (부패인식) 리커트 7점 척도 방식, (부패경험) 경험여부, 빈도에 대한 설문으로 구성
조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업무) 전화, 온라인(전자우편, 모바일) 조사 병행 ▶ (조직 내부운영) 온라인(전자우편, 모바일) 조사로만 측정

○ (외부) 부패인식 7개, 부패경험 2개 등 총 9개 항목으로 구성

- 외부 업무과정에 대한 부패인식 항목별 점수를 가중합산한 부패 인식 점수에 부패경험 점수를 감점(최대 15%)으로 반영하여 산출

※ 부패인식 4개 항목(부정청탁, 특혜제공, 갑질행위, 사익추구)과 부패경험 2개 항목(경험률, 빈도)은 외부·내부체감도 공통 항목

구분		설문항목	내용	가중치
부패 인식 (100%)	불공정한 직무수행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18.4%
		특혜제공	연고관계나 사적 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	17.4%
		업무투명	투명한 업무처리	12.7%
		절차위반	기준·절차를 위반한 업무처리	11.8%
	공직자의 권한남용	갑질행위	외부업무 과정에서의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	14.0%
		사익추구	외부업무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한 사익추구	16.0%
		소극행정	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	9.7%
부패 경험 (-15%)	청렴의무 위반	부패경험률	외부업무 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55.2%
		부패경험 빈도	외부업무 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빈도	44.8%

○ (내부) 부패인식 7개, 부패경험 2개 등 총 9개 항목으로 구성

- 내부 조직운영에 대한 부패인식 항목별 점수를 가중합산한 부패 인식 점수에 부패경험 점수를 감점(최대 15%)으로 반영하여 산출

※ 부패인식 4개 항목(부정청탁, 특혜제공, 갑질행위, 사익추구)과 부패경험 2개 항목(경험률, 빈도)은 외부·내부체감도 공통 항목

구분		설문항목	내용	가중치
부패 인식 (100%)	불공정한 직무수행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15.7%
		특혜제공	연고관계나 사적 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	14.9%
		부당지시	업무수행 상 위법하거나 공정성을 저해하는 업무지시	14.4%
		인사위반	인사업무의 기준·절차 위반	12.7%
	공직자의 권한남용	갑질행위	직무·직위·직책 등 영향력 행사를 통한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	13.2%
		사익추구	직무관련 영리행위 또는 직무관련 정보·직위를 이용한 사익추구	15.6%
		예산 부당집행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13.5%
부패 경험 (-15%)	청렴의무 위반	부패경험률	조직내부 운영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55.2%
		부패경험 빈도	조직내부 운영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빈도	44.8%

□ 평가 방법 (설문조사)

○ 설문 대상자 : 총 215,585명

구분	규모(명)	조사 대상
외부체감도	151,426	'23. 7. 1. ~ '24. 6. 30. 사이에 해당 공공기관의 측정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적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
내부체감도	64,159	'24. 6. 30. 기준 평가대상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

○ 조사 내용 : 최근 1년간* 부패인식과 부패경험 설문

* '23. 7. 1. ~ '24. 6. 30.

○ 조사 방법 : 전화, 온라인(이메일, 모바일)

○ 조사 기간 : '24. 8월 ~ 11월

○ 신뢰 수준 : 외부체감도 95%, ± 0.4 점/ 내부체감도 95%, ± 0.8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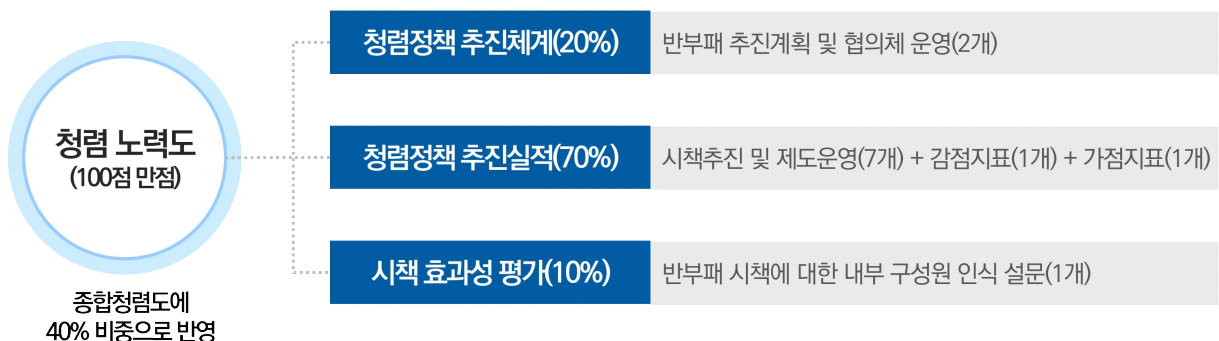
3. 청렴노력도 평가 개요

□ 개요

- 각급기관의 반부패 추진실적을 사전 설정된 지표를 통해 평가하여 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노력 촉진

□ 평가 모형

- 추진체계(2개), 추진실적(9개), 시책효과성(1개)으로 구성
 - (공통) 중앙행정기관(46개), 광역자치단체(17개), 교육청(17개), 공직유관단체(154개) 등 234개 기관은 전체지표(12개) 적용
 - (특화) 기초자치단체 226개 기관은 반부패 시책 추진 역량 등을 고려하여 총 10개 지표 적용
 - ※ 특화모형 적용기관은 10개 지표 총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
 - (별도) 공공의료기관(13개) 및 지방의회(243개)는 업무 특성 등을 반영하여 각각 별도의 지표(각 8개) 적용
 - ※ 단, 본 결과보고서에는 공공의료기관·지방의회 유형 통계는 제외



< 청렴노력도 지표 >

연번	구분	항목	특화지표 해당 여부	가중치
1	추진체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기반 마련	○	8%
2	추진실적	부패 취약분야 집중 개선	○	20%
3	추진체계	기관장(고위직 포함)의 관심과 노력도	○	12%
4	추진실적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	8%
5	추진실적	부패 유발요인 정비	○	10%
6	추진실적	공공재정 부정수급 기관별 자체점검 노력 제고	○	10%
7	추진실적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	×	7%
8	추진실적	부패방지 제도 구축	×	10%
9	추진실적	반부패 시책 사례 공유·확산	○	5%
10	추진실적	감점 지표(5) : 신고 관련 관리 및 조치, 신고자 보호	○	0 ~ -12.5점
11	추진실적	가점 지표(3) : 청렴컨설팅 추진 노력, 적극행정 구현 노력	○	0 ~ +1.5점
12	시책 효과성 평가	반부패 시책 내부 구성원 설문 결과(5) : 취약분야 개선, 기관장 노력, 청렴교육 이행, 신고자보호 노력, 갑질 개선노력	○	10%

※ 가중치는 전체 지표(100점 만점) 기준

□ 평가 방법

○ 기관이 제출한 추진 실적에 대해 외부 및 내부(소관 부서) 전문가
평가단이 서면평가

- 기관의 이의제기 및 검토, 국민권익위원회 현지점검 등을 통해
실적 확인 후 기관별 청렴노력도 점수 산출

※ 대상기간 : '23. 10. 1. ~ '24. 9. 30.

○ 일부 지표*는 설문조사와 통계자료(청렴체감도 결과) 활용

* 시책효과성 평가, 청렴컨설팅 참여 지표 등

4. 부패실태 평가

□ 개요

- 평가기간* 중 발생한 기관의 부패사건 현황을 점수화하여 평가에 반영
 - ※ 자세한 평가기준 및 방법은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각급 기관 공문 통보, '24. 5. 13.~16.)
 - * '23. 7월 ~ '24. 11월

□ 평가 기준

- (대상) 행정기관 공직자(정무직 포함)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부패사건
 - 징계(당연퇴직, 포상감경 불문경고 포함)가 이루어지거나, 감사·수사·재판 과정에서 부패행위(혐의)가 확인된 사건
- (유형) 반부패 법령* 관련 부패사건, 소극행정으로 인한 징계건, 기관장·고위직 직무관련 성 비위 사건 등
 - *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각급 기관별 행동강령 포함), 형법(특별법 포함) 등
- (범위) 기관의 자체적발 사건은 제외, 외부적발 사건만 반영
 - ※ 국민권익위원회, 공수처, 검·경찰, 감사원, 상급 감독기관, 언론 등 외부 적발

□ 평가 방법

- (정량) 부패행위자의 직위, 기관 총 부패금액, 기관 정원규모, 부패사건 발생시점* 등을 반영한 산식에 따라 정량평가(최대 5점)
 - * 3년 이내('22 ~ '24년) 발생한 사건은 가중,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감경 반영
- (정성) 주요 부패사건, 외부적발 부패사건 비율이 높은 기관 등에 대해서는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회를 통해 정성평가
 - ※ (주요 부패사건) 고위직이 연루되거나 조직적·관행적 부패로 언론·국회·감사 등 지적되거나 사회적 논란이 된 사안 등
 - (외부적발) 전체 부패사건이 일정 건수(5건) 이상, 외부 적발비율 50% 초과

5. 신뢰도 저해행위 등 제재 조치

□ 개요

- 종합청렴도 평가 과정에서 평가의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제재

※ 자세한 평가 기준 및 방법은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각급 기관 공문 통보, '24. 5. 13.~16.)

□ 제재 대상

- 설문 명부 누락·조작, 호의적 응답 유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체청렴도 가이드라인 위반, 실적자료의 제출 지연, 미제출, 허위·조작 제출 등

※ 대상기관 현지점검, 상시 제보 및 청렴체감도 설문조사 응답 등을 통해 적발

□ 제재 방법

- 전문가 심의회를 통해 제재 조치 필요성 및 정도(주의·경고, 감점 등) 심의·결정

II.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총괄)

II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총괄)

1. 총괄

□ 종합청렴도 점수 및 등급 현황

- (점수)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460개* 기관, 11개 유형 평균 종합 청렴도 80.3점, 청렴체감도 79.2점, 청렴노력도 83.5점

※ 공직(84.6점) > 교육청(83.4점) > 중앙(80.9점) > 광역(78.7점) > 기초(77.1점) 순

* 전체 대상기관(716개) 중 공공의료기관(13개), 지방의회(243개)는 별도 산정
< 기관 유형별 종합청렴도 및 각 영역별 점수 (점, 전년 대비) >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전체기관 (460개)	80.3 (▼0.2)	79.2 (▼0.8)	83.5 (▲1.3)
중앙행정기관 (46개)	80.9 (▲0.2)	81.1 (▲0.5)	82.8 (▲0.3)
광역자치단체 (17개)	78.7 (▲0.1)	77.5 (▲0.3)	83.0 (▲1.0)
기초자치단체 (226개)	77.1 (▲0.2)	75.6 (▼0.9)	81.1 (▲2.6)
교육청 (17개)	83.4 (▲1.3)	79.4 (-)	89.4 (▲0.5)
공직유관단체 (154개)	84.6 (-)	84.0 (▼0.3)	86.7 (▲0.8)

※ 공직유관단체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상승하였으나, 평균 점수가 높은 공직유관단체의 수가 전년 대비 감소(38개 기관)하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며 전체기관 종합청렴도 점수도 감소

- (등급)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은 18개(3.9%), 5등급 기관은 19개(4.1%)

※ 종합청렴도 최종등급은 종합청렴도에 한하여 기관 유형별 4등급 하한선이 전체 기관의 4등급 하한선보다 높은 경우 5등급 → 4등급 조정

□ 청렴체감도 및 청렴노력도 평가 결과

- (청렴체감도) 청렴체감도 79.2점, 외부체감도 86.9점, 내부체감도 60.8점

- 외부체감도 부패인식은 90.8점, 부패경험은 3.9점 감점(경험률 0.40%)
내부체감도 부패인식은 66.1점, 부패경험은 5.3점 감점(경험률 2.18%)

- 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84.0점)의 점수가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75.6점)가 가장 낮은 수준

※ 공직(84.0점) > 중앙(81.1점) > 교육청(79.4점) > 광역자치단체(77.5점) > 기초자치단체(75.6점) 순

○ (청렴노력도) 청렴노력도 평균은 **83.5점**

- 유형별로는 **교육청**(89.4점)의 점수가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81.1점)가 가장 낮은 수준

※ 교육청(89.4점) > 공직(86.7점) > 광역(83.0점) > 중앙(82.8점) > 기초자치단체(81.1점) 순

□ 부패실태 평가 (감점)

○ (전체) 부패실태 감점을 받은 기관은 **199개**(43.3%), 총 건수는 **490건**, 전체 평가대상 기관 감점 평균은 **0.6점**

○ (유형별) 감점 적용 부패사건 발생률은 **광역자치단체**(76.5%)가 가장 높고, **공직유관단체**(33.8%)가 가장 낮은 수준

※ 광역(76.5%) > 교육청(52.9%) > 중앙(52.2%) > 기초(44.7%) > 공직(33.8%) 순

- 감점 적용 기관당 평균 감점이 가장 많은 유형은 **중앙행정기관**(-1.5점)과 **기초자치단체**(-1.5점)이고, 가장 적은 유형은 **교육청**(-0.2점)

※ 감점 적용 기관당 평균 감점규모 기준 : 중앙·기초(-1.5점) > 공직(-1.4점) > 광역(-1.3점) > 교육청(-0.2점) 순

□ 신뢰도 저해행위 등 제재 조치 (감점)

○ (등급 하향) **1개** 기관(명부 미제출) 등급 하향 조정

○ (감점) 총 **19개** 제재 대상기관 평균 **-0.8점** 감점

- (유형) 명부 임의누락 등(8개), 자체청렴도 가이드라인 위반(2개), 호의적 답변 유도 등(2개), 노력도 실적 지연제출(7개)

○ (주의·경고) 고의성이 없거나 일정 수준 이하의 명부 단순누락 **21개** 기관 대상 주의·경고를 통해 유사행위 재발 방지

< 기관 유형별 1등급 기관 현황 >

(유형내 기관명은 가나다 순)

구분		종합청렴도 (18개)	청렴체감도 (18개)	청렴노력도 (12개)
중앙행정기관	중앙Ⅰ (장관급)	고용노동부(▲1등급) 기획재정부(▲1등급) 해양수산부(▲2등급)	금융위원회 (-)	-
	중앙Ⅱ (차관급)	-	농촌진흥청 (▲1등급) 통계청 (▲1등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
광역자치단체		경상남도(▲2등급) 서울특별시(▲2등급)	경상남도 (▲3등급) 서울특별시 (▲3등급)	-
기초자치단체	기초Ⅰ (시)	-	경남 김해시 (▲1등급) 전북 전주시 (▲1등급)	-
	기초Ⅱ (군)	경남 산청군(▲1등급) 대구 군위군(▲1등급) 전남 보성군(-) 전북 고창군(▲2등급) 충남 부여군(-)	부산 기장군 (-) 충남 예산군 (▲1등급) 충북 증평군 (▲2등급) 충북 진천군 (-)	경북 성주군 (▲1등급)
	기초Ⅲ (구)	대구 북구(▲1등급) 서울 광진구(-) 서울 구로구(-)	부산 수영구 (▲1등급) 인천 부평구 (▲1등급)	대구 북구 (-) 대전 서구 (▲1등급) 서울 관악구 (▲2등급) 서울 광진구 (-) 서울 구로구 (▲1등급) 서울 양천구 (▲1등급)
교육청		경남 교육청(▲1등급)	대구 교육청 (▲2등급)	경남 교육청 (▲1등급)
공직유관단체	공직Ⅰ (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1등급) 한국조폐공사(▲1등급)	한국수력원자력 (-)	-
	공직Ⅱ (준정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1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1등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 축산물품질평가원 (▲3등급)
	공직Ⅲ (중점)	-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1등급)
	공직Ⅳ (지방공사공단)	-	대전교통공사 (▲1등급) 인천교통공사 (▲2등급)	-

Ⅲ. 청렴체감도 평가 결과

III

청렴체감도 평가 결과

1. 청렴체감도 영역 전반

□ 공직유관단체의 청렴체감도가 가장 우수

- 청렴체감도는 79.2점으로 전년 대비 하락(전년 대비 -0.8점),
외부체감도 86.9점(전년 대비 -0.1점), 내부체감도 60.8점(전년 대비 -2.5점)
- (기관 유형별) 공직유관단체(84.0점)의 점수가 가장 높고, 기초자치
단체(75.6점)의 점수가 가장 낮음
※ 공직(84.0점) > 중앙(81.1점) > 교육청(79.4점) > 광역(77.5점) > 기초(75.6점)
- (전년 비교) 중앙행정기관(81.1점, 전년 대비 +0.5점)과 광역자치단체
(77.5점, 전년 대비 +0.3점)에서는 청렴체감도 점수가 전년 대비 상승
하였고, 기초자치단체(75.6점, 전년 대비 -0.9점)와 공직유관단체(84.0점,
전년 대비 -0.3점)는 청렴체감도 점수가 전년 대비 하락

< 기관 유형별 청렴체감도 및 각 영역별 점수 >

(단위 : 점, 괄호안은 전년대비 점수 변화 폭)

구분	청렴체감도	외부체감도	내부체감도
전체 (460개)	79.2 (▼0.8)	86.9 (▼0.1)	60.8 (▼2.5)
중앙행정기관 (46개)	81.1 (▲0.5)	87.8 (▲0.3)	66.1 (▲1.8)
광역자치단체 (17개)	77.5 (▲0.3)	83.0 (▲1.1)	64.3 (▼1.7)
기초자치단체 (226개)	75.6 (▼0.9)	84.2 (▲0.4)	55.0 (▼4.1)
교육청 (17개)	79.4 (-)	84.3 (▲0.9)	68.0 (▼1.9)
공직유관단체 (154개)	84.0 (▼0.3)	91.4 (▼0.1)	66.4 (▼0.9)

○ (외부체감도) 부패인식 점수는 90.8점(전년 대비 -0.1점)으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 부패경험률은 0.40%로 전년 대비 개선(-0.02%p)

- (인식) 업무투명(86.8점)·소극행정(88.0점) 항목이 취약, 사익추구(93.5점)·부정청탁(92.5점) 항목이 상대적 우수

※ (시계열) 전년 대비 하락폭이 가장 큰 항목은 부정청탁과 특혜제공(-0.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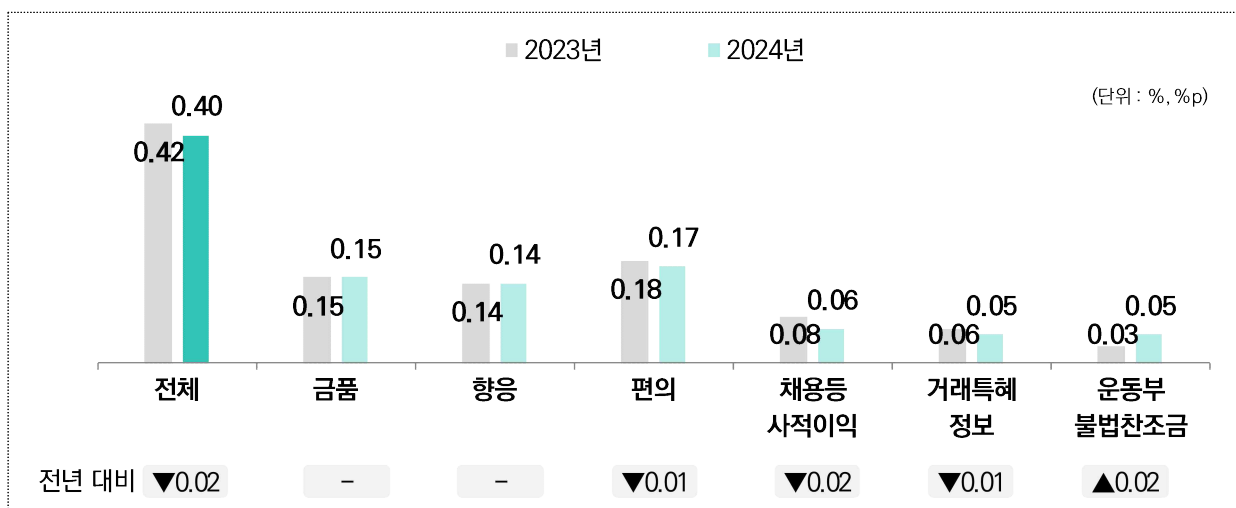
< 외부체감도 부패인식 측정 항목별 평균 점수 >

(단위 : 점)

구분	부패인식 합계	부정 청탁	특혜 제공	업무 투명	절차 위반	갑질 행위	사익 추구	소극 행정
'24년	90.8	<u>92.5</u>	90.7	<u>86.8</u>	90.8	91.5	<u>93.5</u>	<u>88.0</u>
'23년	90.9	92.7	90.9	86.8	90.8	91.6	93.5	88.1
비교	▼0.1	▼0.2	▼0.2	-	-	▼0.1	-	▼0.1

- (경험) 금품 등 경험률은 0.40%로 전년 대비 0.02%p 감소하였으며, '편의제공' 항목의 경험률(0.17%)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외부체감도 부패경험률 전년 대비 변화 정도 >



○ (내부체감도) 부패인식 점수 감소(66.1점, -2.5점), 부패경험률 악화(2.18%, +0.19%p)로 내부체감도 전년 대비 2.5점 감소

- (인식) 특혜제공(53.4점)·갑질행위(59.9점) 항목이 가장 취약, 사익추구(76.9점) 항목이 상대적으로 우수

※ (시계열) 전년 대비 하락폭이 가장 큰 항목은 인사위반(-3.4점)

< 내부체감도 부패인식 측정 항목별 평균 점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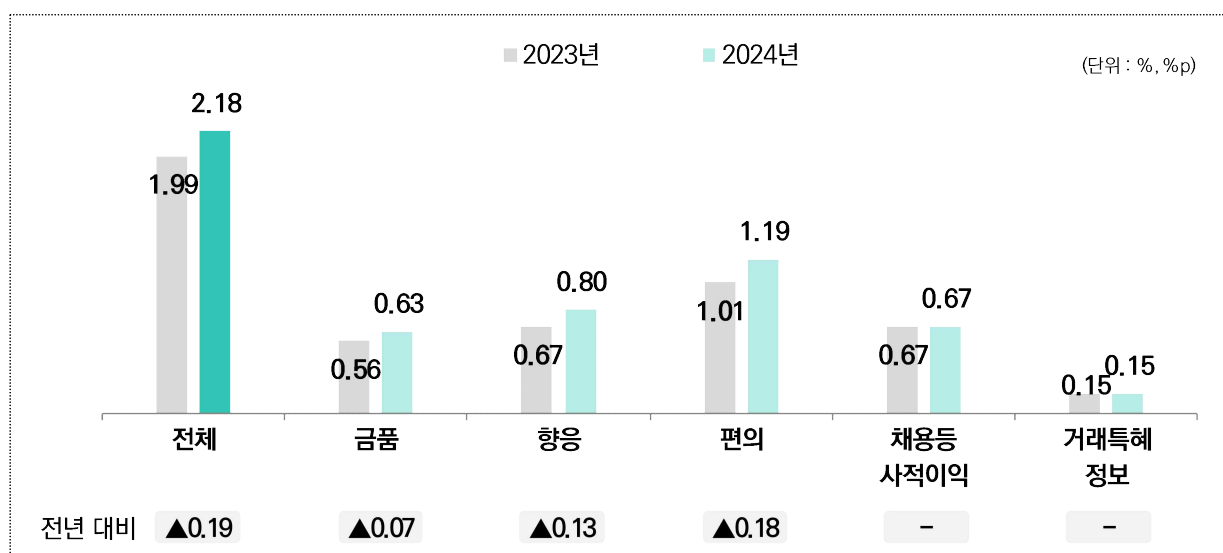
(단위 : 점)

구분	부패인식 합계	부정 청탁	특혜 제공	부당 지시	인사 위반	갑질 행위	사익 추구	예산 부당집행
'24년	66.1	67.5	<u>53.4</u>	68.7	61.1	<u>59.9</u>	<u>76.9</u>	73.7
'23년	68.6	70.3	<u>55.4</u>	71.4	64.5	<u>62.6</u>	<u>79.2</u>	75.8
비교	▼2.5	▼2.8	▼2.0	▼2.7	<u>▼3.4</u>	▼2.7	▼2.3	▼2.1

- (경험) 금품 등 부패경험률은 2.18%로 전년 대비 0.19%p 증가하였으며, '편의제공' 항목의 경험률(1.19%)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전년 대비 경험률이 가장 크게 악화된 항목 역시 편의(+0.18%p)

< 내부체감도 부패경험률 전년 대비 변화 정도 >



□ 기초자치단체와 공직유관단체에서 외부·내부체감도 가장 큰 차이

- 외부체감도와 내부체감도간 격차는 20점 이상의 큰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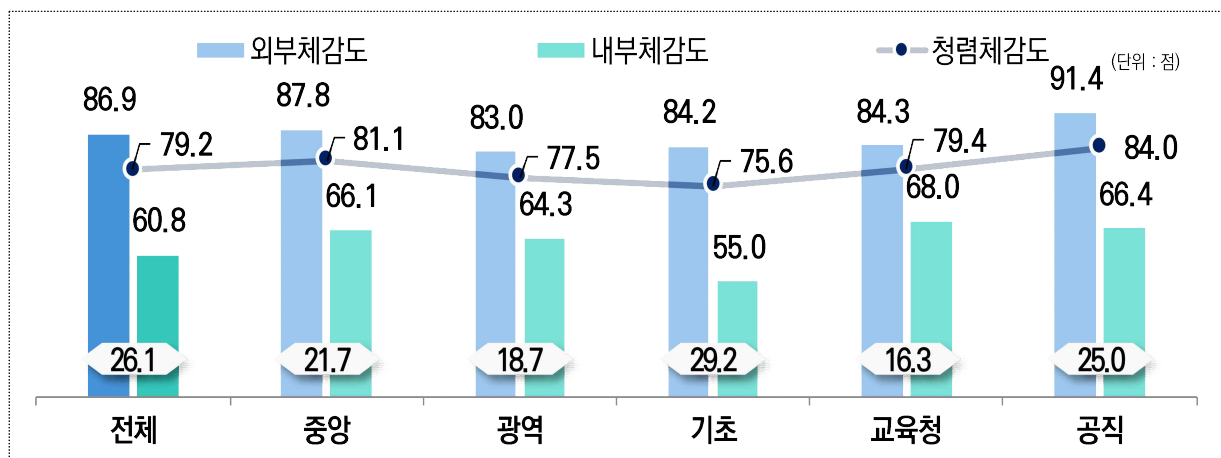
※ (격차) '23년 : 23.7점 → '24년 : 26.1점

- 외부체감도와 내부체감도의 점수 차이는 기초자치단체(29.2점)가 가장 크고, 교육청(16.3점)과 광역자치단체(18.7점)가 작은 편

※ 격차 : 기초(29.2점) > 공직(25.0점) > 중앙(21.7점) > 광역(18.7점) > 교육청(16.3점)

※ 다만, 교육청은 외부체감도에 부패경험률이 높은 운동부 운영 업무가 포함·측정되어 다른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외부체감도 점수가 낮은 경향 고려 필요(내부 측정 항목은 다른 유형과 동일)

< 기관 유형별 외부·내부 체감도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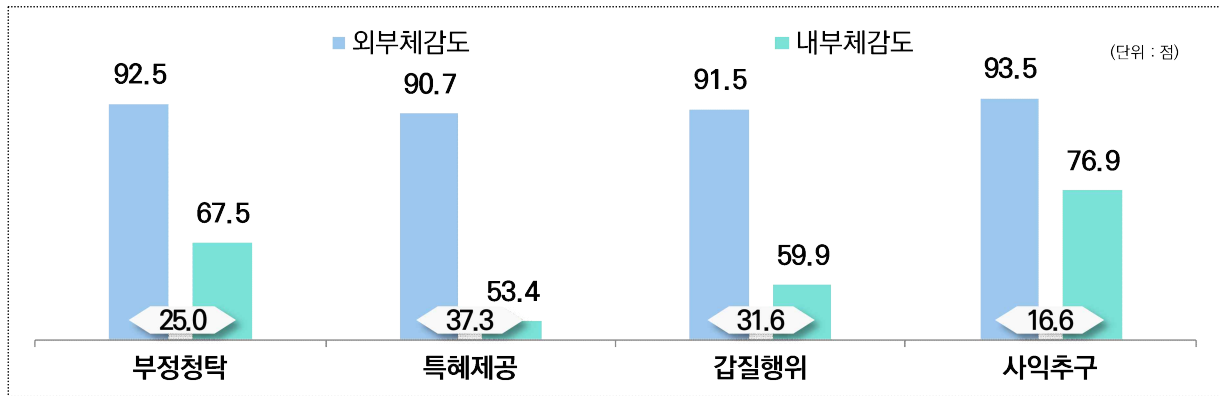
□ 외부·내부체감도 부패인식 공통항목 간 점수 격차는 다소 확대

- 외부·내부 공통항목(부정청탁, 특혜제공, 갑질행위, 사익추구)의 점수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외부의 부패인식 점수가 더 높으며, 내부 부패인식 점수의 전반적인 하락으로 그 격차는 다소 확대

- 항목별로 특혜제공(점수 격차 37.3점)에서 외부·내부 부패인식 점수 차이가 가장 크고, 사익추구(점수 격차 16.6점)가 가장 작음

※ 격차 : 특혜제공(37.3점) > 갑질행위(31.6점) > 부정청탁(25.0점) > 사익추구(16.6점)

< 외·내부 공통항목 부패인식 비교 >



□ 외부·내부체감도 간 부패경험률은 '채용 등 사적이익' 에서 가장 큰 격차

- 외부체감도의 부패경험률보다 내부체감도의 부패경험률이 약 5.5배 크게 나타나고, 모든 항목에서 내부체감도의 부패경험률이 더 높음

※ 외부·내부체감도의 측정영역·측정대상이 다르기에 직접적 비교는 한계가 있음

- 외부·내부간 가장 크게 차이나는 항목은 '채용 등 사적이익'으로 약 11.2배 차이이고, 가장 작게 차이나는 항목은 '거래특혜·미공개 정보'로 약 3배 차이

※ '운동부 불법찬조금'의 경우 교육청 유형의 외부체감도 항목으로만 측정하므로 비교대상에서 제외

< 외부·내부체감도간 부패경험률 차이 >

(단위 : %)

구분	부패 경험률	금품	향응	편의	채무면제· 채용청탁 등 사적이익	거래특혜· 미공개 정보	운동부 불법찬조금
외부	0.40	0.15	0.14	0.17	0.06	0.05	0.05
내부	2.18	0.63	0.80	1.19	0.67	0.15	-
차이	5.5배	4.2배	5.7배	7.0배	11.2배	3.0배	-

2. 외부체감도 평가 결과

(1) 외부체감도 전반

□ 외부체감도 전체 평균은 86.9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 (-0.1점)

- 민원인 등 업무상대방을 대상으로 측정한 외부체감도의 부패인식은 90.8점, 부패경험 감점(최대 15점 감점)은 3.9점
- 부패인식의 모든 항목이 전년과 동일하거나 소폭 하락한 수준, 부패경험률 소폭 감소했으나 부패경험 감점은 전년과 동일
 - (인식) 사익추구(93.5점, 전년과 동일), 부정청탁(92.5점, 전년 대비 -0.2점) 항목의 점수는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업무투명(86.8점, 전년과 동일), 소극행정(88.0점, 전년 대비 -0.1점) 항목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취약
 - (경험) 민원인이 경험한 금품 등 경험률은 0.40%로 전년(0.42%)보다 소폭 감소, 평균 경험빈도는 0.010회로 전년(0.009회)보다 소폭 증가

< 외부체감도 항목별 점수 >

(단위 : 점)

부문	항목 (가중치)	'23	'24	차이 ('24-'23)
외부체감도 점수		87.0	86.9	-0.1
	부패 인식	90.9	90.8	-0.1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0.184)	92.7	<u>92.5</u>	-0.2
	연고관계나 사적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 (0.174)	90.9	90.7	-0.2
	투명한 업무처리 (0.127)	86.8	86.8	-
	기준·절차를 위반한 업무처리 (0.118)	90.8	90.8	-
	외부업무 과정에서의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 (0.140)	91.6	91.5	-0.1
	외부업무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행위나 방법을 통한 사익추구 (0.160)	93.5	93.5	-
	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 (0.097)	88.1	88.0	-0.1
	부패 경험 감점 (최대 15점)	-3.9	-3.9	-
	외부 업무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0.552)	72.7	73.0	+0.3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빈도 (0.448)	75.3	75.1	-0.2

□ 광역자치단체의 외부체감도 가장 큰 폭으로 상승

- (기관 유형별) 공직유관단체(91.4점, 전년 대비 -0.1점)의 외부체감도가 가장 높고, 광역자치단체(83.0점, 전년 대비 +1.1점)가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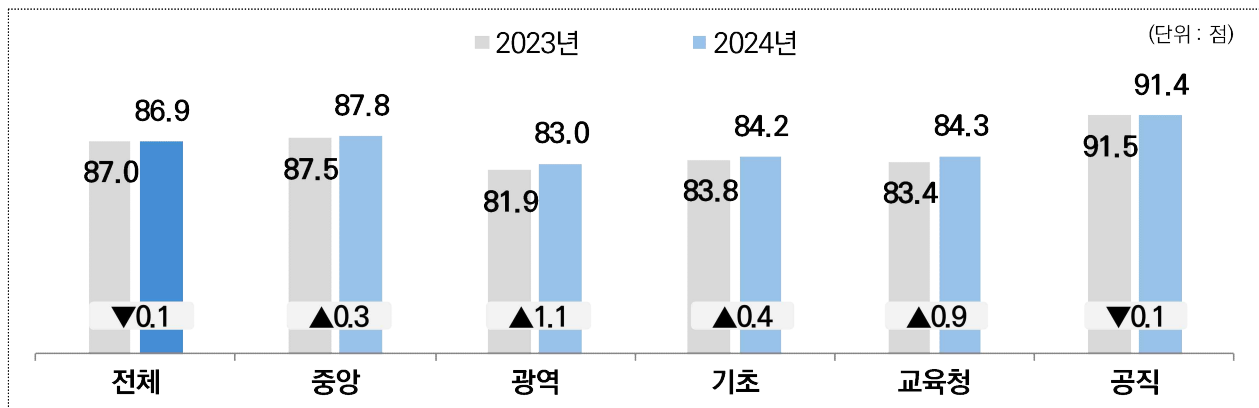
< 기관 유형별 외부체감도 항목별 점수 >

(단위 : 점)

구분	외부체감도	부패인식	부패경험
전체 (460개)	86.9 (▼0.1)	90.8 (▼0.1)	-3.9 (-)
중앙행정기관 (46개)	87.8 (▲0.3)	90.5 (▲0.4)	-2.7 (▼0.1)
광역자치단체 (17개)	83.0 (▲1.1)	90.1 (▲0.8)	-7.1 (▲0.3)
기초자치단체 (226개)	84.2 (▲0.4)	89.1 (-)	-4.8 (▲0.5)
교육청 (17개)	84.3 (▲0.9)	92.5 (▲0.8)	-8.3 (▼0.1)
공직유관단체 (154개)	91.4 (▼0.1)	93.5 (▲0.1)	-2.1 (▼0.2)

- (시계열) 기관 유형별로 공직유관단체(91.4점, 전년 대비 -0.1점)를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전년 대비 외부체감도 점수가 상승하였으며, 상승폭이 가장 큰 유형은 광역자치단체(83.0점, 전년 대비 +1.1점)

< 기관 유형별 외부체감도 점수 >



(2) 외부체감도 부패인식

□ 외부체감도 부패인식은 90.8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 (-0.1점)

- (측정 항목별) 사익추구(93.5점, 전년과 동일)의 점수가 가장 높고, 업무투명(86.8점, 전년과 동일)이 가장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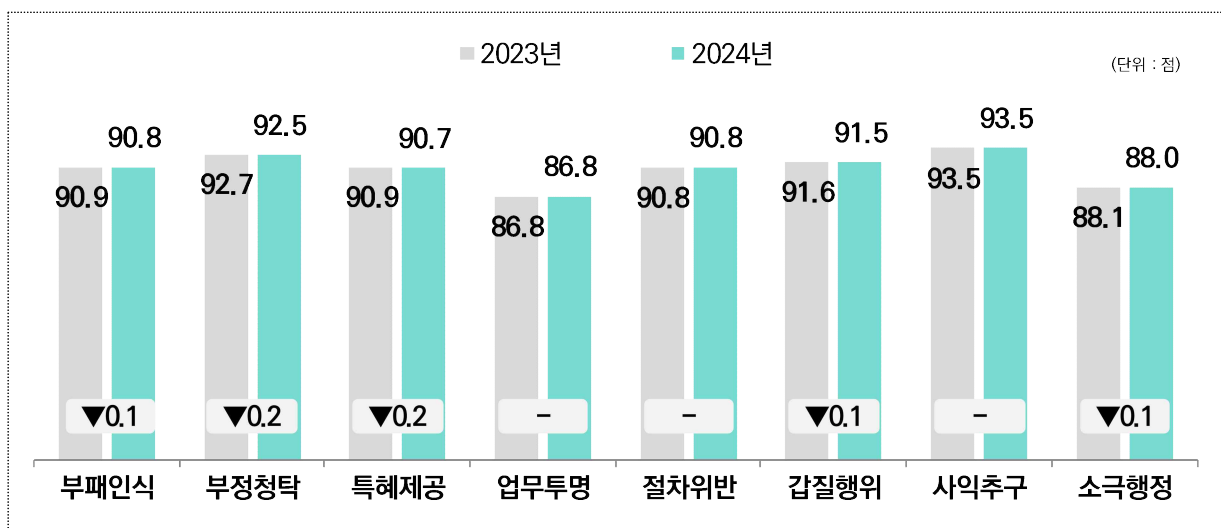
< 외부체감도 부패인식 측정 항목별 평균 점수 >

(단위 : 점)

구분	부패인식 합계	부정 청탁	특혜 제공	업무 투명	절차 위반	갑질 행위	사익 추구	소극 행정
'24년	90.8	92.5	90.7	<u>86.8</u>	90.8	91.5	<u>93.5</u>	88.0
'23년	90.9	92.7	90.9	86.8	90.8	91.6	93.5	88.1
비교	▼0.1	▼0.2	▼0.2	-	-	▼0.1	-	▼0.1

- (시계열) 모든 항목에서 전년 대비 부패인식 점수가 동일하거나 하락 하였으며, 하락 폭이 가장 큰 항목은 부정청탁(92.5점, 전년 대비 -0.2점)과 특혜제공(90.7점, 전년 대비 -0.2점)

< 외부체감도 부패인식 항목별 점수 >



□ 40대의 부패인식 점수가 가장 높음

- (연령별) 부패인식 측정 항목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40대의 점수가 92.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은 88.6점으로 가장 낮음
 - 전체의 평균 부패인식 점수가 90.8점임을 고려할 경우, 20~50대에서의 부패인식이 60대 이상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측정 항목별) 연령별 - 측정 항목별 교차 분석 결과, 40대에서 인식하는 사익추구 항목의 점수(94.8점)가 가장 높고, 20대에서 인식하는 업무투명 항목의 점수(84.2점)가 가장 낮게 나타남
 - 한편, 모든 연령대에서 사익추구(직무관련 미공개 정보 등을 활용한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 항목이 가장 높은 결과를 보임

< 연령별 외부체감도 부패인식 항목별 점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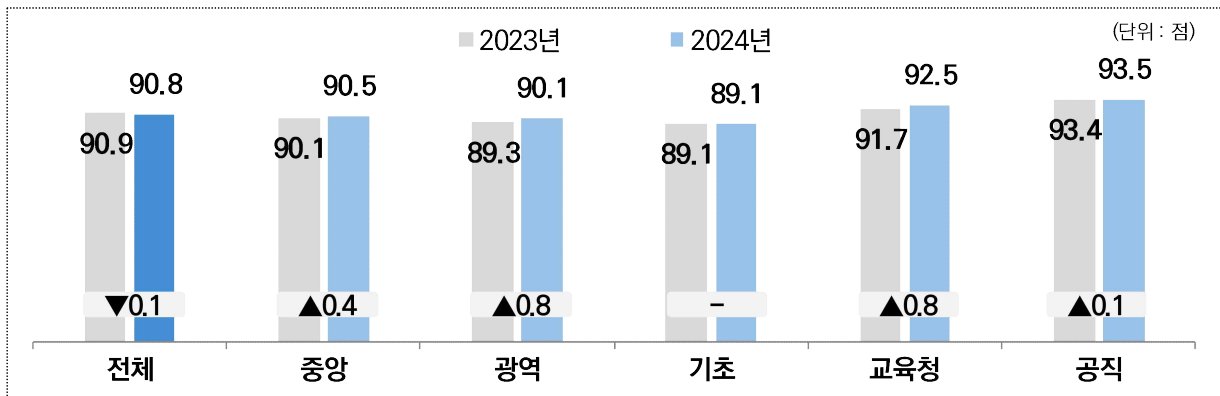
(단위 : 점)

구분	부패인식 합계	부정 청탁	특혜 제공	업무 투명	절차 위반	갑질 행위	사익 추구	소극 행정
전체	90.8	92.5	90.7	86.8	90.8	91.5	93.5	88.0
20대	91.1	93.2	92.3	<u>84.2</u>	89.6	92.4	94.0	88.8
30대	91.8	93.6	92.5	86.6	91.4	92.1	94.3	89.2
40대	<u>92.6</u>	94.0	92.6	89.0	92.6	93.0	<u>94.8</u>	90.5
50대	91.8	93.1	91.2	88.7	92.1	92.4	94.3	89.5
60대 이상	<u>88.6</u>	90.7	87.9	84.7	88.2	89.6	92.1	84.8

□ 공직유관단체의 부패인식 점수가 가장 우수

- (기관 유형별) 공직유관단체(93.5점, 전년 대비 +0.1점)의 부패인식 점수가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89.1점, 전년과 동일)가 가장 낮은 수준
- (시계열) 전년 대비 광역자치단체(90.1점, 전년 대비 +0.8점), 교육청(92.5점, 전년 대비 +0.8점)에서의 상승 폭이 큼

< 기관 유형별 외부체감도 부패인식 점수 >



- (측정 항목별) 업무투명은 모든 기관 유형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 사익추구 항목은 모든 기관 유형에서 가장 우수

< 기관 유형별 외부체감도 부패인식 항목별 점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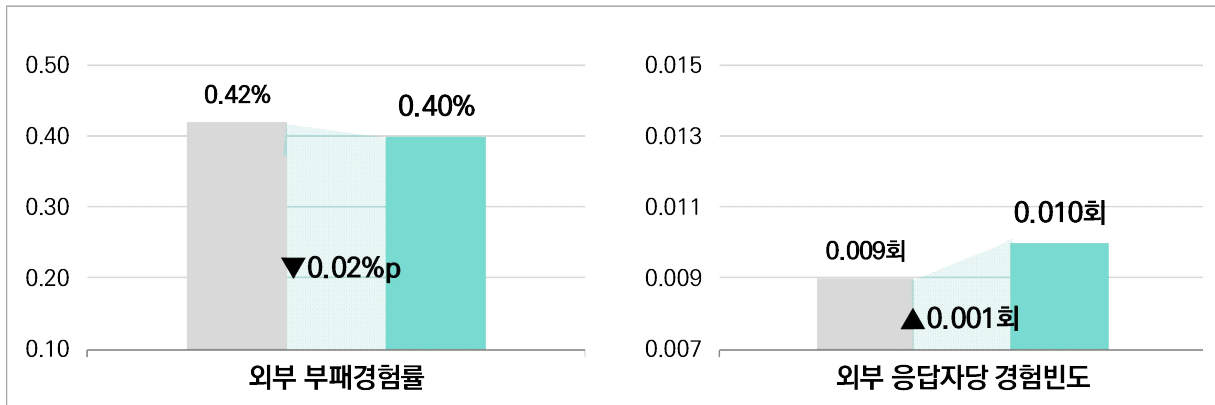
(단위: 점)

구분	부패인식 합계	부정 청탁	특혜 제공	업무 투명	절차 위반	갑질 행위	사익 추구	소극 행정
전체	90.8	92.5	90.7	86.8	90.8	91.5	93.5	88.0
중앙	90.5	92.8	91.6	84.2	90.0	90.7	93.6	87.3
광역	90.1	92.1	90.0	86.3	89.8	90.0	93.2	86.6
기초	89.1	90.7	88.4	85.4	89.3	89.8	92.0	85.9
교육청	92.5	94.2	91.7	88.6	92.2	93.2	95.3	90.8
공직	93.5	95.1	93.8	89.3	93.0	94.1	95.7	91.2

(3) 외부체감도 부패경험

□ 외부체감도 부패경험률은 소폭 감소 (-0.02%p)

- 민원인 등 업무상대방이 경험한 부패경험률은 0.40%로 전년(0.42%)보다 감소, 평균 경험빈도는 0.010회로 전년(0.009회)보다 소폭 증가



- (기관 유형별) 부패경험률은 교육청(0.69%, 전년 대비 +0.04%p)에서 가장 높고, 공직유관단체(0.18%, 전년과 동일)가 가장 낮음

< 참고 1 > 교육청, 운동부 운영 측정업무의 '운동부 불법찬조금' 경험률

- 교육청의 부패경험률(0.69%)은 전체기관 평균(0.40%)보다 높은 수준
 - 이는 교육청에 부패경험률이 높은 업무인 운동부 운영(2.67%) 측정 업무가 포함·측정되는 것의 영향이 큼

※ '운동부 불법찬조금' 부패유형은 교육청 운동부 운영 업무 민원인 응답자에게만 부패경험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항목

(단위 : %)

구분	부패 경험률	금품	향응	편의	채무면제 ·채용청탁 등 사적이익	거래특혜 ·미공개 정보	운동부 불법찬조금
전체	0.40	0.15	0.14	0.17	0.06	0.05	0.05
교육청	0.69	0.20	0.11	0.16	0.07	0.02	0.46
운동부 운영 업무	2.67	0.65	0.31	0.19	0.11	0.04	2.67

- 모든 유형에서 부패경험률은 전년과 동일하거나 소폭 감소

< 기관 유형별 외부체감도 부패경험 >

(단위 : %, 회, 괄호안은 전년대비 변화 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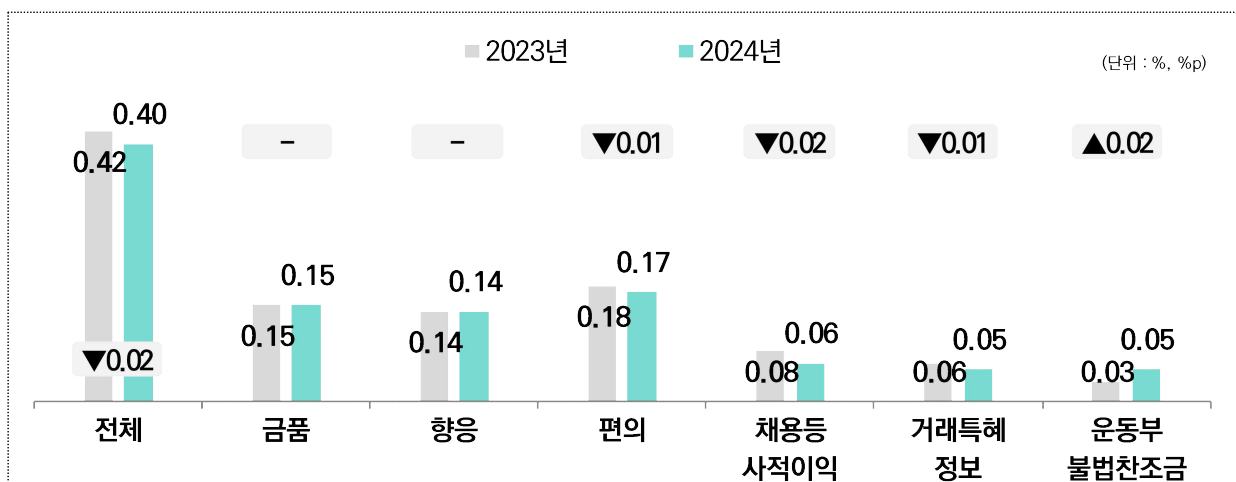
분류	경험률	경험빈도
전체 (460개)	0.40 (▼0.02%p)	0.010 (▲0.001)
중앙행정기관 (46개)	0.25 (▼0.04%p)	0.007 (-)
광역자치단체 (17개)	0.68 (-)	0.014 (▼0.001)
기초자치단체 (226개)	0.46 (▼0.05%p)	0.011 (-)
교육청 (17개)	0.69 (▼0.04%p)	0.020 (▲0.003)
공직유관단체 (154개)	0.18 (-)	0.005 (▲0.001)

□ ‘금품·향응·편의’ 전통적인 유형에서 부패경험률이 높음

- (경험 유형별) 부패경험을 측정하는 6가지 항목 중, 금품·향응·편의 경험률이 0.1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시계열) 모든 부패경험 항목 중에서 유일하게 ‘운동부 불법찬조금’ 유형에서 부패경험이 0.02%p 증가함

※ 교육청, 운동부 불법찬조금 경험률 : '23년, 0.03% → '24년, 0.05%

< 전년대비 부패경험률 변동 추이 >



- (기관 유형별) 교육청의 편의(0.16%, 전년 대비 -0.1%p) 경험률은 전년 대비 가장 많이 하락하였고, 광역자치단체의 사적이익(0.14%, 전년 대비 +0.07%p) 에서 경험률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상승

< 기관 유형별 외부채감도 부패경험률 >

(단위 : %)

구분	부패 경험률	금품	향응	편의	채무면제· 채용청탁 등 사적이익	거래특혜· 미공개정보	운동부 불법찬조금
전체	0.40	0.15	0.14	0.17	0.06	0.05	0.05
중앙	0.25	0.05	0.09	0.19	0.03	0.01	0.00
광역	0.68	0.24	0.24	0.32	0.14	0.08	0.00
기초	0.46	0.20	0.19	0.19	0.07	0.09	0.00
교육청	0.69	0.20	0.11	0.16	0.07	0.02	0.46
공직	0.18	0.07	0.07	0.08	0.04	0.02	0.00

□ 부패경험자의 평균 경험 빈도는 연간 약 2.49회

- 외부채감도 응답자 1인당 경험빈도는 0.010회(전년 대비 0.001회 증가), 부패경험자의 1인당 경험빈도는 2.49회(전년 대비 +0.29회), 1인당 경험규모는 161.58만원(전년 대비 16.15만원 증가)

< 기관 유형별 외부채감도 부패경험 빈도 및 규모 >

구분	부패 경험률 (%)	부패 경험총빈도 (회)	부패 경험자수 (명)	응답자 1인당 경험빈도 (회)	부패경험자	
					경험자 1인당 경험빈도 (회)	경험자 1인당 경험규모 (만원)
전체	0.40 (▼0.02)	1518.5 (▲52.5)	611 (▼56)	0.010 (▲0.001)	2.49 (▲0.29)	161.58 (▲16.15)
중앙	0.25 (▼0.04)	106.0 (▼16.5)	41 (▼11)	0.007 (-)	2.59 (▲0.23)	170.85 (▲3.58)
광역	0.68 (-)	138.0 (▼1.5)	66 (▲2)	0.014 (▼0.001)	2.09 (▼0.09)	162.88 (▼12.98)
기초	0.46 (▼0.05)	777.0 (▼10.5)	330 (▼37)	0.011 (-)	2.35 (▲0.20)	195.44 (▲50.91)
교육청	0.69 (▼0.04)	299.0 (▲55.0)	105 (▲2)	0.020 (▲0.003)	2.85 (▲0.48)	85.45 (▼48.88)
공직	0.18 (-)	198.5 (▲26.0)	69 (▼12)	0.005 (▲0.001)	2.88 (▲0.75)	117.90 (▼7.62)

3. 내부체감도 평가 결과

(1) 내부체감도 전반

□ 내부체감도 전체 평균은 60.8점으로 전년 대비 2.5점 하락

- 기관 내부구성원을 대상으로 측정한 내부체감도의 부패인식 점수는 66.1점, 부패경험은 5.3점 감점(최대 15점 감점)
- 부패인식 모든 항목이 전년 대비 하락, 부패경험 감점은 전년과 동일
 - (인식) 특혜제공(53.4점, 전년 대비 -2.0점), 갑질행위(59.9점, 전년 대비 -2.7점), 인사위반(61.1점, 전년 대비 -3.4점) 항목이 낮음
 - (경험) 내부 구성원이 경험한 금품 등 경험률은 2.18%로 전년(1.99%) 대비 증가, 평균 경험빈도도 0.052회로 전년(0.048회) 대비 증가

< 내부체감도 항목별 점수 >

(단위 : 점)

부문	항목(가중치)	'23	'24	차이 ('24-'23)
내부체감도 점수		63.3	60.8	-2.5
부패 인식	부패 인식	68.6	66.1	-2.5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0.157)	70.3	67.5	-2.8
	연고관계나 사적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 (0.149)	55.4	53.4	-2.0
	업무수행상 위법하거나 공정성을 저해하는 업무지시 (0.144)	71.4	68.7	-2.7
	인사업무의 기준·절차 위반 (0.127)	64.5	61.1	-3.4
	직무·직위·직책 등 영향력 행사를 통한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 (0.132)	62.6	59.9	-2.7
	직무관련 영리행위 또는 직무관련 정보나 직위를 이용한 사익추구 (0.156)	79.2	76.9	-2.3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0.135)	75.8	73.7	-2.1
	부패 경험 감점 (최대 15점)	-5.3	-5.3	-
부패 경험	조직내부 운영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0.552)	63.5	62.9	-0.6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빈도 (0.448)	66.7	67.1	+0.4

□ 중앙행정기관 외 모든 유형 내부체감도 하락

- 유형별로 내부체감도 점수는 교육청(68.0점, 전년 대비 -1.9점)의 점수가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55.0점, 전년 대비 -4.1점)가 가장 낮음

< 기관 유형별 내부체감도 항목별 점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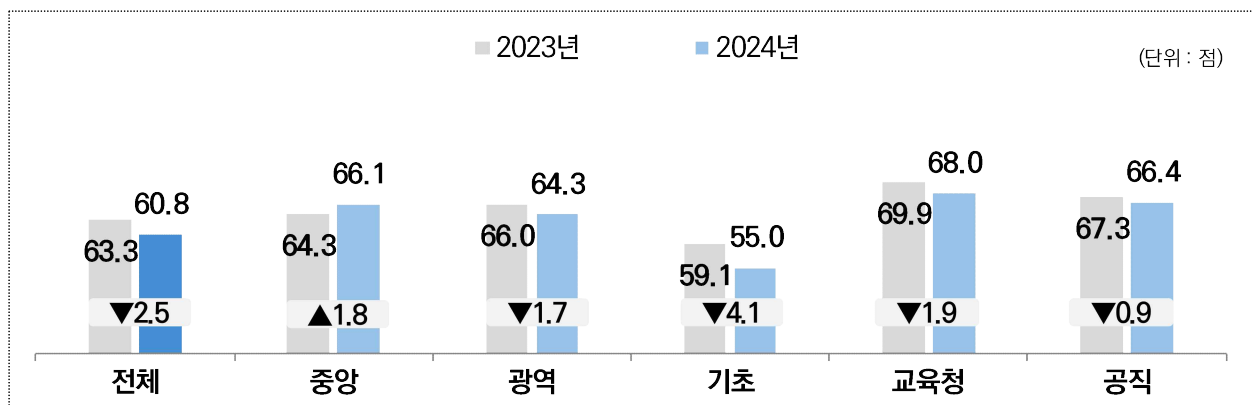
(단위 : 점)

구분	내부체감도	부패인식	부패경험
전체 (460개)	60.8 (▼2.5)	66.1 (▼2.5)	-5.3 (-)
중앙행정기관 (46개)	66.1 (▲1.8)	69.5 (▼0.2)	-3.4 (▲2.1)
광역자치단체 (17개)	64.3 (▼1.7)	68.1 (▼2.1)	-3.8 (▲0.5)
기초자치단체 (226개)	55.0 (▼4.1)	61.8 (▼3.3)	-6.7 (▼0.7)
교육청 (17개)	68.0 (▼1.9)	71.2 (▼2.0)	-3.3 (-)
공직유관단체 (154개)	66.4 (▼0.9)	70.5 (▼1.4)	-4.1 (▲0.5)

-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 유형에서 전년 대비 하락

-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기관 유형은 기초자치단체(-4.1점)

< 기관 유형별 내부체감도 점수 >



(2) 내부체감도 부패인식

□ 내부체감도 부패인식은 66.1점으로 모든 항목에서 하락

- (측정 항목별) 사익추구(76.9점, 전년 대비 -2.3점)의 점수가 가장 높고, 특혜제공(53.4점, 전년 대비 -2.0점)이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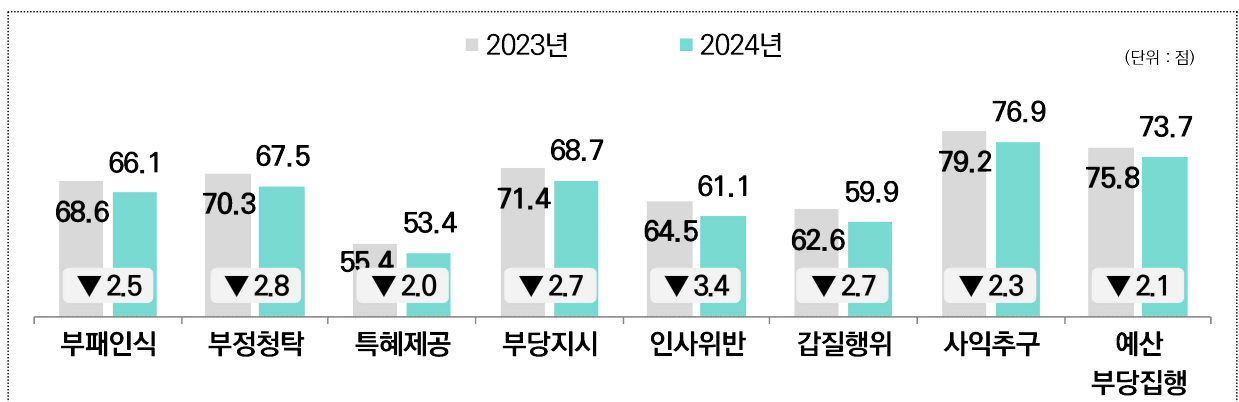
< 내부체감도 부패인식 측정 항목별 평균 점수 >

(단위 : 점)

구분	부패인식 합계	부정 청탁	특혜 제공	부당 지시	인사 위반	갑질 행위	사익 추구	예산 부당집행
'24년	66.1	67.5	53.4	68.7	61.1	59.9	76.9	73.7
'23년	68.6	70.3	55.4	71.4	64.5	62.6	79.2	75.8
비교	▼2.5	▼2.8	▼2.0	▼2.7	▼3.4	▼2.7	▼2.3	▼2.1

- (시계열) 인사위반(61.1점, 전년 대비 -3.4점), 부정청탁(67.5점, 전년 대비 -2.8점), 부당지시(68.7점, 전년 대비 -2.7점), 갑질행위(59.9점, 전년 대비 -2.7점) 항목에서 큰 폭으로 하락

< 내부체감도 부패인식 항목별 점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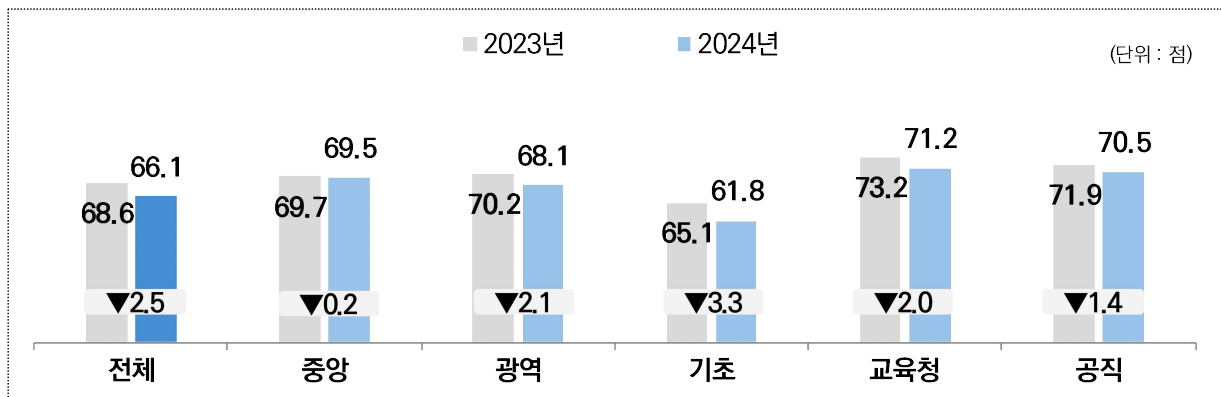
□ 모든 기관 유형에서 '특혜제공' 항목이 가장 취약

- (기관 유형별) 교육청(71.2점, 전년 대비 -2.0점)의 점수가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61.8점, 전년 대비 -3.3점)가 가장 낮은 수준

※ 교육청(71.2점) > 공직(70.5점) > 중앙(69.5점) > 광역(68.1점) > 기초(61.8점)

- (시계열) 모든 유형에서 전년 대비 부패인식 점수가 하락하였으며, 하락 폭이 가장 큰 유형은 기초자치단체(61.8점, 전년 대비 -3.3점)

< 기관 유형별 내부체감도 부패인식 점수 >



- (측정 항목별) '특혜제공' 은 모든 기관 유형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사익추구' 항목은 모든 기관 유형에서 상위

< 기관 유형별 내부체감도 부패인식 점수 >

(단위: 점)

구분	부패인식 합계	부정 청탁	특혜 제공	부당 지시	인사 위반	갑질 행위	사익 추구	예산 부당 집행
전체	66.1	67.5	<u>53.4</u>	68.7	61.1	59.9	<u>76.9</u>	73.7
중앙	69.5	73.4	<u>56.9</u>	72.1	63.6	61.9	<u>80.2</u>	76.6
광역	68.1	69.8	<u>55.5</u>	70.1	63.9	62.2	<u>78.4</u>	75.8
기초	61.8	61.5	<u>48.2</u>	64.5	55.8	56.4	<u>73.7</u>	71.1
교육청	71.2	72.3	<u>59.4</u>	73.3	69.5	62.8	<u>81.3</u>	79.0
공직	70.5	73.7	<u>59.0</u>	73.0	66.8	63.7	<u>80.2</u>	75.9

□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부패인식 점수가 낮음

- (근무기간별) 부패인식 측정 항목을 근무기간별로 분석한 결과,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부패인식 점수가 낮음
 - 근무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부패인식 점수가 가장 낮으며, 이는 부패인식 전체 평균(66.1점)보다 낮음
- (측정 항목별) 근무기간별 - 측정 항목별 교차 분석 결과, 근무기간 10년 이하에서의 '특혜제공' 항목이 51.6점으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모든 연차에서 공통적으로 '특혜제공'의 인식이 가장 낮고, 두 번째로 인식이 낮은 항목은 저연차(근무기간 20년 이하)인 경우 '갑질행위', 고연차(근무기간 20년 초과)인 경우 '인사위반'

< 근무기간별 내부체감도 부패인식 항목별 점수 >

(단위 : 점)

근무 기간별	부패인식 합계	부정 청탁	특혜 제공	부당 지시	인사 위반	갑질 행위	사익 추구	예산 부당 집행
전체	66.1	67.5	53.4	68.7	61.1	59.9	76.9	73.7
31년 이상	74.9	74.6	<u>63.2</u>	78.4	<u>67.7</u>	74.2	83.8	81.9
21~30년	72.2	72.4	<u>59.8</u>	75.4	<u>66.3</u>	69.8	81.4	79.7
11~20년	67.0	68.1	<u>53.8</u>	69.7	61.8	<u>61.6</u>	77.7	75.2
10년 이하	64.4	66.6	<u>51.6</u>	66.7	60.5	<u>56.1</u>	75.8	71.9

□ 하위직에서의 특혜제공, 갑질행위에 대한 부패인식 저조

- (직급별) 부패인식 측정 항목을 직급별로 분석한 결과, 관리직의 부패인식 점수가 77.5점으로 가장 높음
 - 직급이 낮아질수록 부패인식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으로, 하위직의 부패인식 점수가 가장 낮음
- (측정 항목별) 직급별 - 측정 항목별 교차 분석 결과, 중간직과 하위직에서 '특혜제공'이 매우 취약
 - 부패인식 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은 관리직의 '사익추구(85.5점)'와 '예산 부당집행(83.4점)'

< 직급별 내부체감도 부패인식 항목별 점수 >

(단위 : 점)

직급별	부패인식 합계	부정 청탁	특혜 제공	부당 지시	인사 위반	갑질 행위	사익 추구	예산 부당 집행
전체	66.1	67.5	53.4	68.7	61.1	59.9	76.9	73.7
관리직	77.5	76.7	67.2	80.3	71.7	76.8	85.5	83.4
중간직	69.7	69.5	57.2	72.6	62.7	67.4	79.8	78.2
하위직	65.4	67.3	52.4	67.9	60.5	58.0	76.8	73.3
기타(공무직 등)	67.2	69.2	54.8	69.8	66.3	59.7	76.7	73.0

(3) 내부체감도 부패경험

□ 내부체감도 부패경험률은 전년 대비 증가

- 기관 내부 구성원이 경험한 부패경험률은 2.18%로 전년(1.99%)보다 증가했으며, 경험빈도 또한 0.052회로 전년(0.048회)보다 증가
- (기관 유형별) 부패경험률은 기초자치단체(2.97%)에서 가장 높고, 중앙행정기관(1.34%)에서 가장 낮음
 - 중앙행정기관(1.34%, 전년 대비 -0.63%p), 공직유관단체(1.75%, 전년 대비 -0.03%p)의 부패경험률이 전년 대비 감소, 그 외 유형은 증가

< 기관 유형별 내부체감도 부패경험 >

(단위 : %, 회, 괄호안은 전년대비 경험률 변화 폭)

분류	경험률	경험빈도
전체 (460개)	2.18 (▲0.19%p)	0.052 (▲0.004)
중앙행정기관 (46개)	1.34 (▼0.63%p)	0.034 (▼0.015)
광역자치단체 (17개)	1.63 (▲0.03%p)	0.036 (▼0.004)
기초자치단체 (226개)	2.97 (▲0.57%p)	0.070 (▲0.013)
교육청 (17개)	1.38 (▲0.07%p)	0.033 (▲0.005)
공직유관단체 (154개)	1.75 (▼0.03%p)	0.042 (▼0.003)

- (경험률 구간별) 부패경험률 3% 이상인 기관은 134개 기관이며, 기초자치단체와 공직유관단체 유형에서는 경험률 5% 이상인 기관이 각각 13.3%, 7.1%로 높음

< 기관 유형별 부패경험률 구간 분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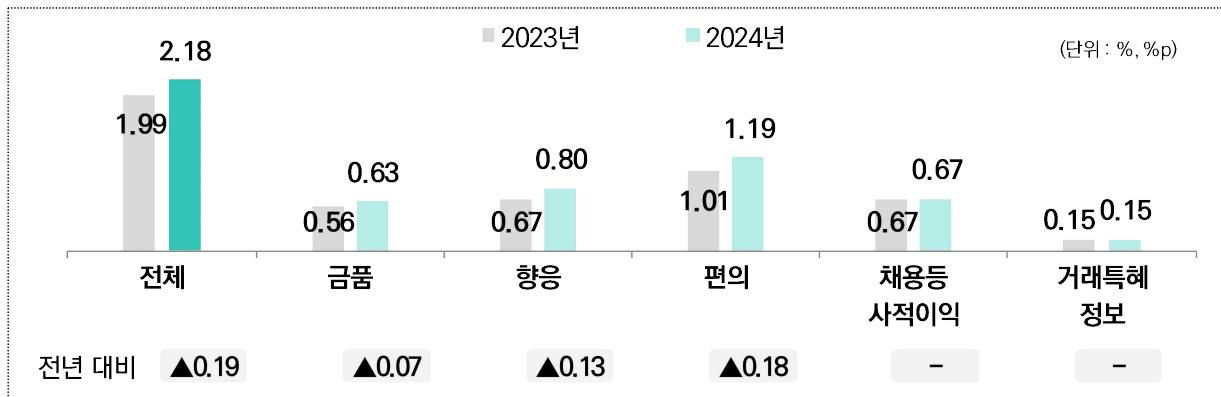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계	5% 이상	4% 이상	3% 이상	2% 이상	1% 이상	1% 미만	0%
전체 (460개)	100.0	9.1	6.7	13.3	19.6	26.1	12.0	13.3
중앙 (46개)	100.0	2.2	2.2	6.5	13.0	39.1	10.9	26.1
광역 (17개)	100.0	0.0	0.0	17.6	35.3	11.8	29.4	5.9
기초 (226개)	100.0	13.3	11.5	17.3	23.5	20.4	8.0	6.2
교육청 (17개)	100.0	0.0	0.0	0.0	23.5	29.4	47.1	0.0
공직 (154개)	100.0	7.1	2.6	10.4	13.6	31.8	12.3	22.1

□ '편의제공' 이 전년 대비 가장 악화되어 최고 경험률

- (경험 유형별) 부패경험 5가지 항목 중, '편의제공'(1.19%)과 '향응 제공'(0.80%) 부패경험률이 높음
- (시계열) '금품제공', '향응제공', '편의제공'의 부패경험률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었고 그 중 '편의제공'(1.19%, 전년 대비 +0.18%p)에서 부패경험률이 전년 대비 가장 크게 악화
- '채용 등 사적이익 제공'(0.67%)과 '거래·특혜정보 제공'(0.15%)의 경험률은 전년과 동일

< 전년대비 부패경험률 변동 추이 >



- (기관 유형별) 기초자치단체의 '편의제공' 경험률이 1.43%로 가장 높음
- 기관 유형과 무관하게 '편의제공' 경험률은 높은 편이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모든 부패경험 항목에서 경험률이 가장 높음

< 기관 유형별 내부체감도 부패경험률 >

(단위 : %)

구분	계	금품	향응	편의	채무면제· 채용청탁 등 사적이익	거래특혜· 미공개정보
전체	2.18	0.63	0.80	1.19	0.67	0.15
중앙	1.34	0.40	0.49	0.86	0.25	0.13
광역	1.63	0.31	0.43	1.00	0.43	0.11
기초	2.97	0.85	0.99	1.43	1.09	0.18
교육청	1.38	0.35	0.39	0.86	0.43	0.07
공직	1.75	0.55	0.81	1.10	0.39	0.14

□ 부패행위 경험자 1인당 경험빈도는 연간 약 2.38회

- 내부체감도 응답자 1인당 경험빈도는 0.052회(전년 대비 0.004회 증가), 부패경험자의 1인당 경험빈도는 2.38회(전년 대비 0.04회 감소), 1인당 경험규모는 69.40만원(전년 대비 18.75만원 감소)
- 기관 유형별로 부패경험자 1인당 경험빈도는 중앙행정기관(2.55회)이 가장 많고, 광역자치단체(2.18회)가 가장 적음

< 기관 유형별 내부체감도 부패경험 빈도 및 규모 >

구분	부패 경험률 (%)	부패 경험총빈도 (회)	부패 경험자수 (명)	응답자 1인당 경험빈도 (회)	부패경험자	
					경험자 1인당 경험빈도 (회)	경험자 1인당 경험규모 (만원)
전체	2.18 (▲0.19)	3334.5 (▲98.0)	1,399 (▲64)	0.052 (▲0.004)	2.38 (▼0.04)	69.40 (▼18.75)
중앙	1.34 (▼0.63)	245.0 (▼143.0)	96 (▼59)	0.034 (▼0.015)	2.55 (▲0.05)	103.08 (▲28.57)
광역	1.63 (▲0.03)	124.5 (▼22.5)	57 (▼1)	0.036 (▼0.004)	2.18 (▼0.35)	81.18 (▼39.33)
기초	2.97 (▲0.57)	1901.5 (▲470.5)	803 (▲196)	0.070 (▲0.013)	2.37 (▲0.01)	54.63 (▼18.89)
교육청	1.38 (▲0.07)	175.0 (▲24.0)	74 (▲4)	0.033 (▲0.005)	2.36 (▲0.20)	56.92 (▼66.92)
공직	1.75 (▼0.03)	888.5 (▼231.0)	369 (▼76)	0.042 (▼0.003)	2.41 (▼0.11)	92.42 (▼10.60)

IV. 청렴노력도 평가 결과

IV 청렴노력도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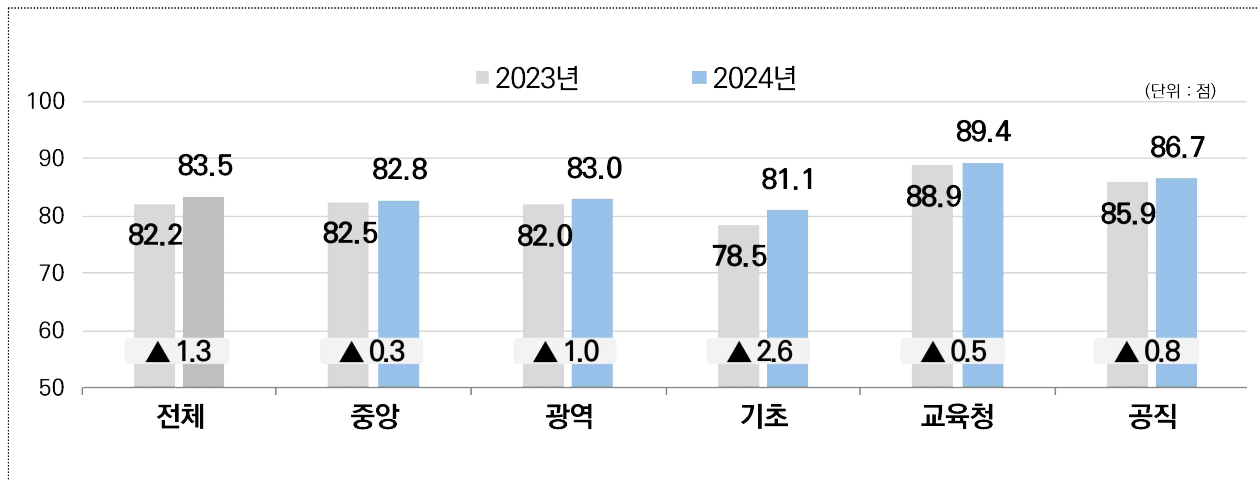
1. 청렴노력도 영역 전반

□ 평균점수 및 유형별 현황

- 전체 기관의 청렴노력도 평균점수는 83.5점으로 전년 대비 상승 (전년 대비 +1.3점)
- 기관 유형별로는 교육청(89.4점)의 점수가 가장 높고, 공직유관단체(86.7점), 광역자치단체(83.0점), 중앙행정기관(82.8점) 순이며, 기초자치단체(81.1점)가 가장 낮게 나타남
- ※ 단, 특화지표만 적용받는 유형(기초자치단체)은 모형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 시 유의

< 기관 유형별 청렴노력도 점수 >

(단위 : 점)



- 전년 대비 모든 유형의 점수가 상승
 - 주요 원인은 일부 평가지표의 기준* 변경과 각급기관에서 지표의 취지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시책을 운영한 효과로 분석
 - * 고위직 청렴교육 지표 만점 기준 변경('23년도 100%이상→'24년 95% 이상) 등

- 지표별로는 민관협력(98.3점),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97.4점), 반부패 계획 수립·기반 마련(97.0점) 등의 지표 점수가 높은 편
 - 특히, 국정과제 관련 지표인 공정채용 확산 관련 ‘부패 유발요인 정비’(96.5점),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공공재정 부정수급 자체점검 노력’(92.8점) 지표도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되어 달성 수준 우수
- 반면, 상대평가(등급화) 지표인 ‘부패 취약분야 개선’(73.6점), ‘기관장의 관심·노력도’(73.7점) 항목은 배점 상 평균 점수가 낮은 편
 - ‘23년도부터 지표 개편을 통해 부패 취약분야 집중 개선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향에 따라 각급기관의 취약분야에 대한 대응역량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추세

* 주요 사례 등은 본 보고서 해당 지표별 평가결과 참조

< 청렴노력도 평가 지표별 점수 >

지표명	점수	비고
①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기반 마련	97.0	정량
② 부패 취약분야 집중 개선	73.6	정성
③ 기관장(고위직 포함)의 관심과 노력도	73.7	정성
④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97.4	정량
⑤ 부패 유발요인 정비	96.5	정량
⑥ 공공재정 부정수급 기관별 자체점검 노력 제고	92.8	정량
⑦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	98.3	정량
⑧ 부패방지 제도 구축	91.3	정량
⑨ 반부패 시책 사례 공유·확산	84.5	정성
⑩ 감점 지표(3) : 부패신고 등 처리 내실화, 반부패 법령·제도 이행력 제고,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0.1	정량
⑪ 가점 지표(2) : 청렴컨설팅 추진노력,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적극행정 구현 노력	0.0	정량
⑫ 반부패 시책 내부 구성원 설문(5) : 취약분야 개선, 기관장 노력, 청렴교육 이행, 신고자보호 노력, 갑질 개선노력	63.7	설문

□ 평가등급 및 유형별 우수·향상 기관

- 460개 평가 대상기관 중 1등급은 12개(2.6%) 기관이며, 2년 연속 1등급 기관은 3개(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 북구, 서울 광진구)로 나타남

< 청렴노력도 평가 1등급 기관 및 3년 연속 1~2등급 기관 >

(유형내 기관명은 가나다 순)

구분		'24년도 1등급 (12개)	'22-'24년도 연속 1~2등급 (59개)
중앙행정기관	중앙Ⅰ (장관급)	-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중앙Ⅱ (차관급)	-	법제처, 질병관리청
광역자치단체		-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기초Ⅰ (시)	-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여주시, 경남 김해시, 경남 창원시, 경북 경주시, 경북 구미시, 전북 정읍시
	기초Ⅱ (군)	경북 성주군	경남 남해군, 경남 의령군, 경남 창녕군, 경남 하동군, 경북 성주군, 전남 보성군, 전남 장성군, 전남 해남군, 전북 부안군, 충남 금산군, 충남 부여군, 충남 홍성군, 충북 음성군
	기초Ⅲ (구)	대구 북구, 대전 서구, 서울 관악구, 서울 광진구, 서울 구로구, 서울 양천구	광주 동구, 광주 북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전 서구, 서울 강남구, 서울 광진구, 서울 구로구, 서울 양천구
시도교육청		경남 교육청	경기 교육청, 경남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공직Ⅰ (공기업)	-	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마사회
	공직Ⅱ (준정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공직Ⅲ (중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대한적십자사,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전원자력연료
	공직Ⅳ (지방공사공단)	-	경상북도개발공사,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 2년 연속 평가를 실시한 460개 기관 중 2개 등급 상승한 기관은 21개(4.6%)이며, 3개 등급 상승한 기관은 8개(1.7%)로 나타남.

< 청렴노력도 전년 대비 상승 기관 현황 >

(유형내 기관명은 가나다 순)

구분		2개 등급 상승 (21개)	3개 등급 상승 (8개)
중앙행정기관	중앙Ⅰ (장관급)	법무부	통일부
	중앙Ⅱ (차관급)	병무청	-
광역자치단체		경기도	-
기초자치단체	기초Ⅰ (시)	강원 강릉시	경북 경산시, 전남 목포시
	기초Ⅱ (군)	강원 양양군, 경기 가평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기초Ⅲ (구)	대구 수성구, 부산 강서구, 부산 서구, 서울 관악구	-
시도교육청		-	-
공직유관단체	공직Ⅰ (공기업)	에스알, 한국가스공사	한전KPS
	공직Ⅱ (준정부기관)	공무원연금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무역보험공사
	공직Ⅲ (중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직Ⅳ (지방공사공단)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강원개발공사	-

2. 청렴노력도 지표별 평가결과

[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기반 마련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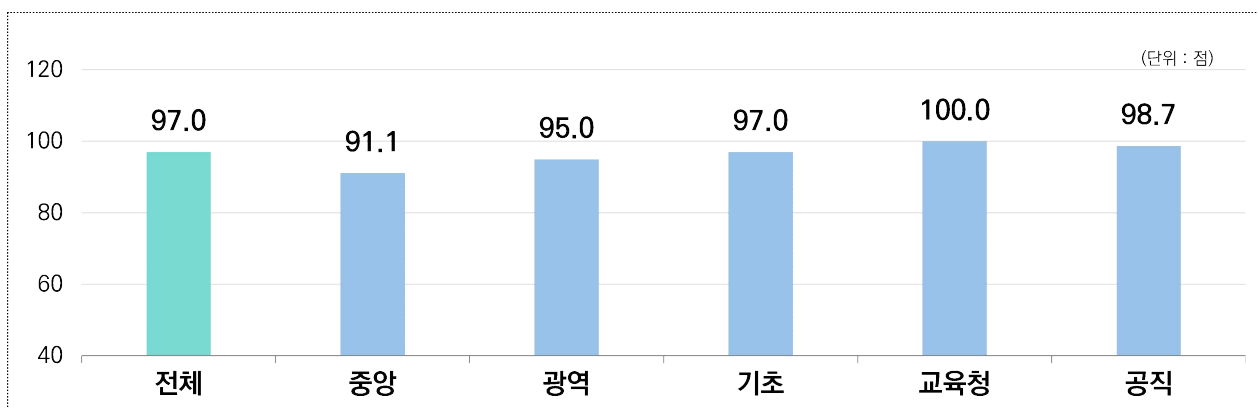
○ 평가지표

- (추진계획 수립) 각급 기관의 업무특성·청렴도 평가 결과 분석 등을 통해 기관 실정에 맞는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여부 평가
- (기관장 주관 회의 운영) 각급 기관의 청렴시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부패 추진 과제 등을 주제로 회의 실시

○ 평가결과

-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기반 마련’의 평균점수는 97.0점으로, 청렴노력도 전체 평균점수(83.5점) 보다 높은 수준
- 기관 유형별로는 교육청(100.0점)의 평가점수가 가장 높고, 공직유관단체(98.7점), 기초자치단체(97.0점) 순

< 기관 유형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기반 마련’ 지표 점수 >



□ 주요 성과

○ (추진계획 수립) 각급기관의 자율적·능동적 시책 추진 기반 조성

- 1개 기관을 제외한 모든 평가 대상기관에서 평가기준 내 기간에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수립
- 전반적으로 각급기관에서 적정한 구조와 체계를 갖추어 부패 취약분야와 업무 특성을 고려한 반부패·청렴업무 추진체계 마련

< 기관 유형별 지표 실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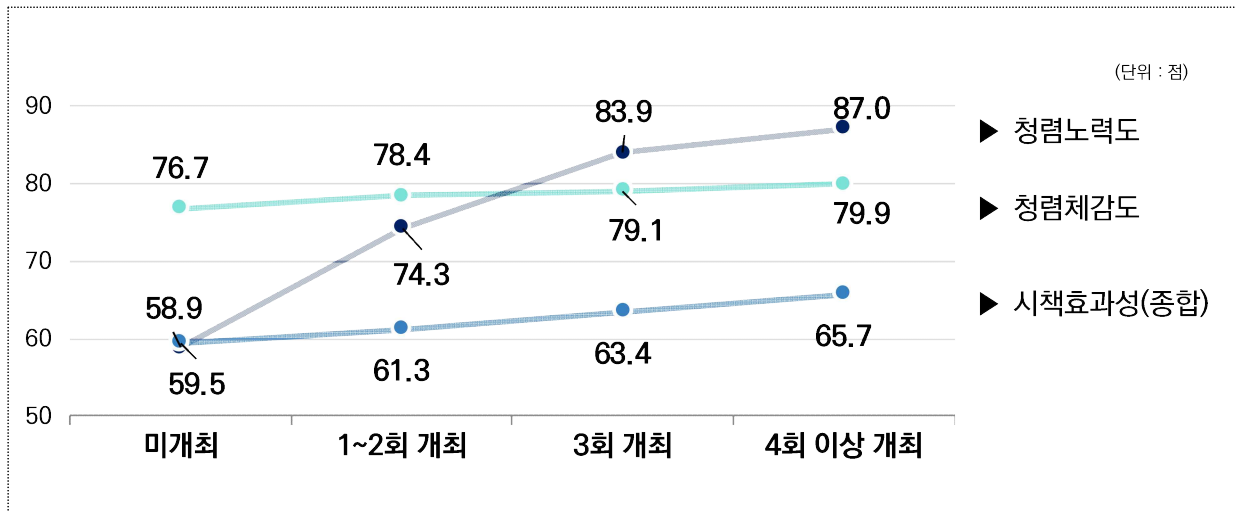
(단위 : 개, 회)

구분	기관수	추진계획 수립			기관장(부기관장 포함) 주관 회의 운영				평균
		기한내 수립	기한후 수립	미수립	0회	1~2회	3회	4회 이상	
전체	460	456	3	1	9	25	334	92	3.2
중앙	46	46	0	0	3	7	32	4	2.8
광역	17	17	0	0	0	2	13	2	3.0
기초	226	223	2	1	5	10	169	42	3.2
교육청	17	17	0	0	0	0	12	5	3.4
공직	154	153	1	0	1	6	108	39	3.4

○ (기관장 주관 회의 운영) 반부패 추진 과제 등에 대해 주요 간부가 같이 논의하는 회의 운영을 통해 청렴업무 추진 동력 확보

- 기관장 주관 회의를 통해 고위직 간부의 청렴 시책 추진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청렴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계기 마련
- 지표 운영 2년 차를 맞아, 이행 실적이 개선되는 등 기관장이 반부패·청렴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직접 참여하는 문화 정착에 기여
 - * 미실시 기관 비율('23년 7.4%→'24년 2.0%), 3회 미만 실시기관 비율('23년 19.1%→'24년 7.4%)이 전년 대비 등 모두 감소
- 특히, 회의 개최 횟수가 많은 기관일수록 청렴체감도, 직원들이 느끼는 시책 효과성이 높고, 특히 청렴노력도에 두드러진 차이

< 기관장(부기관장 포함) 주관회의 횟수별 청렴수준 인식 >



□ 보완사항

- 추진계획의 체계성 측면에서 기관 유형별로 다소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우수 시책 등의 공유·확산 확대 필요
 - 특히, 기초자치단체(시/군), 공직유관단체(중점) 유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일부 기관은 도출한 과제와 추진전략간 정합성 미비
- 기관장 주관 회의 운영과 연간 추진계획 수립을 연계하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추진체계 마련 내실화 추진 검토
 - 매년 1분기에 실시하는 기관장 주관 회의는 각급기관에서 수립한 연간 추진계획을 토대로 논의하는 등 지표 보완 검토

□ 우수사례

① [병무청·해양경찰청] 조속한 반부패·청렴 추진 계획 수립·시행

- '24년 1월에 반부패·청렴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전사적 공유와 시행을 통하여 기관의 청렴도 향상 추진

② [경상북도교육청] 부패 취약분야와 연계한 기관장 주관 회의 운영

- '부패취약분야 개선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학생 교육분야, 인사·채용분야, 교육행정분야 등 기관의 부패 취약분야별 청렴 시책 추진상황 점검
- 이를 통해,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다각적 접근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청렴 실천을 위한 추진기반 마련

③ [인천국제공항공사] 내실있는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수립

-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자체감사 결과, 기관 부패위험 요인 자가진단, 현장의견, 전문가 의견, 타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 다양한 접근 시도
- 이를 통해 '24년도 반부패·청렴 추진전략 및 과제를 체계적으로 도출, 과제별 성과 모니터링 계획도 충실하게 수립

(2) 부패 취약분야 집중 개선

□ 개요

○ 평가지표

- (부패취약분야 분석·도출) 각급기관별 업무 및 구성원 특성 등을 고려한 부패취약분야 분석을 통한 개선과제 도출

※ (평가기준) 분석수단·방법, 의견수렴 적절성, 부패연관성, 전략 타당성 등

- (개선노력·효과) 도출된 부패취약분야 개선과제에 대한 추진 실적 및 효과성 평가

※ (평가기준) 개선과제의 실효성, 이행수단의 적절성 및 독창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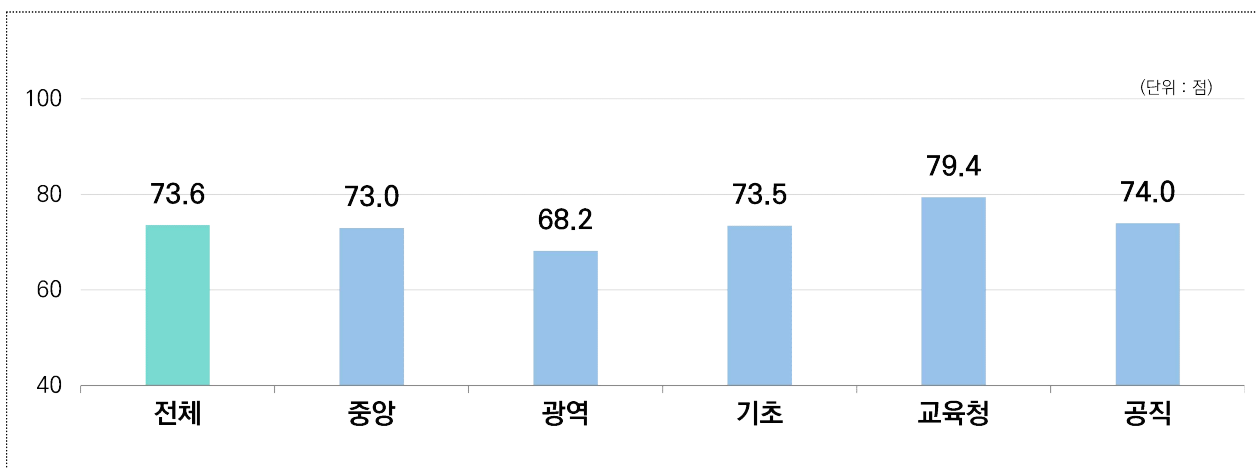
○ 평가결과

- ‘기관별 부패 취약분야 개선’의 평균점수는 73.6점

- 정성평가 지표로, 기관 유형별로 등급화 후 점수부여하는 상대 평가 배점구조로 인해 타 정량지표에 비해 평균점수가 낮은 경향

※ 각 유형별(중앙행정기관 / 광역자치단체·교육청 / 기초자치단체 / 공직 유관단체)로 등급화하여 평가하였으므로, 점수의 단순 비교·해석에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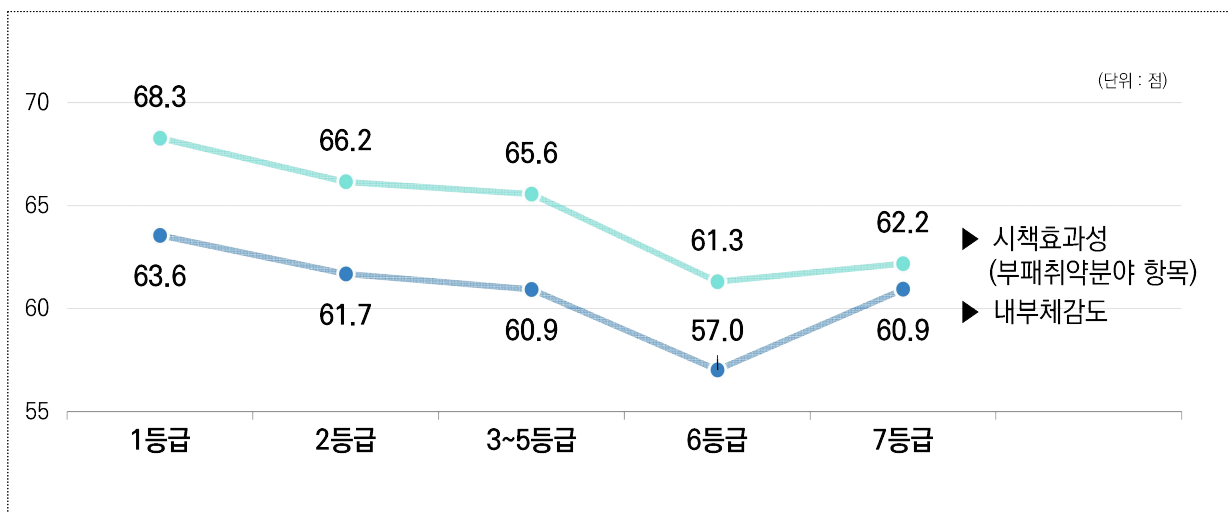
< 기관 유형별 ‘부패 취약분야 개선’ 지표 점수 >



□ 주요 성과

-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입체적 분석 및 실질적 개선대책 마련 문화 정착
 - 부패 취약분야 개선에 역량을 집중토록 하는 평가지표 개편('23년~) 취지에 발맞춰, 각급기관 분석 및 개선전략 수립 수준 전반적 향상
 - 특히, 다소 수동적으로 부패방지 시책을 추진해오던 기초지자체 등 소규모 기관에서도 기관 상황에 맞는 상황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을 시도하는 등 긍정적 변화
 - 다수기관에서 내·외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각종 근거자료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입체적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전략 도출
- 기관별 부패 취약분야의 실질적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과제 추진
 - 기관의 업무특성, 정책 환경과 각계각층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과제를 선정하고,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해당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기관은 시책효과성 평가(부패 취약분야 개선) 및 내부체감도(내부직원 평가)도 높은 것으로 분석

< ‘부패 취약분야 개선’ 지표 등급별 청렴체감도 개선도 >



□ 보완사항

- 우수기관과 미흡기관의 큰 수준차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 검토
 - 일부 기초지자체에서는 연간 반부패 추진계획을 단순 나열·요약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효과성에 한계
 - 컨설팅·워크숍·별도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데이터 분석·추진전략 도출 등 단계별 세부 추진절차 학습 기회 부여 검토
- 우수기관 사례 확산을 통한 벤치마킹 기회 확대
 - 올해 청렴노력도 9번 지표(반부패 시책 사례 공유·확산) 운영을 통해 수집한 각급기관의 우수시책 활용 확대 방안 검토

□ 우수사례

< 부패취약분야 분석·도출 >

- ① [해양수산부]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패 취약분야 선정
 - (1단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분석 → (2단계) 취약분야 원인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 고유업무 진단, 외부 조사결과 등 분석 → (3단계) 내·외부 구성원 추가 설문조사, FGI 등 심층분석을 통해 취약분야 선정
- ② [부산광역시교육청] 다양한 분석기법 활용
 - 거시환경 분석도구인 'PEST 모형'과 부패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청렴 추진환경을 고려한 부패 취약분야 도출
- ③ [전남 나주시] 취약분야 원인 및 시사점 체계적 도출
 - 다양한 환경분석, 내·외부 평가자료,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취약분야 및 원인과 시사점을 체계적으로 도출
 - 전략과제를 개인/제도/조직문화 차원에서 제시

④ [서울 광진구] 자체개발 부패리스크 맵을 통해 부패취약분야 도출

-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내·외부관계자(노조, 각종 자문단) 설문, 기관 특성(주거/인구), 감사자료, 징계현황, 언론보도 등 수집
- 이를 토대로 자체 개발한 '부패 리스크맵'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부패 취약분야 도출

⑤ [경기 양평군] 외부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

-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및 자체 설문조사 결과, 부패 취약분야 관련 외부 이해관계자 및 업무담당자 대상 FGI를 통해 부패 유발 요인에 대한 체계적 진단 실시

< 부패 취약분야 개선 >

□ 업무처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투명성 제고

① [법제처] 법령해석 업무투명성 강화 종합대책 추진

-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법령해석 프로세스 개편으로 '쟁점 신속 검토제', '처리안전 목표치 관리제' 등 도입, 검토인력 증원 등
 - 처리단계별 진행상황 안내 절차 신설 및 자체 상시 이행점검 체계 마련 등 추진 시책의 실효성 및 지속성 확보
- * 법령해석 회신 처리건수 증가(18% ↑), 처리기간 단축(37.5% ↓)

② [한국수자원공사] 토지보상 업무 및 예산 집행 투명성 제고 방안 추진

- 청렴체감도 취약업무인 토지보상 업무의 주요 고객이 고연령대임을 고려하여 주요 업무처리 단계별 진행상황 등에 대한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 도입
- * 보상민원 전년 대비 33% ↓
- 관행적 부적정 예산집행 근절을 위해 '인식조사-시스템 구축-문화적 정착'을 추진, 부정사용 시나리오 기반 '법인카드 점검 재무모니터링 시스템' 신규 구축

③ [서울주택도시공사] 공사비 검증 시스템 도입 등 건설산업 투명성 강화

- 상향식 과제 발굴을 통해 '도시정보 포털 시스템' 개설, 공사비 검증 전담부서 및 규정 신설, 공사비 공개·검증 등 개선과제 발굴·시행
 - * 공사비 검증을 통해 조합-시공사간 공사비 관련 갈등 해결에 기여
- 설계공모 및 안전·품질 관리 등 과정에 시민참여단 운영 등을 통해 공사 투명성 강화
 - * 서울시민(1,200명)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3%가 분양원가 공개 긍정적 효과 있다고 평가

□ 내부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

① [인천국제공항공사] 승진·평가 체계 과정의 공정성 강화

- 승진심사 시 최근 2년간 함께 근무한 직원의 성과확인 절차 추가, 외부 심사위원 확대 및 청렴옴부즈만의 참관제도 등 신설
 - * 인사제도 평가 공정성 인식 상승, 인사평가 이의건수 감소

② [한국마사회] 부패인식 취약계층 맞춤형 소통·인사·조직문화 개선

- 갑질·괴롭힘 등에 취약한 특정직렬 직원을 대상으로 간담회·설문조사·외부자문 등을 통한 취약분야 도출
- 개선을 위해 노사공동 소통 채널 개설, 정기 전보제도 신규 도입 등 인사제도 개선, 관리자들에 대한 근무평가에 갑질행위 항목 신설 및 갑질행위자 제재 강화 및 신고채널 실효성 강화 등 대책 실시
 - * 자체 진단 결과 '인사위반' 경험 ('23년도) 16.7% → ('24년도) 5.3%로 감소

③ [경남 하동군] MZ세대 공직자 의견을 반영한 조직문화 개선 시도

- MZ세대 공무원 대상 적극적 의견수렴을 통해 인사위반, 특혜제공, 갑질행위 등 20가지 조직문화 개선 및 10가지 인사고충 개선
- 또한, MZ세대의 실제 의견을 사례로 한 방송 프로그램 운영으로 불필요한 의전문화 지양 등 실질적 조직문화 개선 유도

[3] 기관장(고위직 포함)의 관심과 노력도

□ 개요

○ 평가지표

- (대표사례) 각급기관의 부패 취약분야 개선 과정에서 기관장(고위직)의 의지와 솔선수범을 보여주는 사례 평가

※ (평가기준 1) 고위직 참여수준, 실질적 노력 투입 정도, 효과성, 독창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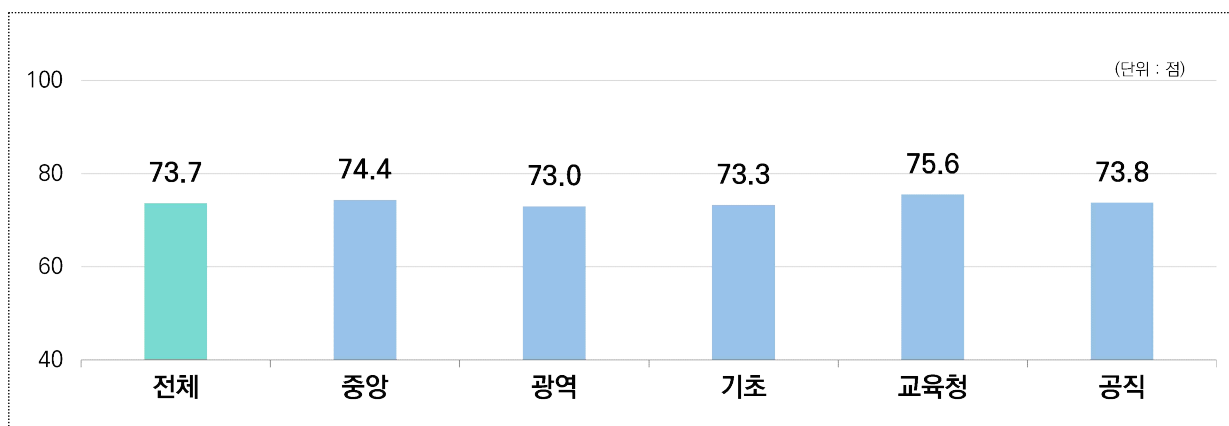
※ (평가기준 2) 대표 사례와 부패 취약분야 개선과의 연계성

○ 평가결과

-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도’ 지표의 평균점수는 73.7점

※ 각 유형별(중앙행정기관 / 광역자치단체·교육청 / 기초자치단체 / 공직유관단체)로 등급화하여 평가하였으므로, 점수의 단순 비교·해석에 유의

< 기관 유형별 ‘기관장 등 관심과 노력도’ 지표 점수 >



□ 주요 성과

- 기관장·고위직의 청렴 시책 추진에 대한 의지 표명과 솔선수범 등을 통해 반부패 시책 추진 동력 확보

- 각급 기관에서 선정한 부패 취약분야 개선 과정에서 기관장의 권한·권위를 바탕으로 한 효과적이고 다양한 활동 전개

-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도’(정성) 지표 결과가 종합청렴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

※ 통계적으로 유의확률이 5% 이내($p < 0.05$)에 있고 상관계수가 0.4이상이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며, 1.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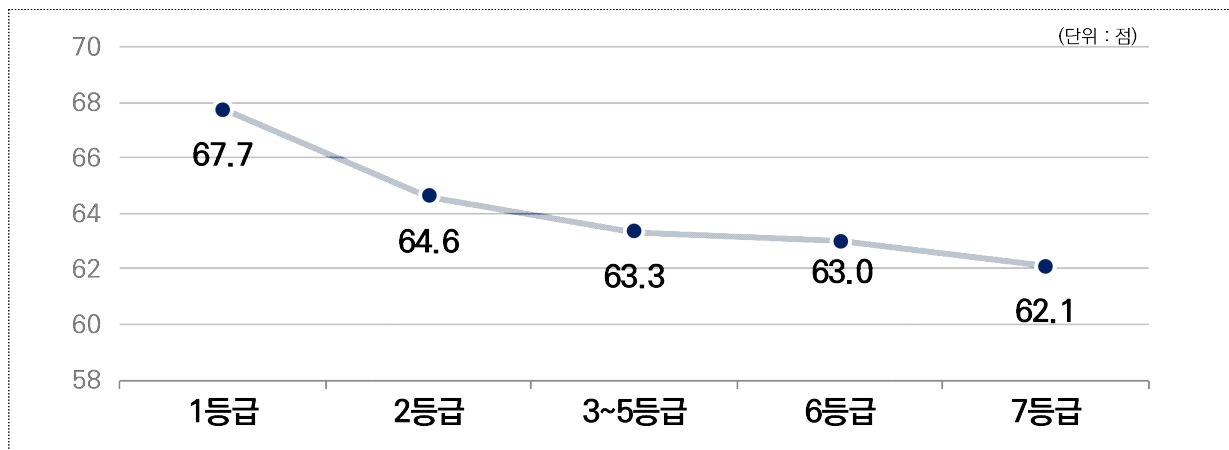
< 기관장 등 관심과 노력 지표(정성)와 종합청렴도 점수간 관계 분석 >

구분		종합청렴도(점)
기관장·고위직 노력 지표(점)	상관계수	0.473
	유의확률	0.000

- 또한,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도’ 지표(정성) 결과가 높을수록 내부 직원들의 시책효과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

- 기관장·고위직의 관심과 의지를 통한 적극적 반부패 시책 추진으로 조직환경과 내부직원의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

< ‘기관장 등 관심과 노력도’ 지표 등급별 시책효과성 점수 >



□ 보완사항

- 부패 취약분야 개선은 기관장 등 고위직 간부의 관심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우수사례 지속 발굴 및 공유·확산 추진
- 다만, 일부기관에서는 기관의 부패방지 시책 전반의 내용을 기관장의 사례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검토 필요

□ 우수사례

① [국세청] 기관장의 강력한 청렴리더십을 통한 분위기 쇄신

- 기관장 취임 전 인사청문회, 취임 당일 간부회의, 전국감사관 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강력한 반부패·청렴 의지 표명
- 관행상 감사 사각지대였던 ‘고위직 대상 지방청간 교차복무감사 실시’ 및 적발자 신상필벌 등을 통해 온정주의 타파

② [전라북도교육청] 부패취약분야 대응체계 마련에 주도적 역할

- 교육감이 직접 부패취약분야 분석·도출과정에 참여하여 실질적 의견수렴 및 개선과제 이행 의지 표명, 부패취약분야 점검단 구성·운영과정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

③ [경남 창원시] 부패 취약분야 개선과정의 주도적 역할

- 시장이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분야별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주재하고, 원칙과 절차의 중요성에 대한 의지를 표명
- 기관장의 활동이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자원 배분, 기관장의 리더십, 조직 역량강화, 관련분야 시행규칙 개선 등으로 기관에서 선정한 부패 취약분야와의 연계성이 우수

④ [한국가스공사] 부패리스크 개선과정에 기관장이 적극적 참여

- 기관장이 부패 취약분야 현장 방문하여 심층토론을 주관하고, 재발 방지 제도개선 방안 도출
- 기관장이 제도개선과 청렴 실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참여하였고, 자회사와의 실질적인 청렴소통 협력 실시 등 청렴리더십 발휘

⑤ [한국수력원자력] 기관장 주관 부패 취약분야 전담 협의체 운영

-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전담협의체 운영을 4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며, 활동 과정에 기관장이 참여하고 지원
- 기관장을 중심으로 발대식부터 주요 활동, 성과발표회를 실시하였고, 도출된 결과에 대한 변화 의지 표명 및 우수단원에 대한 포상 실시

(4)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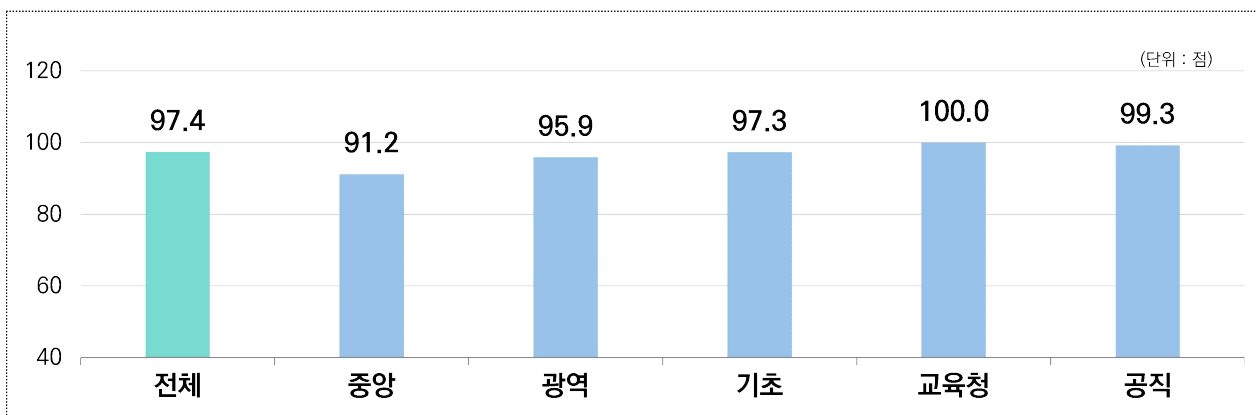
○ 평가지표

-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율) 각급기관의 고위공직자의 부패방지 교육 이수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 (행동강령 대면교육 실시) 각급기관 행동강령의 직무상 갑질금지 규정을 포함한 자체 대면 집합교육 실시여부 평가

○ 평가결과

-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의 평균점수는 97.4점으로, 노력도 전체 평균점수(83.5점) 보다 높은 수준
- 기관 유형별로는 교육청(100.0점)의 평가점수가 가장 높고, 공직유관 단체(99.3점), 기초자치단체(97.3점), 광역자치단체(95.9점), 중앙행정 기관(91.2점) 순

< 기관 유형별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지표 점수 >



□ 주요 성과

- (고위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대부분의 기관에서 적극적 교육 추진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청렴의식 향상에 기여
 - 평가대상기관 고위공직자 총 11,553명 중 11,338명(98.1%)이 부패방지 교육을 이수하여 전년 대비 이수율 1.8%p 증가
 - * '22년도 : 92.1% → '23년도 : 96.3% → '24년도 : 98.1%
 - 460개 기관 중 85.2%(392개)는 교육대상 고위직 전원이 이수

< 기관별 고위직 청렴교육 실적 >

(단위 : 개, 명, %,)

구분	기관수	전체 이수율			기관별 이수율					
		대상 인원	이수 인원	이수율	100%	80% 이상	50% 이상	50% 미만	0%	평균 이수율
전체	460	11,553	11,338	98.1	392	59	4	3	2	98.2
중앙	46	1,366	1,251	91.6	27	15	2	2	0	93.0
광역	17	520	507	97.5	11	5	1	0	0	97.3
기초	226	1,789	1,761	98.4	216	6	1	1	2	98.3
교육청	17	1,084	1,078	<u>99.4</u>	13	4	0	0	0	99.5
공직	154	6,794	6,741	99.2	125	29	0	0	0	99.5

- (행동강령 대면교육 실시) 평가 대상기관 중 89.8% 기관(413개)이 1회 이상 교육 실시, 전년(87.6%) 대비 소폭 상승

□ 보완사항

- 청렴교육 이수율 저조기관 등의 청렴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청렴교육 의무제도 안내(교육실적 관리 방법 포함) 추진
 - 특히, 이수율이 낮은 중앙행정기관 유형에 대한 반부패·청렴 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 추진 병행

□ 우수사례

< 고위공직자의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 >

① [병무청] 지방 병무청장이 직접 부패방지교육 강의

- 지방청장(지방병무청장)이 직접 직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함으로써 고위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이수율은 물론 반부패 의지를 제고함과 더불어 소속 직원들에 대한 경각심 고취
- 또한 부패방지교육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 업무 분야별·대상별* 교육도 병행하여 부패방지교육의 효과성 제고

<업무 분야·대상별 교육 내역>

구분	교육내용
관리자급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 등 교육(2회)
회계담당	공금횡령·유용 등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등 교육(2회)
소속기관	청렴국민감사관 협조, 주요 위반사례 교육 등(2회)

② [한국도로공사] 자체 청렴수준 하위 부서(소속기관) 대상 특별교육

- 자체청렴도 결과에 따라 부진 기관, 부패행위 발생기관, 2등급 이상 하락 기관 등을 대상으로 감사실장이 권역별, 기관별 방문 교육
- 또한 안전순찰원, 퇴직예정자 등 수강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대상자별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 진행

* 고위직 교육대상자 241명 전원(100%) 부패방지교육 이수

③ [한국공항공사] 감사부서장이 직접 부패방지교육 강의

- 국민권익위의 부패방지교육 내부강사 과정을 이수한 감사부서장(청렴감찰부장)이 직접 고위직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기관 내 경각심 고취
- 또한 별도로 지정한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주간’ 운영을 통해 기관 차원의 고위직 대상 부패방지교육 운영 및 이수율 제고

* 고위직 교육대상자 124명 전원(100%) 부패방지교육 이수

< 행동강령 대면 집합교육 실시 >

① [강원랜드] 갑질 근절을 위한 행동강령 교육 총 52회 운영

- 직무상 갑질 금지 규정 등을 포함한 행동강령 교육을 전 직원 대상으로 내부 청렴강사를 활용하여 총 52회 실시

② [대전도시공사] 공공조직 내 갑질 관행 개선을 위한 교육 진행

- 다양한 직종·직렬·근무 형태의 내부직원 대상 맞춤형 대면 집합교육 총 12회 실시, 규정 및 신고제도·신고자보호 등에 대한 교육으로 행동강령 내재화에 기여
- 특히, 기관장이 간부급 직원 등을 대상으로 직접 반부패·청렴에 대한 교육실시를 통해 의지 전파

[5] 부패 유발요인 정비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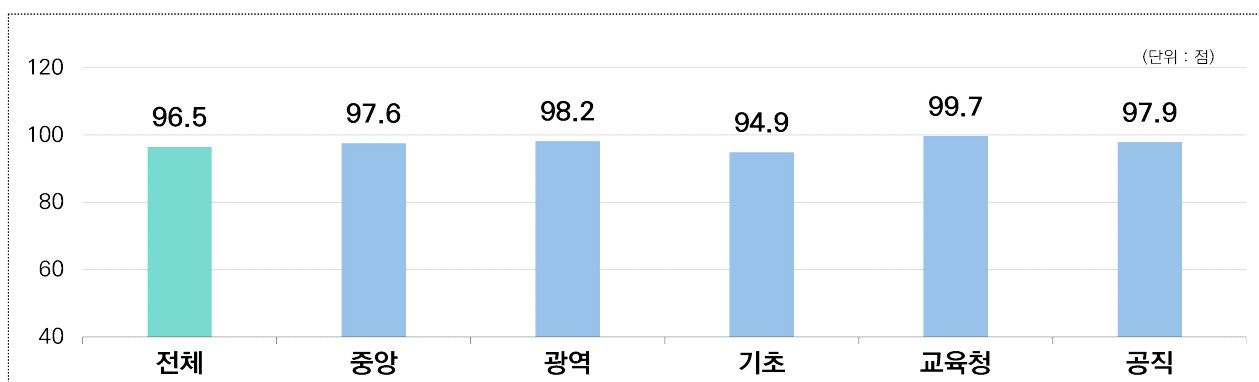
○ 평가지표

-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부패행위 발생 취약시기에 기관별 업무특성 등을 고려한 자체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실적 평가
- (이해충돌방지제도 실태점검) 기관별 운영 현황 자료제출 등 실태 점검 시 협조의무 이행 여부
-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반영)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 기준」의 각급기관 자체규정 반영 완료 비율
- (공정채용 교육 이수)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각급기관 채용·감사 업무 담당자의 공정채용 전문교육 이수 실적
- (채용과정 일상감사 실시) 채용계획 수립단계에서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위한 일상감사 실시비율 평가

○ 평가결과

- ‘부패 유발요인 정비’의 평균점수는 96.5점으로, 청렴노력도 평가 전체 평균점수(83.5점) 보다 높은 수준
- 기관 유형별로는 교육청(99.7점)의 평가점수가 가장 높고, 광역자치단체(98.2점), 공직유관단체(97.9점) 순

< 기관 유형별 ‘부패 유발요인 정비’ 지표 점수 >



□ 주요 성과

-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명절 등 부패 취약시기에 행동강령 자체 점검 강화를 통해 위반행위 발생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
 - 평가 대상기관의 대부분(96.3%, 443개)이 연간 4회 이상 점검, 전년(95.6%)에 이어 안정적 관리
 - 금품·향응·선물 수수 등 전통적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행동강령 위반 등에 대해 지속적인 경각심 유도

< 기관별 행동강령 자체점검 실적 >

(단위 : 개, 회)

구분	기관수	행동강령 자체점검 횟수				
		6회이상	4~5회	1~3회	미 실시	평균횟수
전체	460	147	296	15	2	5.1
중앙	46	20	25	1	0	5.4
광역	17	8	9	0	0	5.4
기초	226	56	156	12	2	4.9
교육청	17	9	8	0	0	5.6
공직	154	54	98	2	0	5.3

- **(이해충돌방지제도 실태점검)** 법시행 초기단계인 「이해충돌방지법」 실태조사의 원활한 실시를 통한 규범력 확보에 기여
 - 평가 대상기관 중 18개(3.9%)를 제외한 대다수 기관에서 자료 제출 완료
 - 다만, 전년 대비 미제출·일부제출한 기관 유형이 중앙부처·교육청으로 확대되었고, 미제출 기관수 다소 증가('23년 4개 → '24년 18개)
-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반영)** 공공기관의 비공무원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채용 관련 국정과제 추진동력 마련
 - 총 306개 행정기관 중 84.3%(258개) 기관에서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의 모든 조항을 자체 규정으로 반영 완료

- 특히, 공정채용 표준안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기관 수가 전년 대비 크게 개선('23년 37개→ '24년 0개)

< 기관별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안 반영 실적 >

(단위 : 개)

구분	기관수	100% (31개조항)	50% 이상	50% 미만	0% (0개)	평균 반영수
전체	306	258	35	13	0	29.6
중앙	46	40	6	0	0	30.6
광역	17	15	2	0	0	30.6
기초	226	186	27	13	0	29.2
교육청	17	17	0	0	0	31.0

- (공정채용 관련 담당자 교육 이수) 규정 미숙지로 인한 채용비리 근절 환경 조성 및 공정채용 문화 확산

- 평가대상 공직유관단체 154개 기관 중 대부분(96.8%, 149개 기관)은 채용업무 담당자와 감사업무 담당자가 공정채용 전문교육 이수

- (채용계획 수립단계 일상감사 실시) 채용 공정성 강화차원에서 채용계획 수립단계에서 일상감사 실시를 통해 채용절차 적정성 점검

- 평가대상 공직유관단체 154개 기관 중 대부분(94.8%, 146개 기관)은 일상감사 실시 등 이행 완료

- 지난해 일상감사 범위에 '채용분야'를 규정화하지 않았던 3개 기관도 규정화 완료, 평가대상 공직유관단체에서 모두 반영 완료

<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제도화 실적 >

(단위 : 개)

구분	기관수	채용·감사 담당자 전문교육 이수율			채용계획 수립단계 '일상감사' 실시 비율					
		모두 이수	부분 이수	미이수	'24 규정화	'23 규정화 완료				
						100%	50% 이상	50% 미만	0%	채용 없음
공직유관	154	149	4	1	3	146	2	1	1	1

□ 보완사항

- 공정채용 관련 국정과제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비공무원 공정채용’ 관련 평가지표 보완 검토

* **국정과제 91-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 채용과정의 불공정성 해소 등 공정문화 확산

□ 우수사례

<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실적 >

- [행정안전부] 이행실태 집중 점검을 통한 행동강령 준수를 제고
 - 이행실태 점검을 총 7회 실시하였으며, 중점 점검사항에 대응한 점검반을 다수 편성하여 본부, 소속기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광범위한 점검체계 구축
 - 선거철, 연말, 을지연습 등 부패행위발생 취약시기에 대응하여 적시성 있는 점검 실시

[6] 공공재정 부정수급 기관별 자체점검 노력 제고

□ 개요

○ 평가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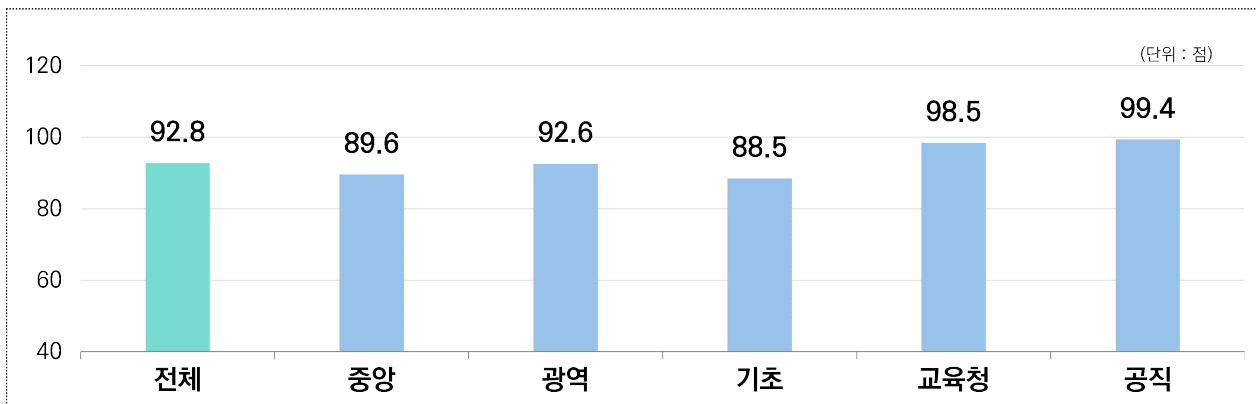
- (중양·지자체·교육청·공직유관 **자체점검 실적**) 공공재정지급금의 집행, 부정 청구 행위에 대한 환수처분 등의 적정성 자체점검 여부
- (중양·지자체·교육청 **이행실태 관리 실적**) 부정청구 등 행위에 따른 각급 기관의 제재처분 이행실태 관리 내역 평가
- (지자체·교육청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실적**) 각급기관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환수 등을 통한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 평가

○ 평가결과

- ‘공공재정 부정수급 자체점검 노력 제고’의 평균점수는 92.8점으로, 청렴노력도 평가 전체 평균점수(83.5점) 보다 높은 수준
- 기관 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99.4점)의 평가점수가 가장 높고, 교육청(98.5점), 광역(92.6점) 순

* 각 유형별로 적용 지표가 다르므로 점수의 단순 비교·해석에 유의

< 기관 유형별 ‘공공재정 부정수급 자체점검 노력 제고’ 지표 점수 >



□ 주요 성과

- (자체점검 실적) 점검 활성화를 통해 공공재정지급금의 허위·과다 청구 등에 대한 관리·제재 강화
 - 평가 대상기관 460개 중 대부분(97.8%, 450개)이 연간 1회 이상 점검 실시, 전년 대비 미실시 기관 감소('23년 30개→'24년 10개)
-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실적)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실적 증가율 평가를 통해 국가 재정건전성 및 국정과제 추진기반 강화
 - 260개 지자체·교육청 중 61.2%(159개) 기관에서 부가금 부과 실적 증가

< 기관별 자체점검 및 부가금 부과 실적 >

(단위 : 개, 회)

구분	기관수	자체점검 실적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실적 증가율				
		3회 이상	1~2회	미실시	평균	120% 이상	100% 이상	50% 이상	50% 미만	0%
전체	460	77	373	10	2.3	146	13	48	53	0
중앙	46	5	38	3	2.0	-	-	-	-	-
광역	17	6	11	0	2.5	11	0	3	3	0
기초	226	41	178	7	2.3	120	13	44	49	0
교육청	17	5	12	0	<u>2.6</u>	15	0	1	1	0
공직	154	20	134	0	2.2	-	-	-	-	-

- (이행실태 관리 실적) 제재처분 이행실태 제출 여부 평가로 효율적 재정 누수 현황 파악 및 부정수급 취약분야 발굴
 - 총 306개 평가대상 기관 중 85.3%(261개 기관)에서 실적을 모두 제출, 45개 기관이 상·하반기 중 1회 이상 이행실태 실적 미제출

< 이행실태 제출 실적 >

구분	기관 수	제재처분 이행실태 제출								누락 적발 기관
		상반기 제출현황			하반기 제출현황			통합		
		제출 (보완 미발생)	제출 (보완발생)	미제출	제출 (보완 미발생)	제출 (보완발생)	미제출	상하반기 모두제출	1회 이상 미제출	
전체	306	275	0	31	281	3	22	261	45	0
중앙	46	43	0	3	43	0	3	41	5	0
광역	17	16	0	1	16	0	1	15	2	0
기초	226	199	0	27	205	3	18	188	38	0
교육청	17	17	0	0	17	0	0	17	0	0

□ 보완사항

-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국정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실적 지표 발전·보완 필요
 - 제도 이행력 제고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지표 적용 및 피평가기관 부담 완화 차원의 지표 개선 등 검토

□ 우수사례

< 자체점검 실적 >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등에 대해 자체점검 실시
 - 상해요인 처리 내역 부정 및 타 의료비 중복지원 등 부정수급 291건을 적발하여 237백만 원 환수
- ② [경북 구미시] 의료지원 의약품 및 소모품 사업 등 161개 사업에 대해 자체점검 5회 실시
 - 보조금 감사 등을 통해 집행 적정성 여부 등을 내실있게 점검하여 정산 미흡 등에 대해 주의조치 7건 처분 요구

③ [영암군] 사회단체 보조금 등에 대해 자체점검 실시

- 지방보조금 부적정 집행 및 정산 소홀 등 5건을 적발하여 38백만원을 환수하는 등 국가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

<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실적 >

①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사업 지도점검 등 실시

- '21년~'23년 상반기 환수·제재부가금 부과율 평균 대비 8,790배의 환수·제재부가금 부과율 증가

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법인 및 사립고등학교 대상 종합 감사 등 실시

- '21년~'23년 상반기 환수·제재부가금 부과율 평균 대비 7,056배의 환수·제재부가금 부과율 증가

③ [경남 거제시] 사회복지·보훈·아동 및 청소년 분야 복지보조금 감사 등 실시

- '21년~'23년 상반기 환수·제재부가금 부과율 평균 대비 1,630배의 환수·제재부가금 부과율 증가

[7]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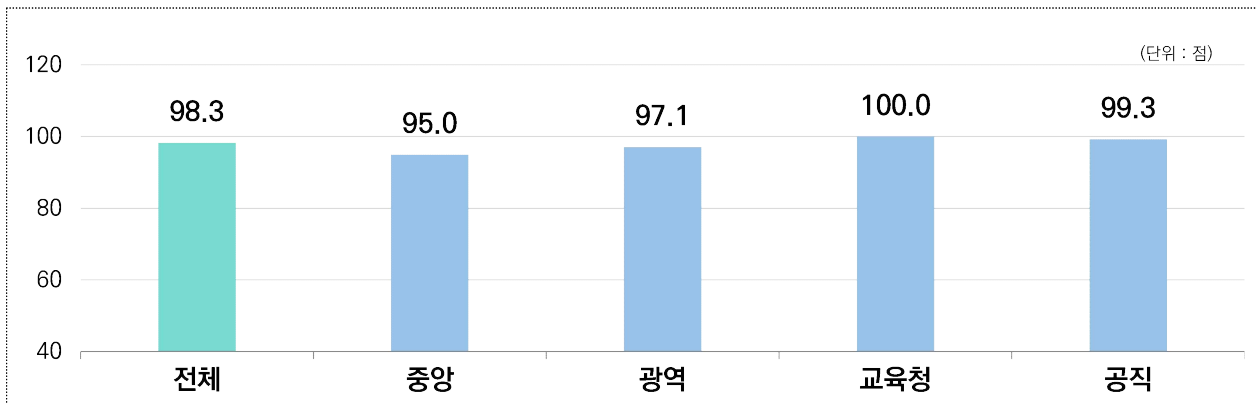
○ 평가지표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공공행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청렴시민감사관의 개선 권고건수 및 수용 여부, 교류활동 등 평가

○ 평가결과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의 평균점수는 타 지표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98.3점
- 모든 기관 유형에서 95점 이상의 높은 지표 달성률

< 기관 유형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 지표 점수 >



□ 주요 성과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청렴시민감사관의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감사 요구·참여, 개선 권고 등을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조치함으로써 기관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
- 평가대상 234개 기관 중 대부분(98.3%, 230개)이 청렴시민감사관의 권고를 1회 이상 수용
- 타기관과의 교류·협력 활동도 대부분(99.6%, 233개) 1회 이상 추진

< 기관별 청렴시민감사관 관련 활동 실적 >

(단위 : 개, 회)

구분	기관수	권고조치 완료건수					타기관 교류활동 횟수			
		3건 이상	2건	1건	0건	평균 건수	2회 이상	1회	미 실시	평균 횟수
전체	234	110	118	2	4	2.8	228	5	1	2.2
중앙	46	24	18	2	2	2.9	43	2	1	2.2
광역	17	9	7	0	1	3.0	17	0	0	2.5
교육청	17	9	8	0	0	2.8	17	0	0	2.5
공직	154	68	85	0	1	2.8	151	3	0	2.1

□ 보완사항

- 각급기관 시민감사관의 활동이 반부패·청렴 분야와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 시민감사관의 권고를 수용한 사안에 대해 실제 이행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지표 보완 등 검토
- 각급기관의 달성도가 임계점에 달하였으므로, 보다 실질적 활동을 보장하고, 기관 청렴도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지표 발굴

□ 우수사례

- ① [방위사업청] 시민감사관의 감사 요구 수용에 따른 감사 실시
 - 시민감사관의 사전 감사 결과, 무전기 사업 구매 계획 적정성에 대한 감사 요구
 - 방사청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개선
- ② [한국중부발전] 시민감사관의 개선 요구 수용에 따른 조치 실시
 - 시민감사관의 사전 감사 결과, 출자회사 임직원 선발 과정에서의 청렴성 검증 제도 마련 등 개선 요구
 - 이에 해당 기관을 이를 수용하여 청렴성 검증 제도 관련 계획 수립하고 차년도에 조치 예정

(8) 부패방지 제도 구축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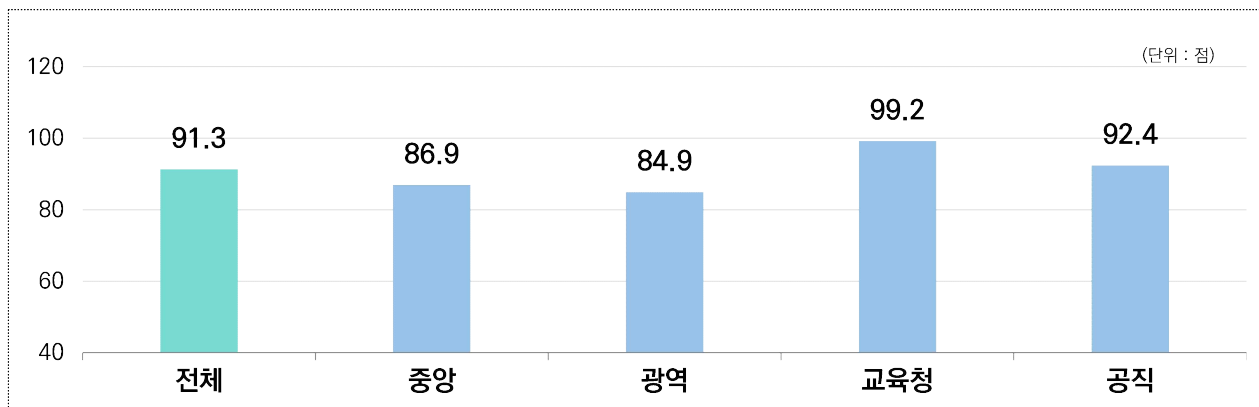
○ 평가지표

-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를 원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을 평가
- (권고과제 조치기한 준수율) 평가대상 세부과제 중 조치기한 내 이행 완료로 평가된 세부과제 비율 평가

○ 평가결과

- ‘부패방지 제도 구축’의 평균점수는 91.3점으로, 타 평가지표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교육청(99.2점)과 공직유관단체(92.4점)의 평가점수가 높은 반면, 중앙행정기관(86.9점)과 광역자치단체(84.9점)는 다소 저조

< 기관 유형별 ‘부패방지 제도 구축’ 지표 점수 >



□ 주요 성과

-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대부분의 기관에서 높은 비율로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이행하였으며, 이행기간도 준수
- 총 2,633건의 권고 중 2,358건(89.6%)을 이행하였고, 67.5%(158개) 기관에서 국민권익위가 선정한 제도개선 과제 모두 이행

- 기관 유형별로는 **교육청(99.1%)**의 이행률이 가장 높고, **공직유관단체(92.6%)**, **광역자치단체(83.8%)**, **중앙행정기관(82.0%)** 순

< 기관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실적 >

(단위 : 개, 건, %)

구분	기관 수	전체 이행률			기관별 이행률					
		권고 건수	이행 건수	이행률	100%	80% 이상	50% 이상	50% 미만	0%	평균
전체	234	2,633	2,358	89.6	158	40	27	8	1	91.5
중앙	46	428	351	82.0	26	8	10	2	0	86.9
광역	17	482	404	83.8	3	8	6	0	0	85.3
교육청	17	115	114	99.1	16	1	0	0	0	99.2
공직	154	1,608	1,489	92.6	113	23	11	6	1	92.7

- **(조치기한 준수율)** 142개 기관(60.7%)이 모든 권고과제의 조치기한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82개 기관(77.8%)이 전체 권고과제 중 80% 이상의 과제 조치기한 준수

□ 보완사항

- 기관 규모·업무특성상 제도개선 권고 건수, 이행기간 등의 편차 발생이 불가피한 구조이므로, 대안 등 마련 검토 필요
- 특히, 각급기관의 특수한 사정(해당 사무 부존재, 법령 개정 중) 등으로 인한 미이행 과제 평가 세부기준 등 수립

□ 우수사례

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 비리방지 방안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면서 이해관계자와의 마찰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적 이행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이행

②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

- 공용차량 관리 규칙 개정을 통해, 공용차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에 대한 정기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공용차량의 관리주체로서 책임성 강화

③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공용물품 관리체계 개선

- 자산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사용물품의 내용연수를 조달청 기준으로 규정하고, 불용물품의 처분기한을 정하는 등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물자관리 및 예산절감 기반 확립

[9] 반부패 시책 사례 공유·확산

□ 개요

○ 평가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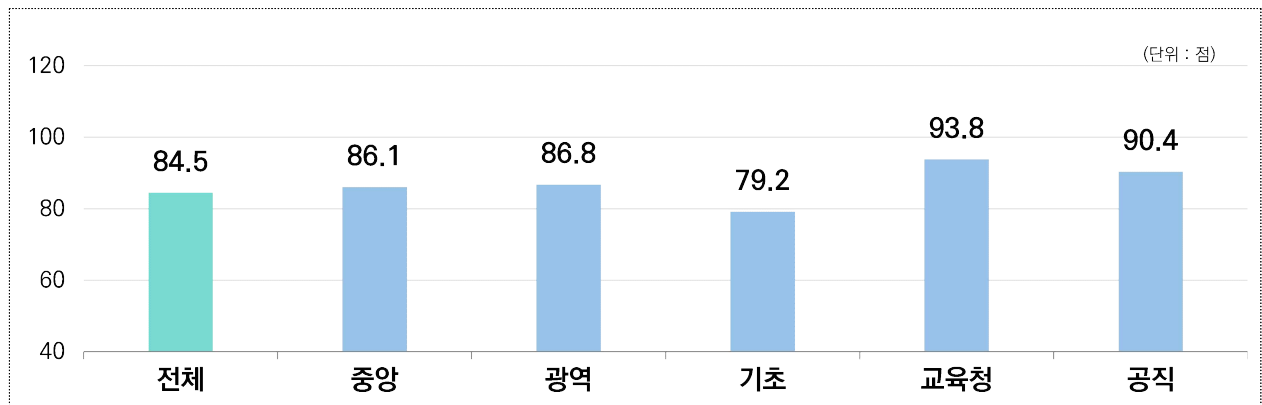
- 각급기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하여 부패취약분야 개선 과정 등 우수사례를 「청렴포털」에 게시

※ (평가기준) 확산 가능성 등 사례 적정성, 위기 극복방안 등 사례의 충실성

○ 평가결과

- ‘부패방지 시책 사례 공유·확산’ 지표의 평균점수는 84.5점으로, 타 지표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교육청(93.8점)과 공직유관단체(90.4점)의 평가점수가 높고, 중앙행정기관(86.1점), 광역자치단체(86.8점)는 평균 수준이며, 기초자치단체(79.2점)는 다소 낮은 수준

< 기관 유형별 ‘반부패 시책사례 공유·확산’ 지표 점수 >



□ 주요 성과

- 각급기관 반부패·청렴 업무담당자들의 요청사항이었던 ‘타기관 우수사례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기관별 벤치마킹 도모
- 평가 대상기관 460개 중 454개 기관(98.7%)에서 추진한 부패취약분야 개선 시책을 보고서 형태로 청렴포털에 공개

- 기존에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우수기관의 사례를 집대성하여 실질적 시책 반부패·청렴 시책 데이터베이스 구축
 - 시책 추진사례 뿐만 아니라,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그에 따른 대책·효과도 공유하여 반부패 시책 추진의 레퍼런스 역할 기대

< 반부패 시책 사례 공유·확산 점수 >

구분	기관수	등급				점수
		A등급	B등급	C등급	미제출	
전체	460	147	178	129	6	84.5
중앙	46	18	18	9	1	86.1
광역	17	7	5	5	0	86.8
기초	226	31	96	95	4	79.2
교육청	17	10	7	0	0	93.8
공직	154	81	52	20	1	90.4

* 표본미달 등 미발표 기관을 포함한 제출기관 전체에 대하여 등급화

□ 보완사항

- 각급기관의 정성평가 보고서 작성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지표 운영 여부 검토 필요
 - 각급기관의 핵심 시책을 공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성평가 지표로 설정 불가피
- 수집된 사례 등을 토대로 각 유형별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활용 제고방안 검토 추진
 - 청렴도 미흡기관 등에 대한 컨설팅에 활용하고, 새로운 시책 도입 과정에서 벤치마킹 기회 제공

□ 주요사례

- [주택도시보증공사] 부패취약분야 개선과정에서 창의성 있는 시도
 - 기관 고유업무 내 갑질요소 제거를 위한 ‘사규 속 갑질찾기’ 대회 추진 사례로, 이를 통해 갑질예방을 시도한 창의성있는 시책 공유
- [한국광해광업공단] ‘실패사례’ 공모전 시행
 - 소극행정을 방지하고 부패 유발요인 척결을 위하여 실패사례 공모전을 시행한 사례로, 청렴문화를 개선하고 제도개선 실적이 우수한 시책 공유
-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청렴 추진체계 확립
 - 자회사의 청렴추진 체계를 확립하여 윤리경영을 확산하고, 이를 통한 청렴도 제고를 도모하는 시책으로, 시책 추진과정의 장애 극복 사례 공유
- [한국중부발전] ‘청렴계약 종합관리 플랫폼’ 구축
 -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시책으로, 구매·용역·공사 등 계약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정량·정성적 성과가 우수하고 타 기관 확산이 가능한 사례 공유
- [한국주택금융공사] HF형 공정채용 모델 도입
 - ‘출발은 동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투명한 공정채용 모델’ 도입 시책으로, 인사채용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채용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범용성·창의성이 높은 사례 공유
- [한국남부발전] 부패사건 공판 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
 - 청렴교육의 일환으로 부패사건을 주제로 한 공판 체험을 실시하는 등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청렴문화 개선에 효과성 있는 사례 공유
- [금융감독원] 인허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 인허가 절차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전협의(START) 포털 구축·운영 시책으로, 시스템 개선, 과도한 재량권 통제, 내부 구성원 설득을 위한 기관장 지원 등의 사례 공유

○ [경기도교육청] 갑질문화 근절 종합 프로세스 구축

- 갑질 문화 개선을 위해 「법령개정 - 업무처리절차 개선 - 피해자 회복지원 - 상호존중 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 추진
- 원인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개선방안 도출, 의견수렴 내용 등은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등의 사례 공유

○ [부산광역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체계 개선

-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심사지원단 구성, 심사기준 투명 공개, 업무지원시스템 개편을 통한 업무처리 프로세스 개선 등 실시 사례 공유

○ [한국무역보험공사] 승진 사전심사제 도입

- 인사 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 내부구성원의 승진심사 수용도 제고를 위해 승진 사전심사제의 주요 내용과 장애요인 및 극복과정 등의 사례 공유

○ [질병관리청] 전사적 이해충돌방지 관리 체계 마련

- 이해충돌방지 관리체계 구축 및 효율적 운영 사례로, 근거규정 마련·점검·관리체계 구축 등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순환전보 등 확장성 있는 시책 공유

○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통합 관리망 구축

- 보조금 누수 차단을 위한 사례로, 실시간 온라인 집행·점검 시스템 구축 및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 사례 공유

○ [경기 용인시] 건축 인·허가 처리시스템 개선

- 외부체감도 개선을 위한 사례로, 기존 건축 인·허가 분석을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한 사례 공유

○ [경기 여주시] 기관 내 부패사례를 활용한 청렴교육 실시

- 형식적인 청렴교육을 탈피하여 실제 기관에서 발생한 부패 관련 사례를 토대로 직급별, 업무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운영한 사례 공유

○ [경기 시흥시] 출장여비 자가점검 프로그램 개발·운영

-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주요 부당수령 사례를 유형화 하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점검 프로그램 개발·도입 및 회계담당자 등에게 활용토록 한 사례 공유

(10-1) 감점지표 : 부패신고 등 처리 내실화

□ 개요

○ 평가지표

- (신고사건 사후관리) 국민권익위에서 이첩·송부한 사건 중 6개월 이상 장기 미통보 사건의 처리상황을 점검기관 내 회신 여부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 사례 조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사건 중 부적절 처리 사례에 대한 시정조치 여부 평가

○ 평가결과

- (신고사건 사후관리) 175개 기관 2,247건의 장기 미통보 이첩·송부 사건 중 2,106건(93.7%)에 대한 처리결과 회신
 - * 11개 기관에 대해 미회신율에 따라 감점 반영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처리 사례 조치) 부적절 처리사례가 있는 19개 기관(감독기관 10개, 해당기관 9개) 모두 조치 완료
 - * 별도 감점기관 없음

< 부패신고 관련 미이행 기관 현황 >

(단위 : 개)

구분	기관수	이첩·송부사건 처리상황 미회신 기관	청탁금지법 부적절 사례조치 미이행 기관
전체	460	11	0
중앙	46	2	0
광역	17	2	0
기초	226	7	0
교육청	17	0	0
공직	154	0	0

□ 성과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에 규정된 이첩 사건 수사결과 회신 독려를 통한 규범력 강화
 - 상·하반기 실태점검을 통해 국민권익위에서 이첩·송부한 신고 사건의 수사 결과 확인 및 환수 등 조치 완료
 - 연속성 있는 청렴노력도 지표 설정·운영을 통해 이첩(기관송부) 사건 중 장기미통보 사건 수 및 처리상황 미회신을 감소 추세

< 장기미통보 사건 수 및 미회신 비율 >

(단위 : 개)

년도	장기미통보 사건수	미회신 사건 수	미회신사건 비율
2023년도	3,004	195	6.49%
2024년도	2,247 (△757)	141 (△54)	6.28% (0.21%p)

- 「청탁금지법」 부적절 처리 사례 시정조치를 통해 이행기반 강화

□ 보완사항

- 내실있는 부패 신고사건 처리 기반 조성을 위해 각급기관 담당자 안내·교육 등 실시
 - 이첩사건 회신, 청렴포털 연계에 따른 후속조치 등 절차 등

□ 우수사례

< 이첩사건 사후관리 >

- ① [중소벤처기업부] 총 147건의 사건 모두 진행상황 확인·회신
- ② [보건복지부] 총 75건 사건 모두 진행상황 확인·회신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 사례 조치 >

- ① [산업통상자원부] 감독기관으로서 산하기관의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 사례에 대한 이행독려 및 점검을 통해 모두 시정조치 이행
- ② [한국가스안전공사] 자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 사례 시정을 위해 적극적 서류 준비 및 제출 등으로 시정조치 이행

(10-2) 감점지표 : 반부패 법령·제도 이행력 제고

□ 개요

- (부패공직자 현황) 부패공직자 징계 및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 현황 제출 여부
- (위반자 조치)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해임 및 고발 요구 이행 여부

□ 평가결과·성과

- (부패공직자 현황) 460개 평가기관 중 441개 기관(95.9%)에서 입력 완료, 징계 현황 등을 미입력한 19개 기관에 대해 감점 반영
- (위반자 조치) 460개 평가기관 중 14개 기관에서 해임 및 고발요구 발생, 모든 기관에서 이행 완료

< 세부 평가결과 >

(단위: 개)

구분	기관수	부패공직자 징계현황 미입력 기관	취업제한 대상자 미입력 기관	취업제한 위반자 해임요구 미이행 기관	취업제한 위반자 고발요구 미이행 기관
전체	460	18	1	0	0
중앙	46	0	1	0	0
광역	17	0	0	0	0
기초	226	10	0	0	0
교육청	17	1	0	0	0
공직	154	7	0	0	0

□ 보완사항

- 부패공직자 징계 현황 미제출 및 취업제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급기관 담당자에 대한 안내·교육 등 지속 실시

[10-3] 감점지표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 개요

- 신고자 보호 환경 조성 및 적극적 보호조치 유도를 위해 신고자 보호규정 준수* 및 보호결정 이행 여부** 등을 평가

* 국민권익위 보호조치결정 등(신분보장, 규정 위반자 징계, 불이익조치 금지, 불이익조치절차 일시정지 등) 이행 여부

** 국민권익위 신고자 보호사건 조사와 관련된 자료제출, 업무협조 여부 등

□ 평가결과·성과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조에 규정된 국가 등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
 - 평가기간 중 21개 기관의 사건에 대해 보호조치 결정 등 발생
 - 이 중 2개 기관(중앙행정기관 1개, 공직유관단체 1개)에서 미이행 사례가 발생하여 감점

< 기관별 부패·공익신고 처리 실적 >

(단위 : 개)

구분	기관수	신고자 보호결정 이행			신고자 보호 관련 협조 미이행
		해당없음	전부이행	미이행	
전체	460	439	19	2	1
중앙	46	39	6	1	1
광역	17	16	1	0	0
기초	226	220	6	0	0
교육청	17	15	2	0	0
공직	154	149	4	1	0

□ 주요 미이행 사례

- ① [중앙행정기관] 신고자의 실명 중 일부(姓)를 언급하여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였으나 내부 감찰 결과 '경고' 처분
- ② [공직유관단체] 계약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관련 정보를 유출하여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한 직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였으나, 사실관계 입증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징계하지 않고 단순 '불문'으로 의결

[11-1] 가점지표 : 청렴컨설팅 추진노력

□ 개요

- 종합청렴도 미흡기관에 대해 국민권익위와 우수기관의 멘토링을 지원하여 우수사례 확산 등 공공분야 청렴수준 제고에 기여
 - 미흡기관의 종합청렴도 상승 정도(정량)와 노력도(정성)를 평가하여 멘토기관에 가점 차등 부여

□ 평가결과 · 성과

- (멘티기관) 우수기관의 컨설팅을 받은 멘티기관(미흡기관) 22개 중 18개(81.8%)의 종합청렴도 상승
 - 4개 기관이 종합청렴도 2개 등급 이상 크게 상승하였으며, 그 중 3개 기관은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여 우수기관으로 거듭남

< 청렴컨설팅 멘티 기관의 종합청렴도 등급 현황 >

구분		기관명
등급 상승 (18개)	2단계 ↑ (4개)	경상북도교육청(2등급), 강원 강릉시(2등급), 전북 순창군(3등급), 한국콘텐츠진흥원(2등급)
	1단계 ↑ (14개)	병무청, 인천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경북 경산시, 경북 김천시, 충남 공주시, 경기 가평군, 부산 강서구, 울산 중구, 우체국물류지원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체육산업개발, 경북 안동시 의회
등급 유지 (4개)		산업통상자원부, 서울 도봉구, 서울 동대문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24년도 종합청렴도와 '23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비교

- (멘토기관) 청렴컨설팅 멘토링에 참여한 11개 기관 중 7개(63.6%)가 종합청렴도 1·2등급 유지
 - 멘토링에 참여한 기관에 대해 멘티기관 종합청렴도 상승 수준과 추진노력 등에 따라 가점 부여
 - ※ 중앙행정기관 1개, 광역자치단체 1개, 기초자치단체 5개, 교육청 1개, 공직유관단체 3개

□ 보완사항

- 청렴컨설팅 멘토·멘티를 원하는 수요 대비 국민권익위의 지원 역량에 한계가 있으므로 참여기회 확대 방안 검토 필요
 - 반부패·청렴 업무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소규모 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높이고, 컨설팅 절차 등을 간소화 하는 방안 등 검토
 - 아울러, 청렴컨설팅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등 노력 병행

[11-2] 가점지표 : 적극행정 구현 노력

□ 개요

- 국민권익위에서 운영 중인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를 통해 의견제시 사안에 대해 소관기관의 반영 실적 평가

□ 주요 성과

- 민원이나 제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제 해소 등 국민권익 보호 구현
 - 각급기관에서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반영하여 111건의 민원·제안을 수용·개선, 총 71개 기관에 가점 부여

< 기관별 적극행정 국민신청 의견제시 반영 실적 >

(단위 : 개, 건)

구분	기관수	전체 반영현황		기관별 반영현황				
		총건수	기관당 평균건수	반영 기관수	3건이상	2건	1건	반영기관 평균건수
전체	460	111	0.2	71	10	10	51	1.6
중앙	46	8	0.2	4	1	1	2	2.0
광역	17	20	1.2	9	3	1	5	2.2
기초	226	48	0.2	38	2	5	31	1.3
교육청	17	10	0.6	5	1	1	3	2.0
공직	154	25	0.2	15	3	2	10	1.7

□ 보완사항

- 기관 유형·규모에 따라 적극행정 국민신청 사안의 발생 편차가 크고, 제안내용이 부패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은 사례에 대한 보완 필요

※ 대상기관(중앙·지자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총 460개 기관 중 389개 기관은 적극행정 국민신청 의견제시 사례 미발생

[12] 반부패 시책 효과성 평가

□ 개요

- 각급기관에서 추진한 주요 반부패 시책에 대한 구성원이 느끼는 효과성 평가

※ ① 부패 취약분야 개선 노력, ② 기관장·고위직 의지·노력, ③ 청렴교육 이행, ④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⑤ 갑질(행동강령) 개선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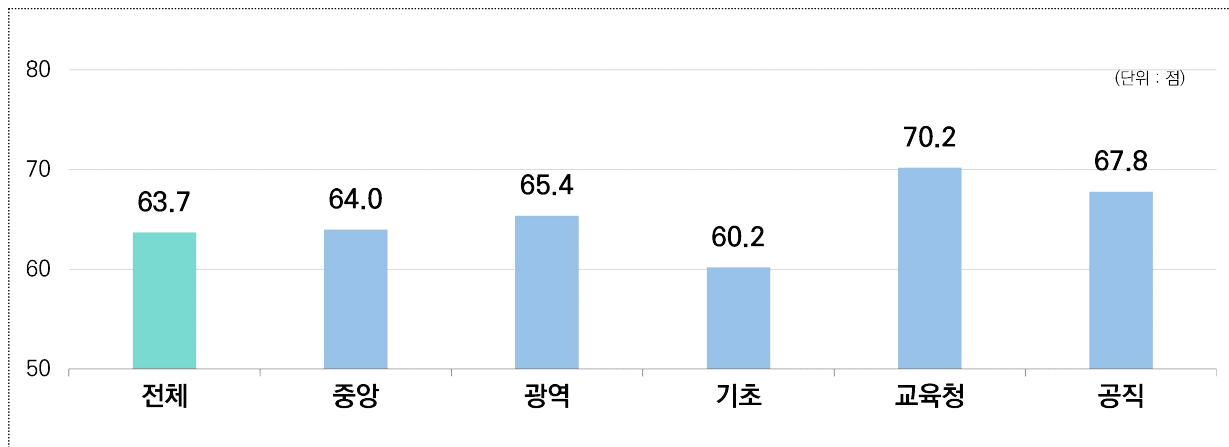
-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평가하는 타 노력도 지표와 달리 청렴체감도 설문 과정에서 관련 문항에 대한 설문 실시 후 결과 반영(7점 만점)

※ 리커트 7점 척도 활용

□ 평가결과

- (총평) '반부패 시책 효과성 평가'의 평균점수는 63.7점으로, 타 지표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기관 유형별) 교육청(70.2점)의 평가점수가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60.2점)가 가장 낮음

< 기관 유형별 '반부패 시책 효과성 평가' 지표 점수 >



- (평가항목별) '청렴교육 이행'의 체감효과성이 66.5점으로 가장 높고, '취약분야 개선'이 65.2점, '기관장 노력'이 64.8점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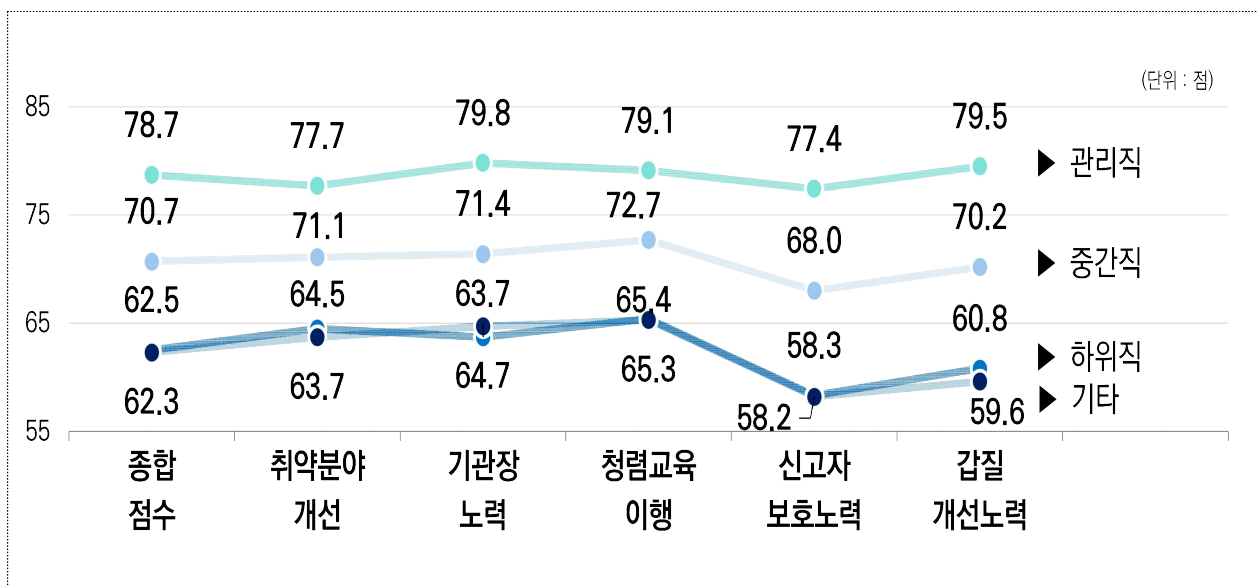
< 시책 효과성 인식 점수 >

(단위 : 점)

구분	시책 효과성	취약분야 개선	기관장 노력	청렴교육 이행	신고자 보호노력	갑질 개선노력
전체	63.7	65.2	64.8	66.5	59.9	62.2
중앙	64.0	65.4	66.7	66.1	60.2	61.7
광역	65.4	67.1	67.3	67.5	61.7	63.3
기초	60.2	61.9	61.4	63.5	56.0	58.3
교육청	70.2	72.2	72.3	72.6	66.1	67.7
공직	67.8	69.1	68.0	70.1	64.5	6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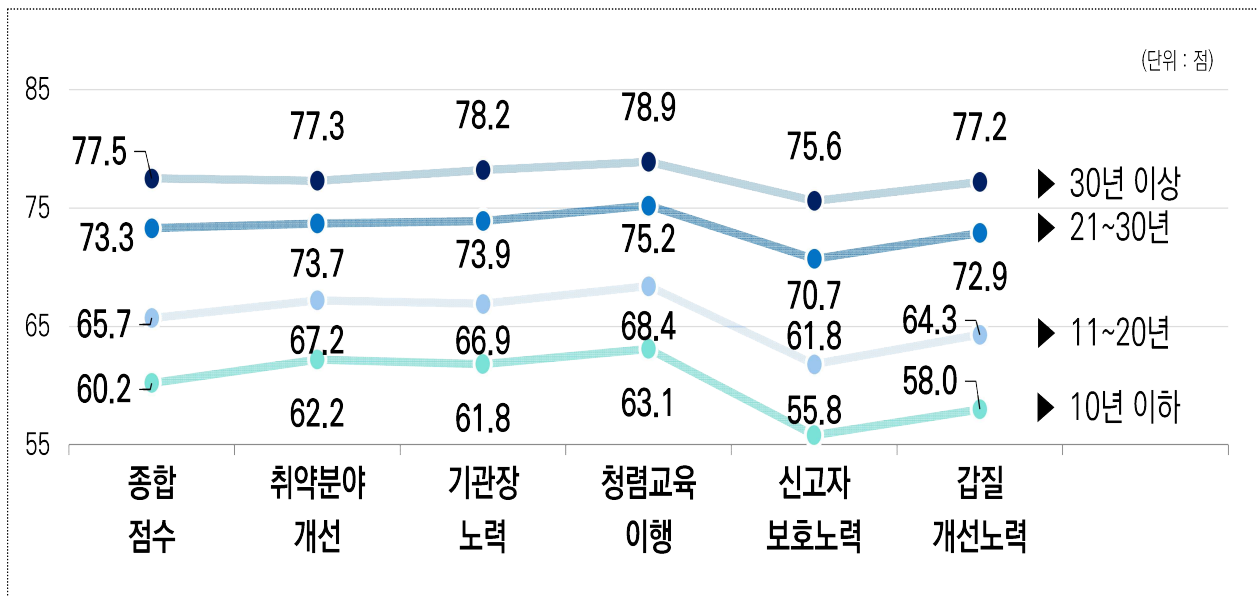
- (직급별) '관리직'의 시책 효과성은 78.7점으로 평균(63.7점)보다 높은 수준이나, 하위직(62.5점)과 기타 직렬(62.3점)은 낮게 나타남

< 직급별 시책 효과성 인식 점수 >



- (근무기간별) 근무기간 10년 이하 공직자의 시책효과성은 60.2점으로 평균(63.7점) 보다 낮은 수준이며, 근무년수가 많을수록 시책효과성이 높게 나타남

< 근무년수별 시책 효과성 인식 점수 >



□ 보완사항

- 기관 업무 및 구성원 특성 등을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청렴시책 추진 여건 조성 필요
 - 각급기관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패 취약요인을 발굴하고,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청렴노력도 지표 운영

3. 반부패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 기반 마련

- 반부패 분야 국정과제 중 공공기관에 확산이 필요한 과제를 지표화 하고, 이에 따라 각급기관에서는 속도감 있게 이행

- (국정과제 5번)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 사각지대 점검·개선

청렴노력도 6번 지표 :

공공재정 부정수급 기관별 자체점검 노력 제고

✓ 공공재정지급금의 허위·과다청구 등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

- 평가대상 공공기관 460개 중 97.8%(450개) 기관에서 연간 1회 이상 점검 이행

✓ 적극적 공공재정 환수·제재부과금 부과

- 260개 지자체·교육청 중 61.2%(159개) 기관에서 부과 실적 향상

- (국정과제 91번)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 기회 보장을 위한 공정채용 확산

청렴노력도 5번 지표 : 부패 유발요인 정비

✓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각급기관 자체규정화

- 조례 제정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 평가대상 행정기관 306개 중 84.3%(258개) 기관에서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을 모두 자체 규정으로 반영, 전년 대비 19.3%p ↑

✓ 채용계획 수립 단계에서 일상감사 실시

- 평가대상 공직유관단체 중 94.8%(146개 기관)에서 모든 채용계획에 대해 일상감사 실시

✓ 공정채용 전문교육을 통해 규정미숙지로 인한 채용비리 근절 환경 조성

- 평가대상 공직유관단체 중 96.8%(149개 기관) 채용·감사업무 담당자 교육 이수

V. 부패실태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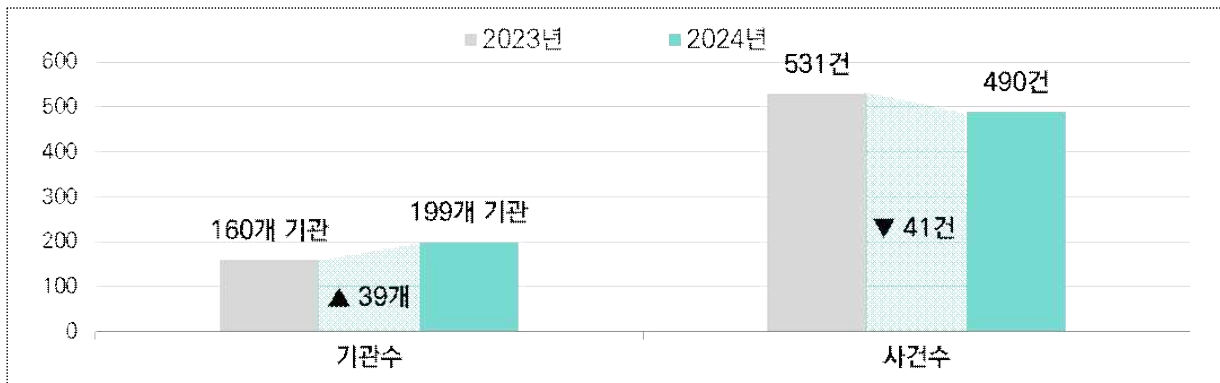
V

부패실태 평가 결과

부패사건 현황

- (발생 현황) 감점 대상 부패사건은 총 199개 기관(43.3%)의 490건으로, 전년(160개 기관, 531건) 대비 기관 수는 증가하였으나, 사건 수는 감소

< 전년 대비 부패실태 감점 기관 및 반영 사건수 변동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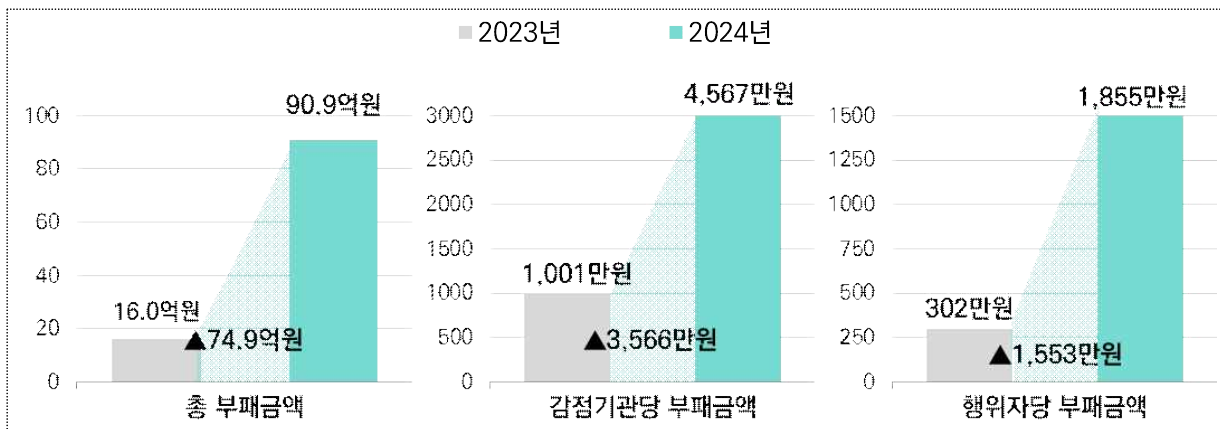


- (금액 규모) 감점 대상 사건의 총 부패금액*은 90억 8,789만원으로, 전년도 부패금액(16억 104만원) 대비 약 468% 증가

* 금품수수, 공금 유용·횡령 등 부패금액이 나타나는 사건 259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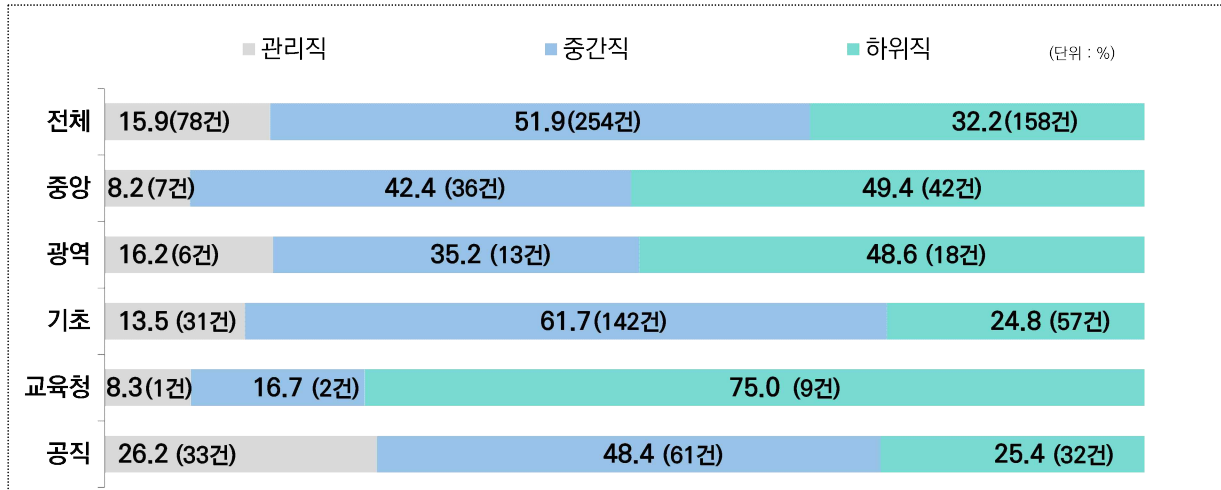
- 감점 적용 기관당 평균 부패금액은 4,567만원(전년의 약 4.6배 수준), 부패행위자 1인당 평균 부패금액은 1,855만원(전년의 약 6.1배 수준)

< 전년 대비 부패금액 규모 변동폭 >



- (직위별) 부패행위자 중 중간직(254건, 51.9%)의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하위직(158건, 32.2%), 관리직(78건, 15.9%) 순

< 부패행위자 직위별 현황 >



- (기관 유형별) 감점 적용기관당 평균 부패금액 규모는 광역자치단체 (4억 3,832만원)가 가장 크고, 교육청(14만원)이 가장 작음
- 부패행위자 1인당 평균 부패금액은 광역자치단체(1억 5,401만원)가 가장 많고, 교육청(11만원)이 가장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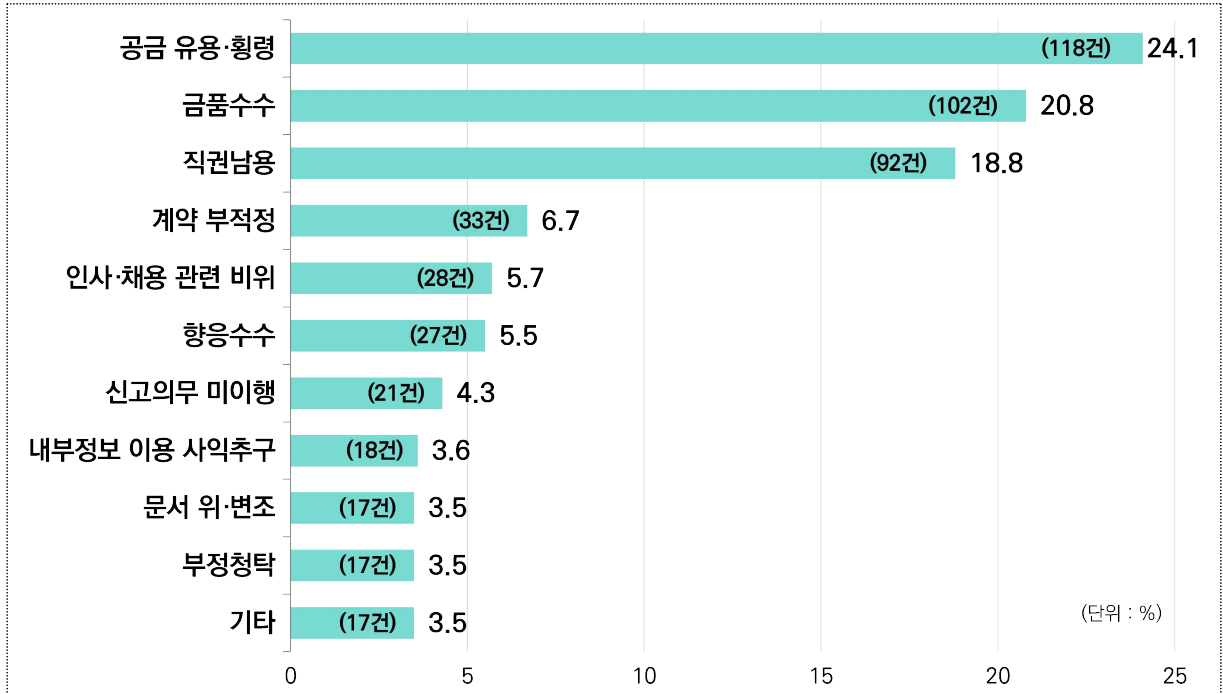
< 감점 대상 사건 기관별·행위자별 부패금액 >

구분	총 금액 (만원)	감점기관 수 (개)	감점기관당 부패금액 (만원)	부패 행위자수 (명)	행위자당 부패금액 (만원)
전체	908,789	199	4,567	490	1,855
중앙	77,683	24	3,237	85	914
광역	569,820	13	43,832	37	15,401
기초	156,252	101	1,547	230	679
교육청	130	9	14	12	11
공직	104,904	52	2,017	126	833

□ 부패행위 내용 분석

- (행위 유형별) 공금유용·횡령(24.1%, 118건), 금품수수(20.8%, 102건), 직권남용(18.8%, 92건) 등 3가지 유형이 전체 부패사건의 약 63.7% 차지

< 부패유형별 현황 >



- (시계열) 전년에 비해 공금 유용·횡령 관련 비위(전년 대비 -12.3%p)가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직권남용(+7.7%p)의 비율은 큰 폭으로 증가

< 전년대비 부패유형별 발생 현황 변동 폭 >

(단위 : %)

구분	계	공금 유용· 횡령	금품 수수	직권 남용	계약 부적정	인사· 채용 관련 비위	향응 수수	신고 의무 미이행	내부 정보 이용 사익 추구	문서 위· 변조	부정 청탁	기타
'23년	100.0	36.4	17.5	11.1	4.1	5.8	2.8	0.8	1.7	4.1	8.1	7.6
'24년	100.0	24.1	20.8	18.8	6.7	5.7	5.5	4.3	3.6	3.5	3.5	3.5
변동폭 (%p)	-	-12.3	+3.3	+7.7	+2.6	-0.1	+2.7	+3.5	+1.9	-0.6	-4.6	-4.1

- (행위자 직위별) 관리직은 직권남용(30.8%), 중간직(24.8%) 및 하위직(27.2%)은 공금유용·횡령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

< 행위자 직위별 부패유형 비율 >

(단위 : %)

구분	계	공금 유용· 횡령	금품 수수	직권 남용	계약 부적정	인사 채용 관련 비위	향응 수수	신고 의무 미이행	내부 정보 이용 사익 추구	문서 위· 변조	부정 청탁	기타
전체	100.0	24.1	20.8	18.8	6.7	5.7	5.5	4.3	3.6	3.5	3.5	3.5
관리직	100.0	15.4	24.4	<u>30.8</u>	5.1	2.6	6.4	1.3	1.3	2.6	9.0	1.1
중간직	100.0	<u>24.8</u>	20.9	19.7	5.5	7.9	5.5	3.9	2.8	3.9	2.0	3.1
하위직	100.0	<u>27.2</u>	19.0	11.4	9.5	3.8	5.1	6.3	6.3	3.2	3.2	5.0

- (기관 유형별) 중앙행정기관은 금품수수, 광역자치단체 및 공직유관 단체는 공금유용·횡령, 기초자치단체는 직권남용, 교육청은 계약 부적정 및 인사·채용 관련 비위의 발생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기관유형별 부패유형 비율 >

(단위 : %)

구분	계	공금 유용· 횡령	금품 수수	직권 남용	계약 부적정	인사 채용 관련 비위	향응 수수	신고 의무 미이행	내부 정보 이용 사익 추구	문서 위· 변조	부정 청탁	기타
전체	100.0	24.1	20.8	18.8	6.7	5.7	5.5	4.3	3.6	3.5	3.5	3.5
중앙	100.0	24.7	<u>30.6</u>	16.5	1.2	7.1	3.5	-	2.4	1.2	8.2	4.6
광역	100.0	<u>27.0</u>	24.3	13.5	-	-	21.6	2.7	2.7	2.7	5.4	0.1
기초	100.0	20.9	21.3	<u>23.5</u>	9.6	7.0	5.2	0.4	2.6	5.7	0.4	3.4
교육청	100.0	8.3	8.3	16.7	<u>25.0</u>	<u>25.0</u>	-	-	16.7	-	-	-
공직	100.0	<u>30.2</u>	13.5	13.5	5.6	2.4	3.2	15.1	5.6	1.6	5.6	3.7

□ 감점 규모 분석

○ 199개 기관은 부패공직자로 인해 평균 1.4점 감점 반영

- 1.0점 미만으로 감점 반영된 기관이 51.3% 차지, 3점 이상 감점을 많이 받은 기관은 22개 기관(11.0%)

< 감점 규모별 기관 분포표 >

구분	계	0.1~0.4	0.5~0.9	1~1.9	2~2.9	3~4.9	5~10
기관 수(개)	199	53	49	51	24	<u>14</u>	<u>8</u>
비율(%)	100.0	<u>26.7</u>	<u>24.6</u>	25.6	12.1	<u>7.0</u>	<u>4.0</u>

○ 전체 평가 대상 기관 대비 부패사건 감점 적용기관 비율(43.3%)은 전년(32.1%) 대비 11.2%p 증가

- 감점 적용기관당 평균 부패사건 수는 2.5건, 감점은 1.4점(전체 기관 기준 0.6점)으로 평균 사건 수는 감소(-0.8건)하였으나, 감점 규모는 증가(0.3점)

< 전년 대비 부패실태 감점 규모 변화 폭 >

구분	전체 기관수 (개)	감점 기관수 (개)	감점 적용기관 비율 (%)	전체 부패사건수 (건)	감점기관당 평균사건수 (건)	감점기관당 평균감점 (점)
'23년	498	160	32.1	531	3.3	1.1
'24년	460	199	43.3	490	2.5	1.4
변화 폭	-38	+39	+11.2%p	-41	-0.8	+0.3

- 감점 적용 기관당 평균 감점이 가장 큰 유형은 중앙행정기관 및 기초자치단체(각 -1.5점), 가장 작은 유형은 교육청(-0.2점)
- 감점 적용 부패사건 발생률은 광역자치단체(76.5%)가 가장 높고, 공직유관단체(33.8%)가 가장 낮은 수준

< 기관유형별 부패사건 발생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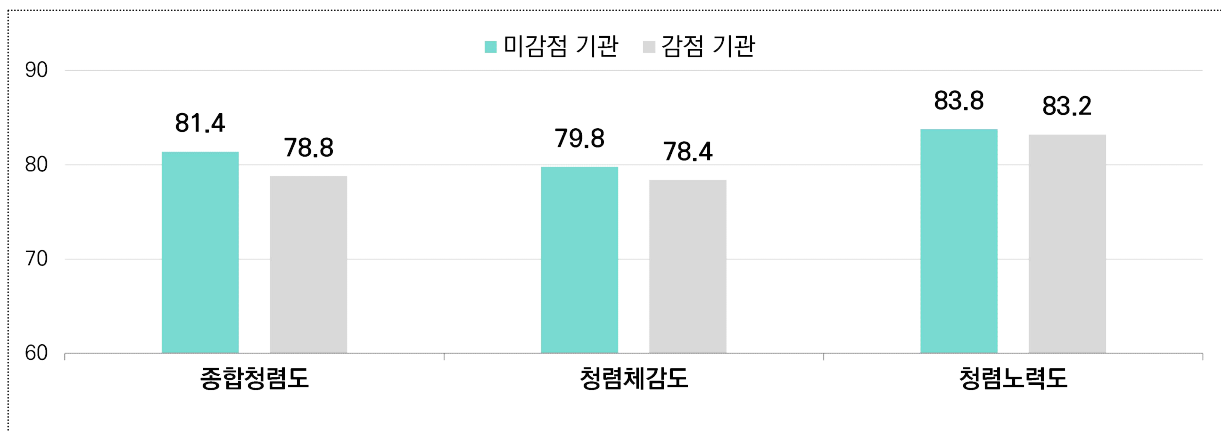
구분	전체 기관수 (개)	감점 기관수 (개)	발생률 (%)	전체 부패사건수 (건)	감점기관당 평균사건수 (건)	감점기관당 평균감점 (점)
전체	460	199	43.3	490	2.5	1.4
중앙	46	24	52.2	85	3.5	1.5
광역	17	13	76.5	37	2.8	1.3
기초	226	101	44.7	230	2.3	1.5
교육청	17	9	52.9	12	1.3	0.2
공직	154	52	33.8	126	2.4	1.4

□ 감점 여부와 청렴도간 관계 분석

- (종합청렴도) 부패실태 감점 기관의 평균은 78.8점으로 감점이 없는 기관의 평균(81.4점)보다 2.6점 낮게 나타남
- 부패실태 감점 기관은 감점이 없는 기관보다 청렴체감도(-1.4점) 및 청렴노력도(-0.6점)가 모두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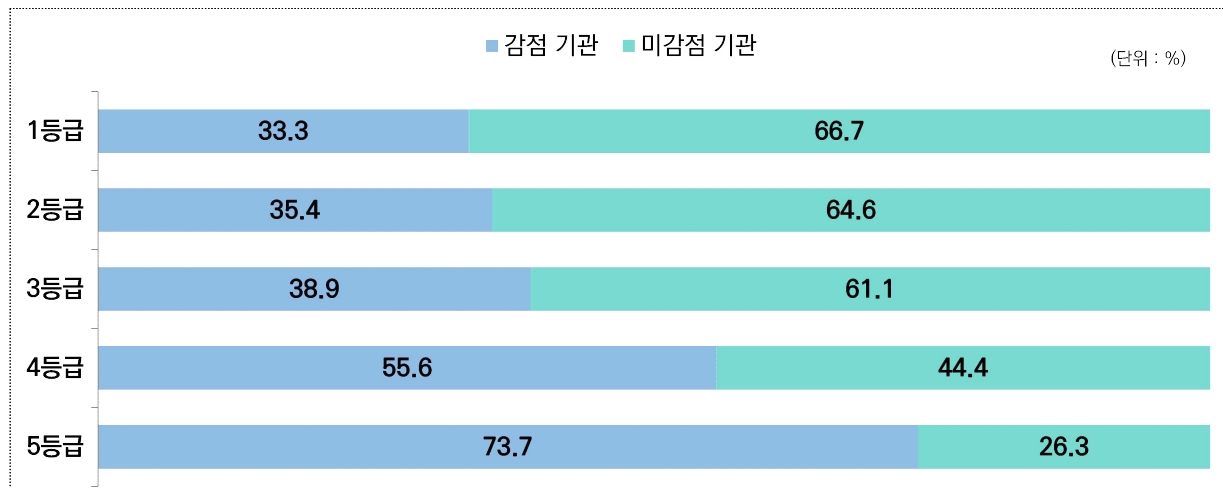
< 감점 여부별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청렴노력도 비교 >

(단위 : 점)



- (등급별 분석) 1~3등급 기관 대비 4~5등급 그룹에서 감점 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등급이 낮을수록 감점 기관 수의 비율이 높아지고, 특히 5등급은 감점 기관 수의 비율이 73.7%로 매우 높은 수준

< 종합청렴도 등급별 감점기관 비율 >



VI. 심층 분석

1. 평가영역항목별 관계

□ 노력도가 높을수록 청렴수준이 높아지는 강한 상관관계 존재

○ (상관관계 분석) '24년 청렴노력도 점수가 높을수록 '24년 종합청렴도 점수가 높아지는 양(+)의 상관관계가 강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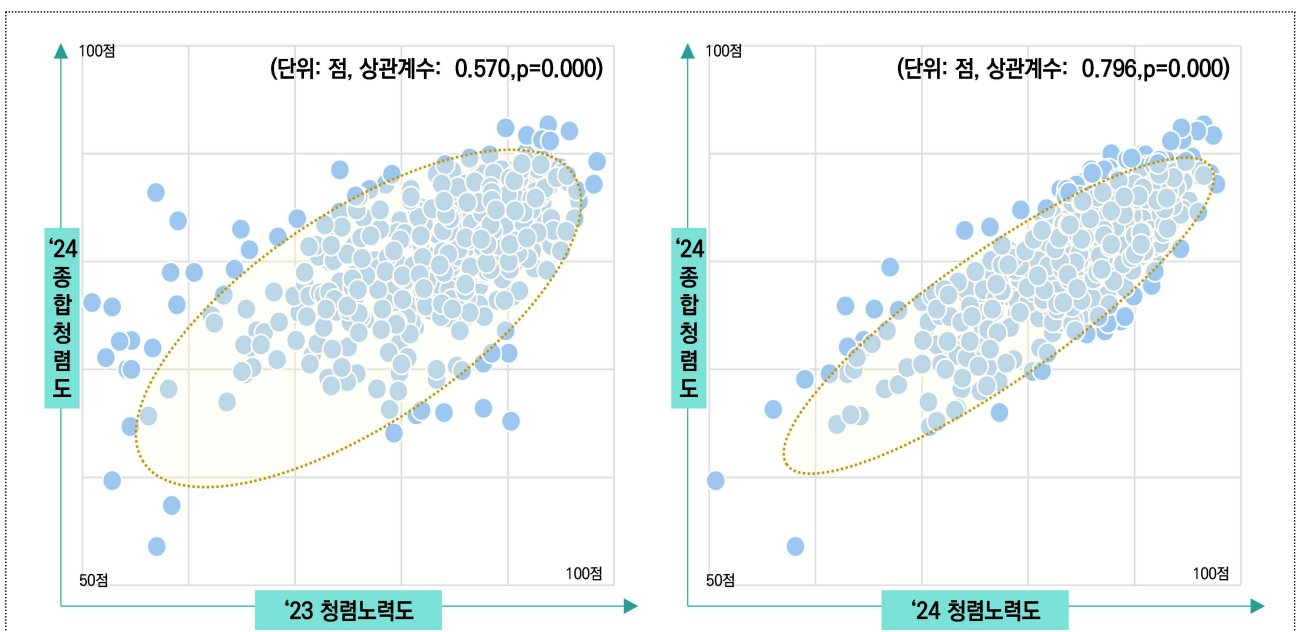
- (효과 지속성) '22년·'23년 청렴노력도 점수와 '24년 종합청렴도 점수의 상관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관의 반부패 시책 노력의 효과가 지속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

< 청렴노력도('22~'24년)와 종합청렴도('24년)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

구분		청렴노력도		
		'22년	'23년	'24년
'24년 종합청렴도	상관계수	0.600	0.570	0.796
	유의확률	0.000	0.000	0.000

※ 통계적으로 유의확률이 5% 이내($p < 0.05$)에 있을 때, 상관계수 0.4 이상은 보통 상관관계, 0.7 이상은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의미

< 청렴노력도('23년, '24년)와 종합청렴도('24년)간 상관관계 분포 >



□ 청렴컨설팅을 통한 청렴수준 향상 효과

- (시너지 효과) 기관특성·업무성격 등이 유사한 기관간 상호작용을 통해 공공부문 전반의 청렴수준을 더욱 끌어올리는 효과

※ 청렴컨설팅 : 청렴도 저조기관(4~5등급, 멘티)과 우수기관(1~2등급, 멘토)간 그룹멘토링 및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멘티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지원하고 멘토기관의 우수시책을 공유하려는 국민권익위의 지원 정책

- (멘토) '24년도 청렴컨설팅에 멘토('23년도 종합청렴도 1·2등급)로 참여한 11개 기관 중 7개 기관(63.6%)이 '24년도 종합청렴도 1·2등급 유지
- (멘티) '24년도 청렴컨설팅을 지원받은 22개 멘티기관 중 18개 기관(81.8%)의 종합청렴도 개선 효과

< '24년도 청렴컨설팅 멘티 기관의 종합청렴도 등급 변동 현황 >

(단위 : 개, %)

구분	전체	등급 상승		등급 유지	등급 하락
		2개 등급	1개 등급		
기관 수	22	4	14	4	0
비율	100.0	18.2	63.6	18.2	0.0

- (지속적 효과) '23년도 멘티 기관 중 65.2%가 '22년 대비 '24년도 종합 청렴도 등급이 상승하여 청렴컨설팅의 효과가 2년차에도 지속

< '23년도 청렴컨설팅 멘티 기관의 종합청렴도 등급 변동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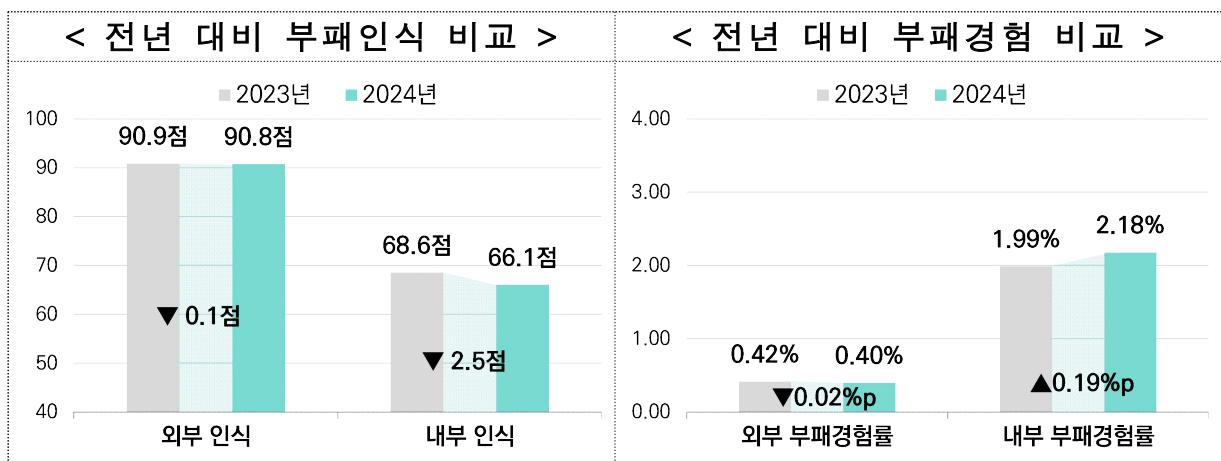
(단위 : 개, %)

구분	전체	등급 상승			등급 유지	등급 하락
		3개 등급	2개 등급	1개 등급		
기관 수	23	1	4	11	7	0
비율	100.0	4.3	17.4	47.8	30.4	0.0

2. 내부체감도 하락 요인 분석

□ 전년 대비 내부 직원의 부패인식과 부패경험률 악화

- (점수) 외부체감도(86.9점, 전년 대비 -0.1점)에 비해 내부체감도(60.8점, 전년 대비-2.5점)가 큰 폭으로 하락
- 내부 직원들의 부패인식 점수가 외부 민원인 대비 크게 하락(-2.5점)했고, 부패경험률(+0.19%p)은 전년 대비 증가



□ 기초자치단체에서 내부체감도 가장 큰 폭 하락

- 지방행정기관(광역·기초·교육청)을 중심으로 하락 폭이 컸으며, 특히 기초자치단체(-4.1점)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며 전체 내부체감도 점수 하락에 큰 영향
- 기초자치단체의 내부체감도는 '22년 청렴노력도 전수평가 이후 개선을 보이다 '24년에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하여 최근 3년 중 최저점수 기록('22 : 58.5점 → '23 : 59.1점 → '24 : 55.0점)
- 기초자치단체는 부패인식 점수의 하락폭(-3.3점)이 크고 경험률(+0.57%)도 증가('22 : 2.48% → '23 : 2.40% → '24 : 2.97%)하며 3%에 가까운 경험률을 기록

< 기관 유형별 내부체감도 및 각 영역별 점수 >

(단위 : 점,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점수 변화 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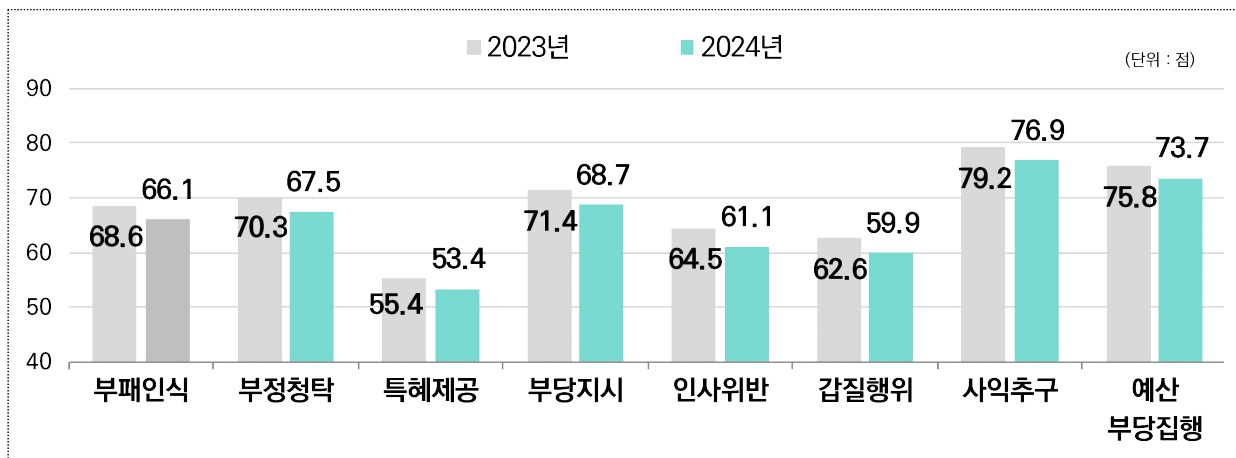
구분	내부체감도	부패인식	부패경험률
전체	60.8 (▼2.5)	66.1 (▼2.5)	2.18 (▲0.19%p)
중앙행정기관	66.1 (▲1.8)	69.5 (▼0.2)	1.34 (▼0.63%p)
광역자치단체	64.3 (▼1.7)	68.1 (▼2.1)	1.63 (▲0.03%p)
기초자치단체	55.0 (▼4.1)	61.8 (▼3.3)	2.97 (▲0.57%p)
교육청	68.0 (▼1.9)	71.2 (▼2.0)	1.38 (▲0.07%p)
공직유관단체	66.4 (▼0.9)	70.5 (▼1.4)	1.75 (▼0.03%p)

□ 인사·채용 분야의 부패인식·부패경험 동반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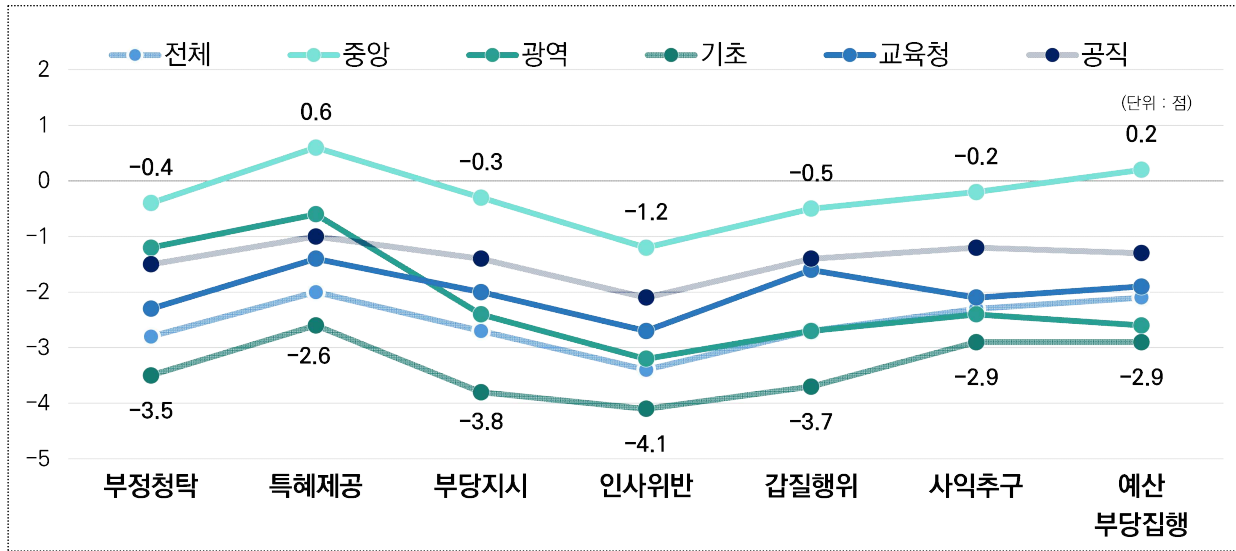
- 특혜제공(53.4점), 갑질행위(59.9점), 인사위반(61.1점) 등이 전체 부패 인식 점수 대비 낮은 수준이며, 특히 인사위반 점수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3.4점)

- (기관 유형별) 모든 기관 유형에서 인사위반 항목의 하락폭이 가장 컸고, 기초자치단체의 인사위반 항목 점수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

< 내부체감도 부패인식 항목별 증감 >



< 내부체감도 부패인식 항목 및 기관 유형별 증감 >



- **(경험)** 부패경험 응답자 대상으로 세부 부패경험 업무분야에 대해 참고로 조사한 결과, 전체 부패경험 응답사례(2,337개) 중 **44.6%**(1,043건)가 승진, 전보·파견, 성과 및 근무성적평가 등 '인사업무'와 관련된 업무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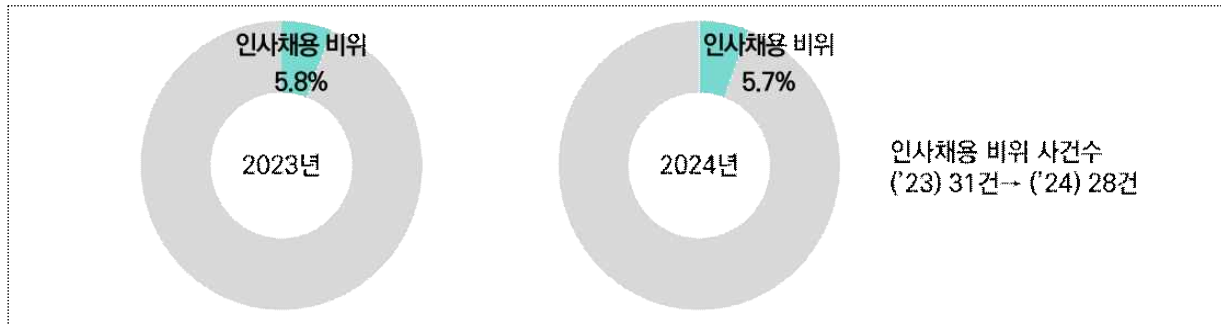
< 부패경험 관련 업무 >

구분	응답사례* 수(개)	비중(%)
전체	2,337	100
승진	426	18.2
전보·파견(교육)	188	8.0
성과 및 근무성적평가	429	18.4
상훈	108	4.6
예산청구 및 집행	417	17.8
일반 행정업무 처리	769	32.9

* 중복 선택 가능, 부패경험 총 응답자 수 1,39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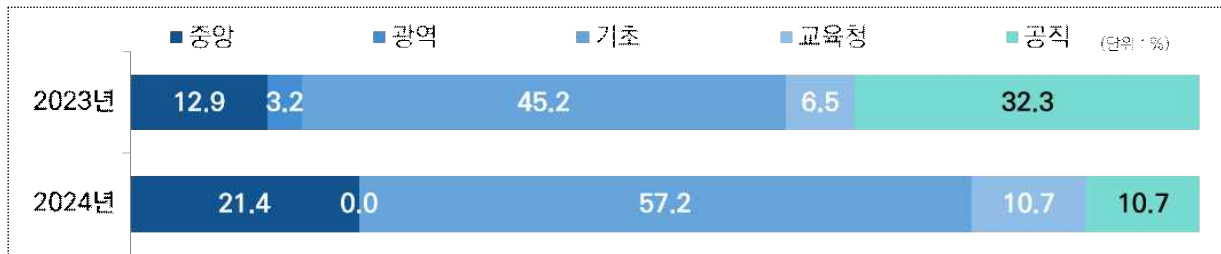
- (사건) 부패실태 감점으로 반영된 부패사건(490건) 중 ‘인사·채용’ 관련 사안(28건)은 전년 대비 발생 건수(-3건)와 비율(-0.1%p)은 유사한 수준

< 전년 대비 ‘인사·채용’ 관련 감점사건 변동 현황 >



- (기관 유형별) 기초자치단체의 인사·채용 관련 비위는 14건에서 16건으로 증가('23년, 14건 → '24년, 16건)

< 기관 유형별 인사·채용 관련 비위 발생 현황 >



□ 채용비리 발생 공직유관단체의 내부체감도 특히 저조

○ 공정채용 위반 사례가 적발된 40개 기관(위반사례 총 69건)의 내부 체감도 점수는 미적발기관 대비 낮음

- 적발기관은 모든 세부 항목에서 미적발기관 대비 점수가 낮음

※ '2024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국민권익위, '24.12월)'를 참고하여 분석

< 채용비리 적발 여부별 점수 비교 >

(단위 : 개, 점)

구분	기관수 (비율)	내부체감도 점수							
		내부 체감도	부정 청탁	특혜 제공	부당 지시	인사 위반	갑질 행위	사익 추구	예산 부당 집행
계	137 (100.0)	66.8	74.0	59.3	73.2	67.0	63.9	80.4	76.0
적발 기관	40 (29.2)	65.7	71.8	57.2	71.3	65.2	<u>61.4</u>	79.1	75.1
미적발 기관	97 (70.8)	67.2	74.9	60.2	74.1	67.8	<u>65.0</u>	81.0	76.4
GAP (적발-미적발)	-	▼1.5	▼3.1	▼3.0	▼2.8	▼2.6	▼3.6	▼1.9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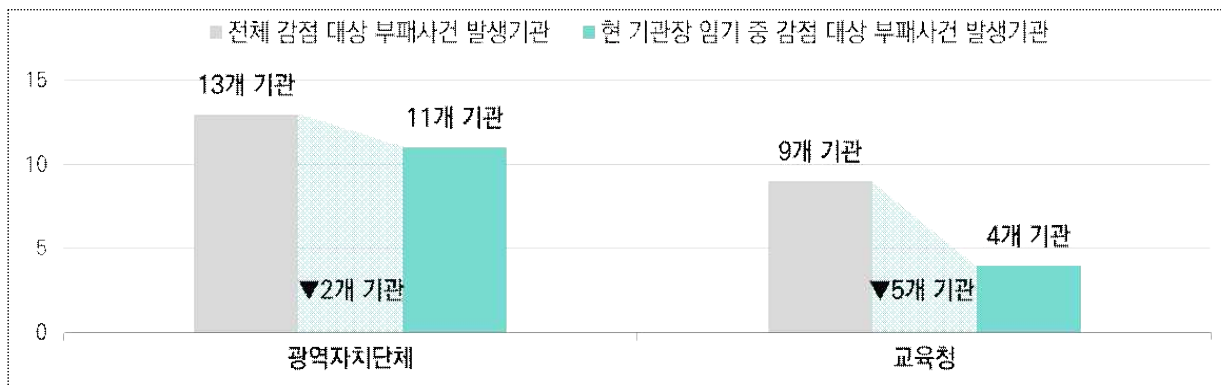
※ '2024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인 154개 공직유관단체 중 17개는 국민권익위의 '2024 채용비리 전수조사' 대상에 미해당

3. 부패실태 분야 심층분석

□ 기관장 임기와 감점 대상 부패사건 간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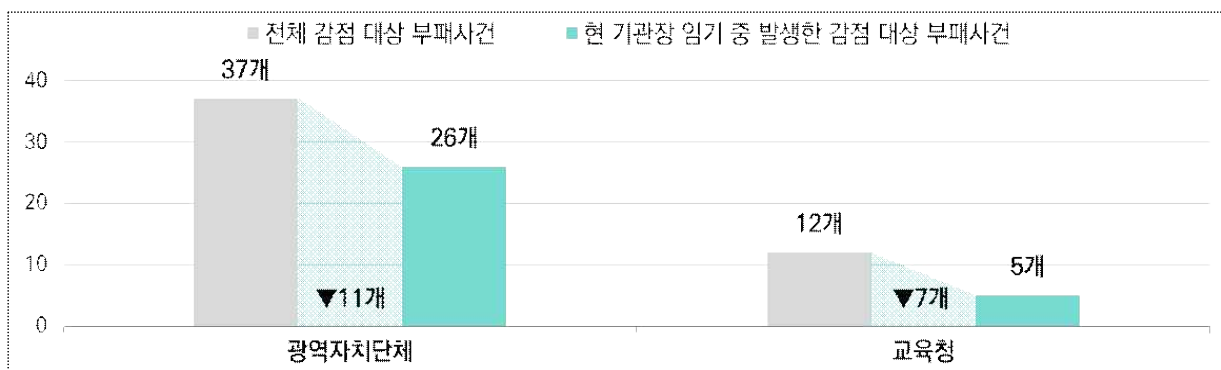
- (발생 기관) 광역자치단체·교육청 유형 중 감점 대상 부패사건이 발생한 기관은 22개이고, 이 중 현 기관장 임기 중 감점 대상 부패사건이 발생한 기관은 15개

< 기관장 임기에 따른 감점 대상 부패사건 발생기관 변동 >



- (발생 사건) 광역자치단체·교육청 유형의 전체 감점 대상 부패사건은 49건이고, 이 중 현 기관장 임기 중 발생한 감점 대상 부패사건은 31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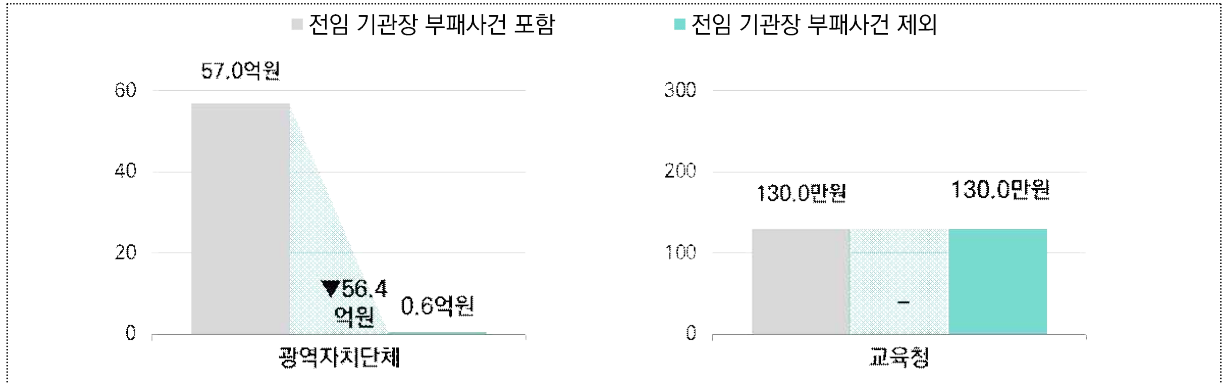
< 기관장 임기에 따른 감점 대상 부패사건 발생 변동 >



- (금액 규모) 광역자치단체·교육청 유형의 감점 대상 부패사건의 부패 금액*은 56억 9,950만 원이고, 이 중 현 기관장 임기 중 발생한 감점 대상 부패사건의 부패금액은 6,501만 원(약 56억 3,449만원 감소)

* 금품수수, 공금 유용·횡령 등 부패금액이 나타나는 사건 기준

< 기관장 임기에 따른 부패금액 변동 >



□ 기관장 임기 중 발생 부패사건과 종합청렴도 간 관계

- '24년 부패실태 평가에 감점 반영된 부패사건 중 현 기관장 임기 중 부패사건만 적용하여 종합청렴도 점수의 변동을 분석 시 변동 폭은 크지 않음
- 광역자치단체 유형 17개 기관 중 2개 기관 등급 변동, 교육청 유형 17개 기관은 등급 변동 없음

< 기관장 임기에 따른 종합청렴도 등급 변동 >

구분	광역자치단체(17)	교육청(17)
등급상승	경기도	-
등급하락	울산광역시	-

※ 부패사건 변동이 없더라도 다른 기관의 점수 변화로 등급선이 변경되는 경우 등급이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음

□ 부패행위 시부터 징계처분 시까지 평균 기간 분석

- 광역자치단체·교육청 유형 감점 대상 부패사건(49건)의 부패행위 시부터 징계처분 시까지 평균 기간은 563일
- 200일 이상 400일 미만(34.7%) 소요된 건이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800일 이상(26.5%) 소요된 건이 많음

< 감점 대상 부패사건의 징계처분 시까지 소요 기간 분포 >

계	200일 미만	400일 미만	600일 미만	800일 미만	800일 이상
100%	12.2%	<u>34.7%</u>	18.4%	8.2%	26.5%

- 기관장 연차별로는 현 기관장 1년차 때 발생한 감점 대상 부패사건 (40.8%)이 가장 많았고, 전 기관장 2년차 때 발생한 감점 대상 부패사건(4.1%)이 가장 적었음

< 기관장 연차별 감점 대상 부패사건의 분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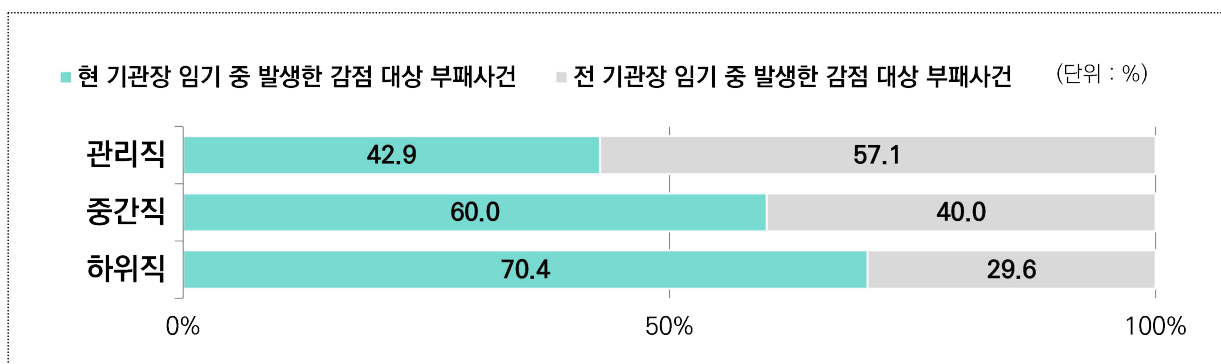
합계	전 기관장 임기				현 기관장 임기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100.0%	6.1%	4.1%	12.2%	14.3%	<u>40.8%</u>	22.5%	-	-

- ※ 현 기관장은 '22. 7월 임기가 시작되었으며(보궐선거 제외), '24년 기준 3년차 재임 중
- (직위별) 광역자치단체·교육청 유형 감점 대상 부패사건의 부패행위 시부터 징계처분 시까지 평균 기간을 직위별로 분석한 결과, 관리직 (886일)이 가장 길고, 하위직(487일)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평균 기간이 긴 직위일수록 전체 감점 대상 부패사건 중 전 기관장 임기 때 발생한 감점 대상 부패사건의 비율도 증가

< 감점 대상 부패사건의 징계처분 시까지 평균 기간(직위별) >

전 체	관리직	중간직	하위직
563일	<u>886일</u>	549일	487일

< 직위별 감점 대상 부패사건 현황 >



-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관리직 관련 사건(948일), 교육청에서는 중간직 관련 사건(746일)의 평균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남

< 감점 대상 부패사건의 징계처분 시까지 평균 기간(기관 유형/직위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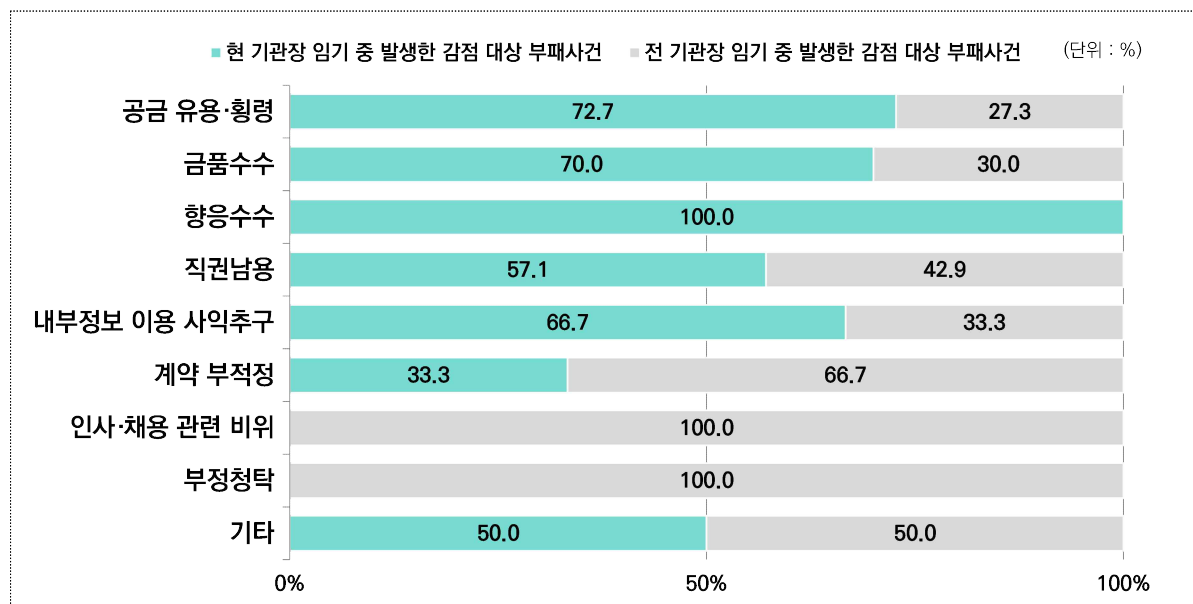
구분	전 체	관리직	중간직	하위직
광역자치단체	562일	948일	518일	464일
교육청	567일	516일	746일	533일

- (유형별) 광역자치단체·교육청 유형 감점 대상 부패사건의 부패행위 시부터 징계처분 시까지 평균 기간을 부패행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부정청탁의 평균 기간(1,216일)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남

< 감점 대상 부패사건의 징계처분 시까지 평균 기간(부패행위 유형별) >

전 체	공금 유용· 횡령	금품 수수	향응 수수	직권 남용	내부정보 이용 사익추구	계약 부적정	인사· 채용 관련비위	부정 청탁	기타
563일	425일	667일	335일	250일	483일	840일	651일	1,216일	1,172일

< 부패행위 유형별 감점 대상 부패사건 현황 >



-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부정청탁(1,216일), 금품수수(715일) 관련 사건, 교육청에서는 계약 부적정(840일), 인사·채용 관련 비위(651일) 관련 사건의 평균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남

< 감점 대상 부패사건의 징계처분 시까지 평균 기간(기관 유형/부패행위 유형별) >

구분	전 체	공금 유용 횡령	금품 수수	향응 수수	직권 남용	내부 정보 이용 사익 추구	계약 부적정	인사 채용 관련 비위	부정 청탁	기타
광역자치 단체	562일	456일	<u>715일</u>	335일	418일	238일	-	-	<u>1,216일</u>	1,172일
교육청	567일	117일	241일	-	381일	606일	<u>840일</u>	<u>651일</u>	-	-

VII. 향후 계획

- 대상기관 평가결과 공개(~'25. 1월, 기관 홈페이지) 및 공개 결과 제출(~'25. 3월)
 -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결과발표 후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
- 우수기관 및 담당자 유공 포상('25. 2월 예정)
-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시 취약분야 분석·활용(~'25. 5월)

기관 유형별 종합청렴도 등급표

1. 중앙행정기관 I (장관급) : 25개 기관

※ 기관명 가나다순, 괄호 안은 '23년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1 년	고용노동부 (▲1등급) 기획재정부 (▲1등급) 해양수산부 (▲2등급)	금융위원회 (-)	-	부패 실태 평가 (감점)
2 년	공정거래위원회 (▼1등급) 국가보훈부 (▲1등급) 법무부 (▲2등급) 여성가족부 (▲2등급) 중소벤처기업부 (-) 통일부 (▲2등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등급) 고용노동부 (-) 공정거래위원회 (-) 국가보훈부 (-) 국방부 (▲2등급) 기획재정부 (-) 농림축산식품부 (-) 통일부 (-) 해양수산부 (▲1등급)	고용노동부 (-) 공정거래위원회 (-) 국가보훈부 (▲1등급) 국무조정실 (-) 기획재정부 (-) 법무부 (▲2등급) 중소벤처기업부 (-) 통일부 (▲3등급) 해양수산부 (-) 행정안전부 (-)	
3 년	검찰청 (-) 교육부 (▲1등급) 국무조정실 (▼1등급) 국방부 (-) 금융위원회 (▼1등급) 농림축산식품부 (-) 행정안전부 (-)	검찰청 (▼1등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토교통부 (▲2등급) 방송통신위원회 (▼1등급) 법무부 (▲1등급) 여성가족부 (▲1등급) 중소벤처기업부 (▼1등급) 환경부 (▼1등급)	교육부 (-) 국방부 (-) 국토교통부 (▼1등급) 농림축산식품부 (-) 방송통신위원회 (▲1등급)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	
4 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등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등급) 국토교통부 (-) 방송통신위원회 (▼1등급) 보건복지부 (▼1등급) 외교부 (-) 환경부 (▼2등급)	교육부 (▼1등급) 문화체육관광부 (▼1등급) 보건복지부 (▼1등급) 외교부 (▼1등급) 행정안전부 (▼1등급)	검찰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등급) 금융위원회 (▼2등급) 산업통상자원부 (▲1등급) 외교부 (-) 환경부 (▼1등급)	
5 년	문화체육관광부 (▼2등급) 산업통상자원부 (-)	국무조정실 (▼2등급) 산업통상자원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등급) 문화체육관광부 (▼2등급)	

2. 중앙행정기관Ⅱ (차관급) : 21개 기관

※ 기관명 가나다순, 괄호 안은 '23년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 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1 등급	-	농촌진흥청 (▲1등급) 통계청 (▲1등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	부패 실태 평가 (감점) - 부패 실태 평가 (감점)
2 등급	농촌진흥청 (-) 법제처 (-) 인사혁신처 (-) 조달청 (▲1등급) 질병관리청 (▼1등급) 통계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등급)	인사혁신처 (-) 조달청 (▲1등급)	국세청 (-) 기상청 (-) 법제처 (-) 인사혁신처 (-) 조달청 (-) 질병관리청 (-)	
3 등급	국세청 (-) 기상청 (▼1등급) 방위사업청 (-) 병무청 (▲1등급) 산림청 (▲1등급) 새만금개발청 (▲1등급) 식품의약품안전처 (▲1등급) 해양경찰청 (-)	= 관세청 (-) 국세청 (▲1등급) 법제처 (▼1등급) 병무청 (-) 새만금개발청 (▲2등급) 소방청 (▼1등급) 원자력안전위원회 (-) 질병관리청 (▼1등급) 특허청 (-) 해양경찰청 (-)	+ 경찰청 (-) 농촌진흥청 (▼1등급) 방위사업청 (▼1등급) 병무청 (▲2등급) 산림청 (-) 식품의약품안전처 (-) 통계청 (-) 해양경찰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등급)	
4 등급	경찰청 (-) 관세청 (▼2등급) 국가유산청 (-) 소방청 (-) 원자력안전위원회 (▼1등급) 특허청 (-)	국가유산청 (▼1등급) 기상청 (▼1등급) 산림청 (-)	관세청 (▼2등급) 국가유산청 (-) 새만금개발청 (▼1등급)	
5 등급	-	경찰청 (▼1등급) 방위사업청 (▼1등급) 식품의약품안전처 (-)	소방청 (▼2등급) 원자력안전위원회 (▼2등급) 특허청 (-)	

3. 광역자치단체 : 17개 기관

※ 기관명 가나다순, 괄호 안은 '23년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 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1 등급	경상남도 (▲2등급) 서울특별시 (▲2등급)	경상남도 (▲3등급) 서울특별시 (▲3등급)	-	부패 실태 평가 (감점)
2 등급	경상북도 (-) 부산광역시 (▲1등급)	경상북도 (▲2등급) 부산광역시 (-) 충청남도 (-)	경기도 (▲2등급) 경상남도 (-) 경상북도 (▼1등급) 광주광역시 (▲1등급) 부산광역시 (-) 서울특별시 (▲1등급) 제주특별자치도 (-)	
3 등급	광주광역시 (-) 대구광역시 (▼1등급) 세종특별자치시 (▼1등급) 울산광역시 (-) 전라남도 (▲1등급) 전북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1등급) 충청남도 (-)	강원특별자치도 (▲2등급)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1등급) 인천광역시 (▲2등급) 전북특별자치도 (-) 충청북도 (▼1등급)	대구광역시 (▼1등급) 세종특별자치시 (▼1등급) 울산광역시 (-) 전라남도 (▲1등급) 전북특별자치도 (-) 충청남도 (-)	
4 등급	강원특별자치도 (-) 경기도 (▼1등급) 대전광역시 (-) 인천광역시 (▲1등급)	경기도 (▼2등급) 대전광역시 (▼2등급) 세종특별자치시 (▼2등급) 전라남도 (-) 제주특별자치도 (▼1등급)	강원특별자치도 (▲1등급) 대전광역시 (-) 인천광역시 (-)	
5 등급	충청북도 (▼2등급)	광주광역시 (▼2등급)	충청북도 (▼1등급)	

4. 기초자치단체 I (시) : 75개 기관

※ 기관명 가나다순, 괄호 안은 '23년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 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1 비교	-	경남 김해시 (▲1등급) 전북 전주시 (▲1등급)	-		
2 비교	강원 강릉시 (▲2등급) 경기 구리시 (▲2등급) 경기 김포시 (▲1등급) 경기 부천시 (-) 경기 수원시 (▲1등급) 경기 시흥시 (▲1등급) 경기 안산시 (-) 경기 안양시 (-) 경기 양주시 (▲1등급) 경기 여주시 (▼1등급) 경기 용인시 (▲1등급) 경기 이천시 (▲1등급) 경기 파주시 (▲1등급) 경기 포천시 (-) 경남 거제시 (-) 경남 김해시 (-) 경남 밀양시 (-) 경남 진주시 (▲1등급) 경남 창원시 (-) 경북 경주시 (▼1등급) 경북 구미시 (▲1등급) 전남 순천시 (-) 전북 익산시 (▲1등급) 전북 전주시 (-) 전북 정읍시 (-) 충남 논산시 (▲2등급) 충남 당진시 (-) 충남 보령시 (▲1등급) 충남 서산시 (▲1등급) 충남 아산시 (-) 충남 천안시 (▲1등급)	= 강원 강릉시 (▲2등급) 경기 고양시 (-) 경기 구리시 (-) 경기 부천시 (-) 경기 성남시 (-) 경기 수원시 (-) 경기 시흥시 (▲2등급) 경기 안양시 (▲1등급) 경기 여주시 (-) 경기 용인시 (-) 경기 이천시 (▲1등급) 경기 파주시 (▲1등급) 경기 포천시 (▲1등급) 경기 하남시 (-) 경남 거제시 (▲1등급) 경남 밀양시 (▲1등급) 경남 양산시 (-) 경남 진주시 (-) 경남 창원시 (-) 경북 경산시 (▲3등급) 경북 경주시 (-) 경북 구미시 (-) 경북 영천시 (▲1등급) 전남 여주시 (-) 전남 목포시 (▲3등급) 전남 익산시 (▲2등급) 충남 논산시 (▲2등급) 충남 당진시 (-) 충남 서산시 (▲1등급) 충남 아산시 (-) 충남 천안시 (▲1등급) 충북 청주시 (▲2등급)	+	- 강원 강릉시 (▲2등급) 경기 김포시 (▲1등급) 경기 부천시 (-) 경기 시흥시 (▲1등급) 경기 안산시 (-) 경기 안성시 (▲1등급) 경기 안양시 (-) 경기 양주시 (-) 경기 여주시 (-) 경기 용인시 (▲1등급) 경기 포천시 (-) 경남 김해시 (-) 경남 밀양시 (-) 경남 사천시 (-) 경남 양산시 (-) 경남 진주시 (-) 경남 창원시 (-) 경북 경산시 (▲3등급) 경북 경주시 (-) 경북 구미시 (-) 전남 나주시 (-) 전남 목포시 (▲3등급) 전남 순천시 (-) 전북 김제시 (-) 전북 정읍시 (-) 충남 당진시 (▲1등급) 충남 보령시 (▲1등급) 충남 서산시 (▲1등급) 충남 아산시 (▲1등급)	부패 실태 평가 (감점)
3 비교	강원 동해시 (▼1등급) 강원 춘천시 (-) 경기 고양시 (▼1등급) 경기 광명시 (▼1등급) 경기 군포시 (-) 경기 동두천시 (-) 경기 성남시 (-) 경기 안성시 (-) 경기 오산시 (▼1등급) 경기 의왕시 (-) 경기 의정부시 (-) 경기 하남시 (-)	강원 동해시 (▼1등급) 강원 속초시 (-) 강원 원주시 (▲1등급) 강원 춘천시 (▼1등급) 강원 태백시 (▲2등급) 경기 과천시 (▼1등급) 경기 군포시 (-) 경기 김포시 (-) 경기 안산시 (-) 경기 안성시 (▼1등급) 경기 양주시 (▲2등급) 경기 오산시 (▼1등급)	강원 동해시 (-) 강원 속초시 (▲1등급) 강원 춘천시 (-) 경기 고양시 (▼1등급) 경기 광명시 (-) 경기 구리시 (▲1등급) 경기 남양주시 (-) 경기 동두천시 (▲1등급) 경기 성남시 (-) 경기 수원시 (▲1등급) 경기 오산시 (▼1등급) 경기 의왕시 (-)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3 단계	경기 화성시 (▼1등급) 경남 사천시 (▼2등급) 경남 양산시 (▼1등급) 경북 경산시 (▲1등급) 경북 김천시 (▲1등급) 경북 상주시 (▼1등급) 경북 영천시 (-) 전남 광양시 (▲1등급) 전남 나주시 (-) 전남 여수시 (▼1등급) 전북 김제시 (▼1등급) 충북 청주시 (-) 충북 충주시 (-)	경기 의왕시 (▲1등급) 경기 의정부시 (▲1등급) 경남 통영시 (▼1등급) 경북 구미시 (▲1등급) 경북 김천시 (▲2등급) 경북 상주시 (▼1등급) 전남 광양시 (-) 전북 정읍시 (▼1등급) 충남 공주시 (-) 충남 보령시 (▲1등급) 충북 충주시 (▲1등급)	경기 의정부시 (▼1등급) 경기 이천시 (▲1등급) 경기 파주시 (-) 경기 평택시 (-) 경기 하남시 (-) 경기 화성시 (-) 경남 거제시 (▼1등급) 경북 김천시 (▼1등급) 경북 영천시 (-) 전북 익산시 (▼1등급) 전북 전주시 (-) 충남 논산시 (-) 충남 천안시 (▲1등급) 충북 청주시 (-) 충북 충주시 (-)	부패 실태 평가 (감점)
	강원 속초시 (-) 강원 원주시 (-) 경기 과천시 (▼1등급) 경기 광주시 (▼1등급) 경기 남양주시 (-) 경기 평택시 (▼1등급) 경남 통영시 (▼2등급) 경북 안동시 (-) 전남 목포시 (▲1등급) 충남 계룡시 (-) 충남 공주시 (▲1등급) 충북 제천시 (-)	= 경기 광명시 (▼2등급) 경기 광주시 (-) 경기 남양주시 (▼1등급) 경기 동두천시 (▼2등급) 경기 평택시 (▼1등급) 경기 화성시 (▼2등급) 경남 사천시 (▼3등급) 경북 안동시 (-) 경북 포항시 (▼1등급) 전남 순천시 (-) 전북 김제시 (▼2등급) 충남 계룡시 (-)	+	
	강원 삼척시 (-) 강원 태백시 (-) 경북 문경시 (-) 경북 영주시 (▼2등급) 경북 포항시 (▼2등급) 전북 군산시 (▼1등급) 전북 남원시 (-)	강원 삼척시 (▼2등급) 경북 경산시 (▼3등급) 경북 문경시 (-) 경북 영주시 (▼1등급) 전남 나주시 (▼2등급) 전남 목포시 (▼1등급) 전북 군산시 (-) 전북 남원시 (-) 충북 제천시 (▼1등급)	강원 삼척시 (-) 강원 원주시 (▼1등급) 강원 태백시 (-) 경기 과천시 (▼2등급) 경북 문경시 (-)	

5. 기초자치단체Ⅱ (군) : 82개 기관

※ 기관명 가나다순, 괄호 안은 '23년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 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1 등급	경남 산청군 (▲1등급) 대구 군위군 (▲1등급) 전남 보성군 (-) 전북 고창군 (▲2등급) 충남 부여군 (-)	부산 기장군 (-) 충남 예산군 (▲1등급) 충북 증평군 (▲2등급) 충북 진천군 (-)	경북 성주군 (▲1등급)	부패 실태 평가 (감점)
2 등급	강원 양양군 (▲3등급) 강원 평창군 (▲1등급) 강원 횡성군 (▲1등급) 경기 연천군 (▲2등급) 경남 남해군 (-) 경남 의령군 (▲1등급) 경남 하동군 (-) 경남 함안군 (-) 경북 성주군 (-) 경북 예천군 (▼1등급) 경북 칠곡군 (-) 대구 달성군 (-) 부산 기장군 (-) 전남 강진군 (▲1등급) 전남 담양군 (▲1등급) 전남 완도군 (▲1등급) 전남 진도군 (-) 전북 완주군 (▲1등급) 충남 예산군 (-) 충남 청양군 (▲1등급) 충남 홍성군 (-) 충북 옥천군 (-) 충북 음성군 (-) 충북 증평군 (▲1등급) 충북 진천군 (▼1등급)	= 강원 양구군 (-) 강원 양양군 (▲1등급) 강원 평창군 (-) 강원 홍천군 (▲1등급) 강원 횡성군 (▲2등급) 경기 연천군 (-) 경남 산청군 (-) 경남 하동군 (-) 경남 함안군 (-) 경남 합천군 (▲2등급) 경북 고령군 (▲2등급) 경북 예천군 (▼1등급) 대구 군위군 (-) 전남 강진군 (-) 전남 담양군 (▲1등급) 전남 보성군 (▼1등급) 전남 진도군 (-) 전북 고창군 (▲1등급) 전북 완주군 (▲1등급) 전북 임실군 (▲1등급) 전북 장수군 (▲2등급) 전북 진안군 (▲2등급) 충남 부여군 (-) 충남 청양군 (-) 충북 괴산군 (-) 충북 영동군 (▲1등급) 충북 옥천군 (▼1등급) 충북 음성군 (-)	+ 강원 평창군 (▲1등급) 경기 가평군 (▲2등급) 경기 양평군 (-) 경남 남해군 (-) 경남 산청군 (-) 경남 의령군 (-) 경남 창녕군 (-) 경남 하동군 (-) 경남 함안군 (▲1등급) 경북 칠곡군 (-) 대구 군위군 (-) 대구 달성군 (-) 전남 고흥군 (▲1등급) 전남 담양군 (▲1등급) 전남 보성군 (-) 전남 신안군 (▲3등급) 전남 장성군 (-) 전남 진도군 (▲1등급) 전남 해남군 (-) 전남 화순군 (▲1등급) 전북 고창군 (▲1등급) 전북 부안군 (-) 충남 금산군 (-) 충남 부여군 (-) 충남 서천군 (-) 충남 홍성군 (-) 충북 음성군 (-)	
3 등급	강원 고성군 (▲1등급) 강원 영월군 (▲2등급) 강원 홍천군 (-) 경기 가평군 (▲1등급) 경기 양평군 (▼1등급) 경남 고성군 (-) 경남 창녕군 (▼1등급) 경남 합천군 (-) 경북 고령군 (-) 경북 영덕군 (▲1등급) 경북 청도군 (-) 인천 옹진군 (▲1등급)	강원 고성군 (-) 강원 정선군 (▲1등급) 강원 철원군 (▼1등급) 강원 화천군 (-) 경기 가평군 (▲1등급) 경남 남해군 (▼1등급) 경남 의령군 (▲2등급) 경남 함양군 (▲2등급) 경북 성주군 (-) 경북 영덕군 (▲1등급) 경북 울진군 (▲1등급) 경북 청도군 (▲1등급)	강원 양양군 (▲2등급) 강원 영월군 (▲1등급) 강원 인제군 (-) 강원 횡성군 (-) 경기 연천군 (▲1등급) 경남 거창군 (▼1등급) 경남 고성군 (-) 경남 합천군 (-) 경북 고령군 (-) 경북 영덕군 (-) 경북 예천군 (▼1등급) 경북 울릉군 (▲1등급)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3 년 간	전남 고흥군 (▼1등급) 전남 구례군 (-) 전남 신안군 (▲2등급) 전남 장성군 (▼1등급) 전남 해남군 (-) 전남 화순군 (-) 전북 무주군 (-) 전북 부안군 (▼1등급) 전북 순창군 (▲2등급) 전북 임실군 (-) 충남 금산군 (-) 충남 서천군 (▼1등급) 충북 괴산군 (-) 충북 영동군 (▲1등급)	대구 달성군 (-) 울산 울주군 (-) 인천 옹진군 (-) 전남 곡성군 (-) 전남 구례군 (-) 전남 신안군 (▲1등급) 전남 완도군 (▲1등급) 전북 부안군 (-) 전북 순창군 (-) 충남 홍성군 (▼1등급) 충북 보은군 (▼1등급)	경북 의성군 (-) 경북 청도군 (-) 부산 기장군 (-) 인천 강화군 (-) 인천 옹진군 (▲1등급) 전남 강진군 (-) 전남 구례군 (-) 전남 영광군 (▼1등급) 전남 완도군 (▼1등급) 전남 장흥군 (-) 전남 함평군 (▼1등급) 전북 무주군 (▲1등급) 전북 순창군 (▲2등급) 전북 완주군 (-) 전북 진안군 (-) 충남 예산군 (▼1등급) 충남 청양군 (-) 충북 단양군 (▲1등급) 충북 옥천군 (-) 충북 증평군 (-) 충북 진천군 (▼1등급)	부패 실태 평가 (감점)
4 년 간	강원 양구군 (-) 강원 인제군 (▼1등급) 강원 정선군 (▼1등급) 강원 화천군 (▲1등급) 경남 거창군 (▼2등급) 경북 울릉군 (▲1등급) 경북 울진군 (▼1등급) 경북 의성군 (▼1등급) 경북 청송군 (▼2등급) 울산 울주군 (-) 인천 강화군 (▼1등급) 전남 곡성군 (-) 전남 영광군 (▼2등급) 전남 영암군 (▼2등급) 전남 장흥군 (-) 전북 장수군 (▼1등급) 전북 진안군 (▼1등급) 충남 태안군 (-) 충북 단양군 (-) 충북 보은군 (▼1등급)	= 강원 영월군 (▲1등급) 강원 인제군 (-) 경기 양평군 (-) 경남 거창군 (▼1등급) 경남 고성군 (▼1등급) 경남 창녕군 (▼2등급) 경북 영양군 (▼1등급) 경북 의성군 (▼1등급) 경북 청송군 (▼2등급) 경북 칠곡군 (▼1등급) 전남 무안군 (▼1등급) 전남 영광군 (▼2등급) 전남 영암군 (▼2등급) 전남 장성군 (-) 전남 장흥군 (▲1등급) 전남 함평군 (▼2등급) 전남 해남군 (-) 전남 화순군 (▼1등급) 전북 무주군 (▼1등급) 충남 서천군 (▼1등급) 충남 태안군 (-)	+ 강원 고성군 (-) 강원 양구군 (▲1등급) 강원 홍천군 (▼1등급) 강원 화천군 (▲1등급) 경남 함양군 (▼2등급) 경북 봉화군 (-) 경북 울진군 (▼1등급) 경북 청송군 (▼2등급) 울산 울주군 (-) 전남 곡성군 (-) 전남 무안군 (▼1등급) 전남 영암군 (▼1등급) 전북 임실군 (▼1등급) 충남 태안군 (-) 충북 괴산군 (-) 충북 영동군 (▼1등급)	
5 년 간	강원 철원군 (▼2등급) 경남 함양군 (▼2등급) 경북 봉화군 (-) 경북 영양군 (▼1등급) 전남 무안군 (▼2등급) 전남 함평군 (▼3등급)	= 경북 봉화군 (▼1등급) 경북 울릉군 (-) 인천 강화군 (▼1등급) 전남 고흥군 (▼2등급) 충남 금산군 (▼1등급) 충북 단양군 (▼1등급)	+ 강원 정선군 (▼2등급) 강원 철원군 (▼1등급) 경북 영양군 (-) 전북 장수군 (▼3등급) 충북 보은군 (▼1등급)	

6. 기초자치단체Ⅲ (구) : 69개 기관

※ 기관명 가나다순, 괄호 안은 '23년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 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1 배점	대구 북구 (▲1등급) 서울 광진구 (-) 서울 구로구 (-)	부산 수영구 (▲1등급) 인천 부평구 (▲1등급)	대구 북구 (-) 대전 서구 (▲1등급) 서울 관악구 (▲2등급) 서울 광진구 (-) 서울 구로구 (▲1등급) 서울 양천구 (▲1등급)	
2 배점	대구 달서구 (▲1등급) 대구 동구 (-) 대구 수성구 (▲1등급) 대전 대덕구 (-) 대전 유성구 (▲1등급) 대전 중구 (▲1등급) 부산 동래구 (-) 부산 부산진구 (-) 부산 수영구 (-) 서울 강남구 (▼1등급) 서울 관악구 (▲1등급) 서울 성동구 (-) 서울 양천구 (▲1등급) 서울 영등포구 (▲1등급) 서울 종로구 (▲1등급) 인천 부평구 (▲1등급)	= 대구 달서구 (-) 대구 북구 (▲1등급) 대구 수성구 (-) 대전 대덕구 (-) 대전 동구 (▲1등급) 대전 유성구 (▲2등급) 대전 중구 (▲1등급) 부산 동래구 (-) 부산 부산진구 (-) 부산 북구 (-) 부산 영도구 (▼1등급) 서울 광진구 (▲1등급) 서울 구로구 (-) 서울 성동구 (▲1등급) 서울 종로구 (▲3등급) 울산 동구 (-) 울산 북구 (▲1등급) 울산 중구 (▲1등급) 인천 계양구 (▲1등급) 인천 남동구 (-) 인천 동구 (▲1등급)	+ 광주 동구 (-) 광주 북구 (-) 대구 달서구 (▲1등급) 대구 동구 (-) 대구 서구 (-) 대구 수성구 (▲2등급) 대구 중구 (▲1등급) 대전 유성구 (▲1등급) 부산 부산진구 (-) 서울 강남구 (▼1등급) 서울 성동구 (-) 서울 영등포구 (▲1등급) 서울 종로구 (-)	- 부패 실태 평가 (감점)
3 배점	광주 광산구 (▼1등급) 광주 남구 (▲1등급) 광주 동구 (▼1등급) 광주 북구 (▼1등급) 대구 서구 (-) 대구 중구 (-) 대전 동구 (-) 대전 서구 (▼1등급) 부산 강서구 (▲1등급) 부산 금정구 (-) 부산 남구 (-) 부산 사상구 (▲1등급) 부산 영도구 (▲1등급) 서울 강서구 (-) 서울 금천구 (-) 서울 동작구 (▼1등급) 서울 서초구 (▼1등급)	광주 광산구 (-) 광주 남구 (▲2등급) 광주 북구 (▲1등급) 대구 동구 (▼1등급) 부산 강서구 (-) 부산 금정구 (-) 부산 남구 (-) 부산 사상구 (-) 부산 사하구 (-) 부산 연제구 (-) 부산 중구 (-) 부산 해운대구 (▼2등급) 서울 강남구 (-) 서울 강서구 (-) 서울 관악구 (-) 서울 금천구 (-) 서울 동대문구 (-)	광주 광산구 (▼2등급) 광주 남구 (-) 대구 남구 (-) 대전 대덕구 (-) 대전 동구 (▲1등급) 대전 중구 (-) 부산 강서구 (▲2등급) 부산 금정구 (-) 부산 동래구 (-) 부산 서구 (▲2등급) 부산 수영구 (-) 서울 강동구 (-) 서울 강북구 (-) 서울 강서구 (▼1등급) 서울 금천구 (-) 서울 노원구 (-) 서울 도봉구 (-)	

구 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3 등급	서울 성북구 (-) 서울 송파구 (▼1등급) 서울 용산구 (-) 서울 은평구 (-) 서울 중랑구 (▼1등급) 울산 중구 (▲1등급) 인천 계양구 (▲1등급) 인천 남동구 (▼1등급) 인천 동구 (▲1등급) 인천 연수구 (▲1등급)	서울 동작구 (▼1등급) 서울 서대문구 (▲1등급) 서울 서초구 (▼1등급) 서울 송파구 (-) 서울 양천구 (▲1등급) 서울 영등포구 (-) 서울 용산구 (▼1등급) 서울 은평구 (▲1등급) 서울 중구 (-) 서울 중랑구 (▼1등급) 울산 남구 (▲1등급)	서울 동대문구 (▼1등급) 서울 동작구 (-) 서울 서초구 (▼1등급) 서울 성북구 (-) 서울 송파구 (▼1등급) 서울 용산구 (▼1등급) 서울 은평구 (▼1등급) 서울 중구 (▼1등급) 서울 중랑구 (▼1등급) 인천 남동구 (-) 인천 부평구 (▲1등급) 인천 서구 (▲1등급) 인천 연수구 (▲1등급)	부패 실태 평가 (감점)
4 등급	광주 서구 (▼2등급) 대구 남구 (▼1등급) 부산 동구 (-) 부산 북구 (▼1등급) 부산 사하구 (▼1등급) 부산 서구 (-) 부산 연제구 (▼1등급) 부산 중구 (-) 부산 해운대구 (▼2등급) 서울 강동구 (▼2등급) 서울 강북구 (▼1등급) 서울 노원구 (▼1등급) 서울 도봉구 (-) 서울 동대문구 (-) 서울 서대문구 (▼1등급) 서울 중구 (▼1등급) 울산 남구 (▲1등급) 울산 동구 (▼1등급) 울산 북구 (▼1등급) 인천 미추홀구 (▼1등급) 인천 서구 (-) 인천 중구 (-)	= 광주 동구 (▼1등급) 광주 서구 (▼1등급) 대구 남구 (▼1등급) 대구 서구 (-) 대구 중구 (▼2등급) 대전 서구 (▼1등급) 부산 동구 (-) 서울 강북구 (-) 서울 도봉구 (▲1등급) 서울 성북구 (▼1등급) 인천 서구 (▼1등급) 인천 연수구 (▼2등급)	광주 서구 (▼2등급) 부산 남구 (▼1등급) 부산 동구 (-) 부산 북구 (▼1등급) 부산 사상구 (-) 부산 연제구 (▼1등급) 부산 영도구 (▲1등급) 부산 중구 (-) 부산 해운대구 (▼1등급) 서울 마포구 (▼1등급) 서울 서대문구 (▼1등급) 울산 중구 (-) 인천 계양구 (-) 인천 동구 (-) 인천 중구 (▼1등급)	
5 등급	서울 마포구 (▼1등급)	부산 서구 (▼1등급) 서울 강동구 (▼2등급) 서울 노원구 (▼1등급) 서울 마포구 (-) 인천 미추홀구 (▼1등급) 인천 중구 (-)	부산 사하구 (▼1등급) 울산 남구 (-) 울산 동구 (▼1등급) 울산 북구 (▼2등급) 인천 미추홀구 (▼2등급)	

7. 시도교육청 : 17개 기관

※ 기관명 가나다순, 괄호 안은 '23년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 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1 등급	경남 교육청 (▲1등급)	대구 교육청 (▲2등급)	경남 교육청 (▲1등급)	부패 실태 평가 (감점)
2 등급	경기 교육청 (▲1등급) 경북 교육청 (▲2등급) 대구 교육청 (-) 대전 교육청 (▲1등급) 부산 교육청 (-)	경남 교육청 (▲1등급) 경북 교육청 (▲1등급) 대전 교육청 (▲2등급) 세종 교육청 (▲2등급)	경기 교육청 (-) 대전 교육청 (▲1등급) 부산 교육청 (▲1등급)	
3 등급	강원 교육청 (▲1등급) 서울 교육청 (-) 세종 교육청 (-) 전남 교육청 (▼1등급) 전북 교육청 (▲1등급) 제주 교육청 (▼1등급) 충남 교육청 (-)	강원 교육청 (▲1등급) 경기 교육청 (▲1등급) 부산 교육청 (▼2등급) 서울 교육청 (-) 전남 교육청 (-) 제주 교육청 (▼1등급) 충남 교육청 (▼1등급)	경북 교육청 (-) 대구 교육청 (▼1등급) 전남 교육청 (▼1등급) 전북 교육청 (▲1등급) 제주 교육청 (-) 충남 교육청 (▲1등급)	
4 등급	광주 교육청 (-) 울산 교육청 (▼2등급) 인천 교육청 (-) 충북 교육청 (▼2등급)	울산 교육청 (▼2등급) 전북 교육청 (-) 충북 교육청 (▼2등급)	강원 교육청 (▲1등급) 광주 교육청 (-) 서울 교육청 (▼1등급) 세종 교육청 (▼2등급) 울산 교육청 (▼2등급) 인천 교육청 (▼1등급) 충북 교육청 (-)	
5 등급	-	광주 교육청 (▼1등급) 인천 교육청 (▼2등급)	-	

8. 공직유관단체 I (공기업) : 32개 기관

※ 기관명 가나다순, 괄호 안은 '23년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1 등급	한국수력원자력 (▲1등급) 한국조폐공사 (▲1등급)	한국수력원자력 (-)	-	
2 등급	강원랜드 (▲1등급)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광해광업공단 (▲1등급) 한국남부발전 (-) 한국마사회 (-) 한국부동산원 (-) 한국석유공사 (▲1등급) 한국중부발전 (-)	대한석탄공사 (▲2등급) 한국광해광업공단 (▲1등급) 한국남동발전 (-) 한국남부발전 (-) 한국부동산원 (-) 한국석유공사 (▲2등급) 한국조폐공사 (-) 한국중부발전 (-)	강원랜드 (▼1등급)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가스공사 (▲2등급) 한국남부발전 (-) 한국마사회 (-) 한국서부발전 (▲1등급) 한국수력원자력 (▲1등급) 한국수자원공사 (▲1등급) 한국조폐공사 (-) 한국중부발전 (-) 한전KPS (▲3등급)	
3 등급	에스알 (▲1등급) 한국가스공사 (▲1등급) 한국공항공사 (-) 한국남동발전 (▼1등급) 한국동서발전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한국서부발전 (▼1등급) 한국수자원공사 (▲1등급) 한국전력공사 (▼1등급) 한국지역난방공사 (-) 한전KDN (-) 한전KPS (▲1등급)	강원랜드 (▲2등급) 그랜드코리아레저 (-) 에스알 (▲1등급) 주택도시보증공사 (-) 한국가스공사 (▲1등급) 한국가스기술공사 (-) 한국공항공사 (-) 한국도로공사 (▲1등급) 한국동서발전 (-) 한국마사회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등급) 한국서부발전 (▼1등급)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전력공사 (-) 한국지역난방공사 (-) 한전KDN (-) 한전KPS (-)	그랜드코리아레저 (-) 에스알 (▲2등급) 한국가스기술공사 (-) 한국광해광업공단 (▼1등급) 한국남동발전 (-) 한국동서발전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한국석유공사 (▼1등급) 한국전력공사 (▼1등급) 한국지역난방공사 (▲1등급) 해양환경공단 (▼1등급)	부패 실태 평가 (감점)
4 등급	그랜드코리아레저 (▼1등급) 대한석탄공사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주택도시보증공사 (-) 한국가스기술공사 (▼1등급) 한국도로공사 (-) 한국전력기술 (▼1등급) 한국철도공사 (▼1등급) 한국토지주택공사 (-) 해양환경공단 (▼1등급)	인천국제공항공사 (▼2등급) 한국전력기술 (▼2등급) 한국철도공사 (▼1등급) 한국토지주택공사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등급) 주택도시보증공사 (-) 한국공항공사 (▼1등급) 한국도로공사 (▼1등급) 한국부동산원 (▼1등급) 한국전력기술 (-) 한국철도공사 (▼1등급) 한전KDN (▼1등급)	
5 등급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해양환경공단 (-)	대한석탄공사 (▼1등급) 한국토지주택공사 (-)	

9. 공직유관단체Ⅱ (준정부기관) : 55개 기관

※ 기관명 가나다순, 괄호 안은 '23년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1 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1등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 축산물품질평가원 (▲3등급)	
2 등급	공무원연금공단 (▲1등급) 국민연금공단 (-) 국토안전관리원 (▲1등급) 근로복지공단 (▲1등급) 기술보증기금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등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신용보증기금 (-) 한국관광공사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무역보험공사 (▲1등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등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등급)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등급)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등급) 한국장학재단 (-) 한국주택금융공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공무원연금공단 (▲1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 (-) 국토안전관리원 (-) 근로복지공단 (▲1등급) 기술보증기금 (▼1등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등급) 신용보증기금 (-) 예금보험공사 (-) 우체국금융개발원 (▲1등급) 한국관광공사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국토정보공사 (-) 한국무역보험공사 (▼1등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등급) 한국석유관리원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등급) 한국장학재단 (-) 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환경공단 (▲2등급)	공무원연금공단 (▲2등급) 국민연금공단 (-) 국토안전관리원 (▲2등급) 근로복지공단 (▲1등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한국관광공사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국토정보공사 (-) 한국무역보험공사 (▲3등급)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등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등급) 한국연구재단 (▲1등급) 한국전기안전공사 (▲1등급) 한국주택금융공사 (▼1등급)	부패 실태 평가 (감점)
3 등급	국립생태원 (▲1등급) 예금보험공사 (▼1등급) 우체국금융개발원 (-) 우체국물류지원단 (▲1등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등급) 축산물품질평가원 (▼1등급)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국토정보공사 (▼1등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도로교통공단 (▼1등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등급) 한국석유관리원 (▼1등급) 한국소비자원 (▲1등급) 한국연구재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등급) 한국전력거래소 (▼1등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등급) 한국환경공단 (▲1등급)	국립생태원 (▲1등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우체국물류지원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등급)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등급) 한국도로교통공단 (▼1등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등급) 한국에너지공단 (▲1등급) 한국연구재단 (-)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등급) 한국전력거래소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등급)	국립공원공단 (-) 신용보증기금 (▼1등급) 우체국물류지원단 (▲1등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등급) 한국가스안전공사 (▲1등급) 한국국제협력단 (▼1등급) 한국도로교통공단 (▼1등급)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등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등급)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소비자원 (▲1등급)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한국에너지공단 (▲1등급)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등급) 한국장학재단 (-) 한국전력거래소 (▼1등급)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등급) 한국환경공단 (-)	

구 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4 년 간	국가철도공단 (-) 국립공원공단 (▼1등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등급)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한국산업단지공단 (-) 한국산업인력공단 (▼1등급)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인터넷진흥원 (▼1등급) 한국자산관리공사 (▼1등급) 한국전기안전공사 (▼1등급)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등급)	국가철도공단 (-) 국립공원공단 (-) 축산물품질평가원 (▼2등급)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농어촌공사 (▲1등급) 한국산림복지진흥원 (▲1등급) 한국산업단지공단 (-) 한국소비자원 (▲1등급)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등급)	국립생태원 (-) 기술보증기금 (▼2등급) 예금보험공사 (▼1등급) 우체국금융개발원 (▼1등급)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2등급)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등급)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등급) 한국산업단지공단 (▼1등급) 한국석유관리원 (▼1등급) 한국인터넷진흥원 (▼1등급) 한국자산관리공사 (▼1등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등급)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등급)	부패 실태 평가 (감점)
5 년 간	-	한국국제협력단 (▼1등급)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등급)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등급) 한국산업인력공단 (▼2등급) 한국전기안전공사 (▼2등급)	국가철도공단 (▼2등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등급) 한국고용정보원 (▼1등급)	

10. 공직유관단체Ⅲ (중점) : 33개 기관

※ 기관명 가나다순, 괄호 안은 '23년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1 등급	-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1등급)	
2 등급	국방기술품질원 (▲1등급) 대한법률구조공단 (▲2등급) 대한적십자사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등급) 중소기업은행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한국도로공사서비스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한국은행 (-) 한국콘텐츠진흥원 (▲2등급) 한전원자력연료 (▼1등급)	국방기술품질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적십자사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등급) 중소기업은행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한국거래소 (▲2등급) 한국도로공사서비스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한국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은행 (▼1등급) 한전원자력연료 (▼1등급)	대한법률구조공단 (▲3등급) 대한적십자사 (▼1등급) 한국도로공사서비스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한국콘텐츠진흥원 (▲2등급) 한전원자력연료 (-)	
3 등급	금융감독원 (▼1등급) 산림조합중앙회 (▼1등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한국거래소 (▲1등급) 한국산업은행 (▼1등급) 한국언론진흥재단 (▲1등급) 한국예탁결제원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1등급)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등급)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등급) 한국환경보전원 (▲1등급)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등급) 금융감독원 (▼1등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등급) 한국언론진흥재단 (▲1등급) 한국예탁결제원 (▼1등급) 한국우편사업진흥원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등급)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등급) 한국콘텐츠진흥원 (▲1등급) 한국특허기술진흥원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등급) 한국환경보전원 (-)	국방기술품질원 (-) 금융감독원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1등급) 산림조합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등급) 중소기업은행 (-) 창업진흥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한국산업은행 (-) 한국언론진흥재단 (▲2등급) 한국예탁결제원 (▲1등급) 한국우편사업진흥원 (▼1등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등급) 한국은행 (-) 한국체육산업개발 (▲2등급)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한국환경보전원 (▲1등급)	부패 실태 평가 (감점)
4 등급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등급) 주택관리공단 (▼1등급) 창업진흥원 (-) 한국수출입은행 (▼2등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등급) 한국체육산업개발 (▲1등급) 한국특허기술진흥원 (▼1등급)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1등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등급) 산림조합중앙회 (▼1등급) 주택관리공단 (▼1등급) 창업진흥원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등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등급) 대한체육회 (-) 주택관리공단 (▼1등급) 한국거래소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구 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5 년 평 가	대한체육회 (▼1등급)	대한체육회 (-) 한국체육산업개발 (▼2등급)	한국수출입은행 (▼3등급) 한국특허기술진흥원 (▼1등급)	부패 실태 평가 (감점)

=

+

-

11. 공직유관단체Ⅳ (지방공사공단) : 34개 기관

※ 기관명 가나다순, 괄호 안은 '23년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1 비교	-	대전교통공사 (▲1등급) 인천교통공사 (▲2등급)	-	
2 비교	강원개발공사 (▲2등급) 경상북도개발공사 (▼1등급) 광주교통공사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2등급) 대구교통공사 (-) 대전도시공사 (▲1등급) 부산교통공사 (▼1등급) 서울교통공사 (-) 서울시설공단 (-) 서울주택도시공사 (▲1등급) 울산시설공단 (-) 인천교통공사 (▲1등급) 전남개발공사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경상북도개발공사 (▼1등급) 광주교통공사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2등급) 부산교통공사 (-) 서울시설공단 (▲1등급) 수원도시공사 (-) 울산시설공단 (▲1등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등급)	경상북도개발공사 (-) 대구교통공사 (-) 대전도시공사 (▲1등급) 부산교통공사 (-) 부산도시공사 (-) 서울교통공사 (-) 서울시설공단 (-) 서울주택도시공사 (▼1등급) 전남개발공사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3 비교	경기주택도시공사 (▲1등급) 경남개발공사 (▲1등급) 남양주도시공사 (▲1등급) 대구도시개발공사 (▲1등급)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 대전교통공사 (▼1등급) 부산도시공사 (▼1등급) 부산시설공단 (▲1등급)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1등급) 수원도시공사 (▲1등급) 인천시설공단 (-) 전북개발공사 (-) 충청남도개발공사 (▼1등급)	강원개발공사 (▼1등급) 남양주도시공사 (▲1등급) 대구교통공사 (▼1등급) 대전도시공사 (-) 부산도시공사 (-) 서울교통공사 (▼1등급) 서울주택도시공사 (▲1등급)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2등급) 인천시설공단 (-) 전남개발공사 (-) 전북개발공사 (-) 충북개발공사 (▲2등급) 충청남도개발공사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2등급) 강원개발공사 (▲2등급) 경기주택도시공사 (-) 경남개발공사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1등급) 광주교통공사 (▼1등급) 남양주도시공사 (▲1등급)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1등급) 대구도시개발공사 (-)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1등급) 부산시설공단 (▲1등급)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1등급) 울산시설공단 (▼1등급) 인천교통공사 (-) 인천도시공사 (▲1등급) 전북개발공사 (-) 충청남도개발공사 (▼1등급) 화성도시공사 (▲1등급)	부패 실태 평가 (감점)
4 비교	강남구도시관리공단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 세종도시교통공사 (▼1등급) 울산광역시도시공사 (▼1등급) 인천도시공사 (-) 화성도시공사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1등급) 경기주택도시공사 (▲1등급) 경남개발공사 (-) 대구도시개발공사 (▲1등급)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 부산시설공단 (▼1등급) 울산광역시도시공사 (▼2등급) 화성도시공사 (▼1등급)	대전교통공사 (-) 세종도시교통공사 (▼1등급) 수원도시공사 (▲1등급) 울산광역시도시공사 (-) 인천시설공단 (▼1등급)	

구 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5 년 평 가	충북개발공사 (▼1등급)	광주광역시도시공사 (▼1등급) 세종도시교통공사 (▼2등급) 인천도시공사 (-)	충북개발공사 (▼1등급)	부패 실태 평가 (감점)

=

+

-